

연구 2007-09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김계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오늘날 교육이라는 주제를 떼놓고 개인의 삶과 국가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교육은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지적·정서적 측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교육은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동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밀한 인구나 좁은 국토라는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 부작용으로 사교육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공교육을 무력화시킬 지경에 이르렀으며, 교육에 대한 높은 민간 부담률과 고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격차의 확대와 교육불평등을 둘러싼 논쟁 또한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계각층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본원에서 교육이라는 주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이 아동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교육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제하에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교육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보고서는 교육평등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기 보다는 교육의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 나타나는 교육 성취의 격차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아야 할 듯싶다. 교육의 목표가 지나치게 기능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데 치우쳐 있는 현실에서 본 보고서가 교육의 평등과 사회적 평등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새로운 목표와 정책방향을 찾는데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여유진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외에서 동아대학교 김수정 교수,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 원내에서 김계연 선임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내의 김미곤 연구위원, 최현수 부연구위원과 원외의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 직업능력개발원의 오호영 박사, 평택대학교 손병돈 교수에게도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정리를 해주신 오지현 연구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 분야의 이론적·정책적 측면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학생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향후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1
요 약	13
제1장 서 론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1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42
제2장 이론적 배경	45
제1절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45
제2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확대 과정과 결과	63
제3절 분석틀: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88
제3장 교육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 1985년~2006년 도시가계조사 분석 91	
제1절 연구문제	91
제2절 자료 및 분석변수	97
제3절 교육수준별 빈곤지표의 변화(1985-2006)	100
제4절 교육의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	108
제5절 소 결	122

제4장 교육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985~2006년 도시가계조사 분석	126
제1절 연구문제	126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28
제3절 분석결과	134
제4절 소결	165
제5장 가족배경과 교육성취: 교육고용패널 자료분석	167
제1절 연구문제	167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71
제3절 분석결과	177
제4절 소결	188
제6장 교육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분석	191
제1절 연구문제	191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93
제3절 분석결과	199
제4절 소결	219
제7장 결론 및 함의	22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21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224
참고문헌	227

표 목 차

〈표 2- 1〉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 접근방법, 하위 이론의 관계	53
〈표 2- 2〉 연도별 초등학교 취학률	65
〈표 2- 3〉 진학률 : 1970~2006년	70
〈표 2- 4〉 취학률 : 1980~2005년	71
〈표 2- 5〉 OECD 국가들의 학위 취득에 소요된 공식적인 평균 교육연수	72
〈표 2- 6〉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진입연도별 고등교육 성취(2004)	73
〈표 2- 7〉 학력별 평균임금과 경력별 임금	76
〈표 2- 8〉 사교육 참여 비율	79
〈표 2- 9〉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교육지출	81
〈표 2-10〉 OECD 국가들의 국공립대학 수업료와 장학금	83
〈표 2-11〉 OECD 국가들의 사립대학 수업료와 장학금	84
〈표 2-12〉 자녀 1인당 월평균교육비 지출액(2004년)	86
〈표 3- 1〉 교육수준별 빈곤율, 빈곤갭, 빈곤심도	102
〈표 3- 2〉 성, 연령, 지역별 빈곤율 변화	105
〈표 3- 3〉 교육수준별 성, 연령, 지역의 빈곤격차	106
〈표 3- 4〉 빈곤율 변화의 분해: 교육변수의 효과	111
〈표 3- 5〉 교육수준별 분포효과 및 불평등 효과의 변화(1985년-2006년)	112
〈표 3- 6〉 독립변수의 분포 및 평균 (1985-2006)	114
〈표 3- 8〉 연도별 로짓분석(1985년~2006년)	115
〈표 3- 7〉 연도별 빈곤율차이의 분해	120
〈표 4- 1〉 도시가계조사 각년도의 가구주 특성: 기술통계 결과	129
〈표 4- 2〉 주요 변수와 그 정의	131

〈표 4-3〉 연도별·연령대별 불평등지표 변화 추이	135
〈표 4-4〉 연도별·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가구주의 학력 변화 추이 ..	139
〈표 4-5〉 연도별·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일차소득의 변화 추이 ..	142
〈표 4-6〉 회귀분석 결과 교육변수의 베타값	145
〈표 4-7〉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전체)	150
〈표 4-8〉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전체)	150
〈표 4-9〉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20대)	153
〈표 4-10〉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20대)	153
〈표 4-11〉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30대)	156
〈표 4-12〉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30대)	156
〈표 4-13〉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40대)	159
〈표 4-14〉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40대)	159
〈표 4-15〉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50대)	162
〈표 4-16〉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50대)	162
〈표 5-1〉 주요 변수와 정의, 기술통계	174
〈표 5-2〉 소득수준별 교육성취	179
〈표 5-3〉 가구소득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에 미치는 영향	182
〈표 5-4〉 가족배경과 청소년 특성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183
〈표 5-5〉 가구소득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	185
〈표 5-6〉 가구소득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 추가분석	187
〈표 6-1〉 변수명과 변수의 정의	198
〈표 6-2〉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200
〈표 6-3〉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205
〈표 6-4〉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210
〈표 6-5〉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217

그림 목 차

[그림 2-1] 블라우와 던컨의 모형	59
[그림 2-2] 보울즈와 진티스의 모형	62
[그림 2-3] 분석틀: 갈등론적 관점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관계 · 90	
[그림 3-1] 교육수준별 상대빈곤율 변화(1985-2006)	103
[그림 3-2] 85년 20대, 30대의 교육수준별 빈곤위험 추이(단위:%) ···	107
[그림 3-3] 빈곤율 변화 : 분포효과와 불평등 효과(1985-2006)	111
[그림 4-1] 연도별 · 연령대별 불평등지표(GE(0)) 변화 추이	136
[그림 4-2] 연도별 · 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가구주의 학력 변화 추이 ···	140
[그림 4-3] 연도별 · 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일차소득의 변화 추이	143
[그림 4-4] 학력이 임금근로자가구의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Beta값) 추이	146
[그림 4-5]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전체)	151
[그림 4-6]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20대)	154
[그림 4-7]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30대)	157
[그림 4-8]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40대)	160
[그림 4-9]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50대)	163
[그림 6-1] 경로분석 모형	196
[그림 6-2]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203
[그림 6-3]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	208
[그림 6-4] 아버지 직업과 자녀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213
[그림 6-5] 경로분석 결과(표준화된 계수)	214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inequality and transmission of povert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ducation and poverty (inequality) in South Kore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impact of school achievement on labour market performance and poverty status and inverse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S) on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To analyse these, we use various methods as poverty rate decomposition, Generalized Entropy decomposition, logit regression,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the authors found that in personal perspective, higher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scaping from poverty and yielding high economic returns. But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tends to increase poverty probabilities of relatively lower educated people. We also found that the correspondence of socio-economic statu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s firmly identified especially in the highest SES class and the lowest SES class. Additionally,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plays an important role on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more affirmative actions are needed in favor of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요 약

I. 서 론

□ 연구의 목적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교육성취가 노동시장 성과와 빈곤지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살펴보고,
-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 자녀의 교육성취 →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소득)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 불평등구조와 빈곤의 대물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교육과 관련된 사회정책 수립에 함의를 얻고자 함.

□ 보고서의 내용

-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교육 불평등의 개념적·철학적 정의와 범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다룸.
 -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적 결과들을 기존 연구들과 통계들을 활용하여 분석함.
- 제3장과 제4장에서는 1985~2006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해방법으로 교육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효과와 교육이 소득불평등

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 제5장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하여 가족의 경제·사회적 배경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제6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응분석과 경로 분석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의 경향을 분석함.

□ 기대효과 및 한계

- 본 연구를 통해,
 - 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 특히 교육이 빈곤, 불평등, 사회이동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관련 이론에 상당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서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의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함.
- 본 연구의 한계로는,
 - 교육 평등과 관련해서 교육 제도의 내용이나 교육 컨텍스트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석이나 결과의 해석이 제한됨.
 - 교육변수의 조작화, 인지능력 변수의 부재 등 능력의 한계와 자료의 한계 등으로 분석상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결과를 과대 혹은 과소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자 하였음.

II. 이론적 배경

1.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 교육 불평등의 개념과 범위

- 교육 평등에서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함.
- 교육기회의 평등관은 능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교육기회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등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능력에 기초한 평등관이라 할 수 있음
 - 교육기회의 평등관에 머문 관점은 노직(Nozick)과 같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하며, 출발선상에서의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임.
- 교육조건의 평등관은 교육기회 뿐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 교육의 여건과 과정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관점.
 - 이러한 관점은 롤즈(Rawls)나 드워킨(Dworkin)과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선호에 의한 차이, 즉 개인의 책임(responsibility)에 의한 결과적 차이는 평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교육결과의 평등관은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
 - 일종의 역차별적 평등관이며 보상적 평등관이며, 롤즈(Rawls)의

‘최대최소원칙’을 반영하지만, 더 나아가 센(Sen)과 맑시스트 계열의 로머(Roemer) 등의 평등관을 반영함.

- 산업화 초기에는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줄이는 데 주력하였지만,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취학기회의 격차가 크게 해소되면서,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과 같은 제반 교육여건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에는 교육결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가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해서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써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기 때문.
 - 고전적 사회학의 세 가지 조류를 대표하는 뒤르케임(Emile Durkheim), 마르크스(Karl marx) 그리고 베버(Max Weber)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음.
- 뒤르케임의 기능론적 관점은 교육을 생업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의 교육, 규범의 내면화와 사회화, 사회계층적 지위로의 배분기제로 봄.
 -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투자행위, 즉 인적자본의 중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인적자본의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마르크스의 갈등론적 관점은 교육을 계급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기구라는 측면에서 바라봄.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본주의적 질서

를 재생산하는데 있다고 보고, 교육은 평등화를 가져오는 매개체가 아니라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

- 베버의 경쟁론적 관점은 교육의 지위표출기능에 주목하여 신분적 지위로 보기도 하고 '시장능력'으로서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함(남춘호 2004:54).
 - 교육은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를 가려내는 선별도구(선별이론)이거나, 노동자의 훈련가능성(trainability)을 증명해 주는 역할(직무경쟁이론)을 하며, 지배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객관적이며 타당한 기준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이나 개인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조건을 계속 강화한다고 판단.

2.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확대 과정과 결과

□ 교육 보편화와 고등교육 확대의 과정

-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규 교육은 일반국민에게 급속히 확대.
 - 초등학교 취학율은 1945년 48.0%에서 1950년 81.8%로 상승, 중학교 진학률은 1950년 26.1%에서 1955년 47.1%로 상승.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실시
 -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평준화 정책, 1973년 6월 28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
 -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불만족한 공교육으로 인해 과외수업이 증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부

정적 평가도 존재.

- 1981년에는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설립자율화와 정원자율화의 결과로 고등교육이 크게 확대됨.
 -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1985년 36.4%, 2000년 68.0%, 2006년 82.1%로 급격히 증가.
-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단기간 내에 고등교육자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성취자 비율은 1979-79년과 1995-1999년 사이에 32.8%p 증가, 2위(아일랜드)와의 차이가 13.7%p
 -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물론이고, 두 배 이상 높은 미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보다도 청년층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고등교육 확대의 부수효과(side effect)

- 대학교육의 임금프리미엄 하락
 - 대학 졸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프리미엄이 저하하고, 고용 불일치 문제가 대두됨.
 - 학력별 임금격차는 40대>50대>30대>20대 순으로 학력별 임금격차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1980년대 고졸자 임금수준이 대졸자의 40% 정도였던데 비해, 1990년대 후반에는 50% 후반정도까지 높아짐(남춘호 2004:83)
 - 또한, 청년 일자리 총수는 1996년 542만개에서 2003년 461만개로 7년 사이 81만여 개가 감소하였으며,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6년 154만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여 개가 감소함(정인수·김기민 2005).

-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
 - 고등교육 팽창은 학연, 지연 등 연줄망 중심의 사회구조와 맞물려 소위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선별적 프리미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을 가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 그 결과 조기유학 또는 소위 명문대 입학에 둘러싼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
 - 현대경제연구소(2007)의 추산에 의하면 국내 사교육시장 총규모는 최대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인 31조원보다도 많은 것임.
- 형식적 기회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의 강화
 -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OECD 국가 중 공교육에 대한 사부담율이 가장 높은 현실에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따름.
 - 우리나라의 공교육 투자(GDP 대비 7.2%) 중 약 39%(GDP의 2.8%)를 민간 부문(주로 가계)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부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부담(GDP의 2.3%) 중 약 78%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음.
 - 치열한 입시경쟁과 그 과정에서의 사교육비 팽창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음.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41만 1천원으로 초졸 이하 가구주 가구의 15만 3천원보다 2.7배 더 높으며, 고졸 가구주 가구의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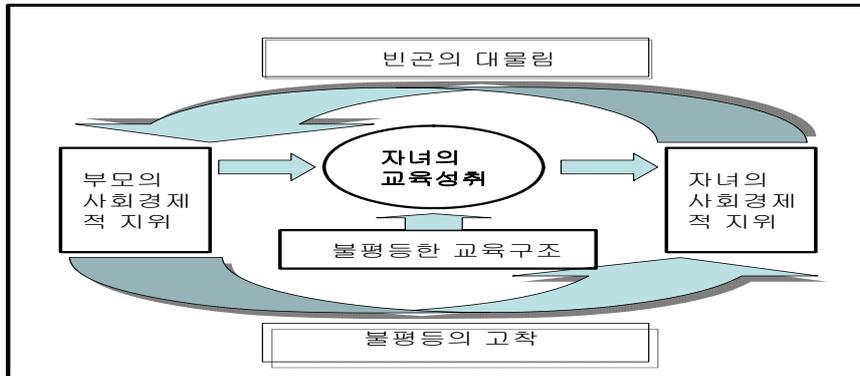
만 4천원보다도 1.6배 더 높음.

-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사교육비 차이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과 어우러져 실질적인 학력격차로 나타날 수 있음.
- 결국, 한국교육재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의 민간 부담 및 사교육비의 불평등은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임(김규 1993).

3. 분석틀: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3] 과 같음.

[그림 2-3] 분석틀: 갈등론적 관점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관계



Ⅲ. 교육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문제 및 분석변수

□ 연구문제

- 첫째,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둘째, 성, 연령, (거주) 지역은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조화하는 3대 통제변수이다. 그렇다면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셋째,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포효과와 계수효과로 나누어 본다면, 지난 20년동안 분포 및 계수효과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자료 및 분석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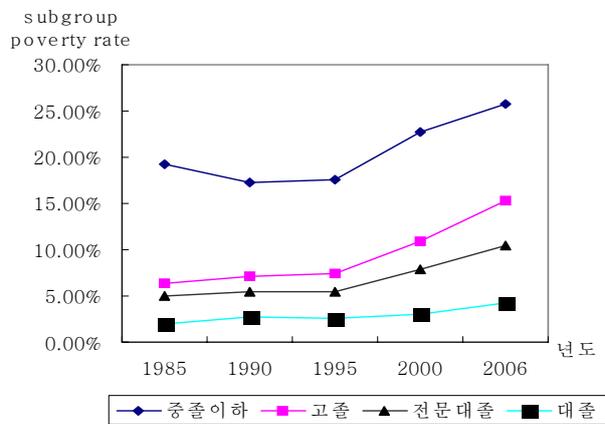
- 분석자료: 1985년~2006년 『도시가계조사』
- 분석 변수
 - 빈곤선(빈곤여부): 일차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선
 - 독립변수: 교육수준
 - 통제변수: 성, 연령, 지역, 취업지위, 부양가족수

2. 교육수준별 빈곤율의 변화(1985-2006)

□ 교육수준별 빈곤율

- 전체빈곤율은 1995년까지 서서히 줄어들고,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 95년까지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간의 빈곤율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압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95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육집단에서 빈곤율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간격도 확대.
- 중졸이하 집단은 1995년까지 빈곤율이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크게 증가(2006년 중졸학력자의 1/4이 빈곤층).

[그림 3-1] 교육수준별 상대빈곤율 변화(1985-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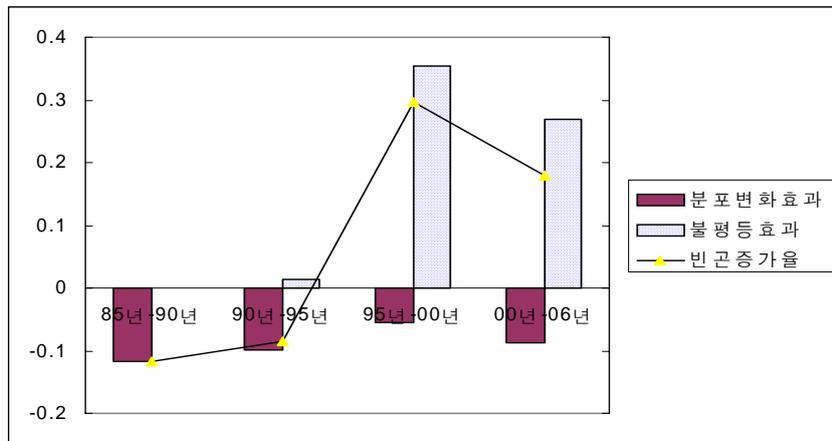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빈곤율

- 85년 20대의 경우, 중졸학력은 빈곤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학력집단의 경우 95년에는 감소했다가 06년에는 다시 증가

- 경제위기 전후 차이를 보면, 각 교육집단에서 빈곤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위험계수효과가 변화율의 110% 이상 차지.

[그림 3-3] 빈곤율 변화 : 분포효과와 불평등 효과(1985-2006)



□ 로짓분해 결과

- 성, 연령, 지역등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로짓분해) 즉, 통제후 분해결과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고학력화는 꾸준히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효과가 분포효과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분포의 빈곤개선효과는 궁극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못함.
- 분석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분포 및 계수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 전시기에 비해 1995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고학력화로 인한 빈곤 개선효과는 감소함.

IV. 교육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문제 및 분석자료

□ 연구문제

- 첫째,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둘째, 교육수준은 가구의 일차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가?
- 셋째,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때, 1980년대 이후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은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자료 및 분석 방법: 제3장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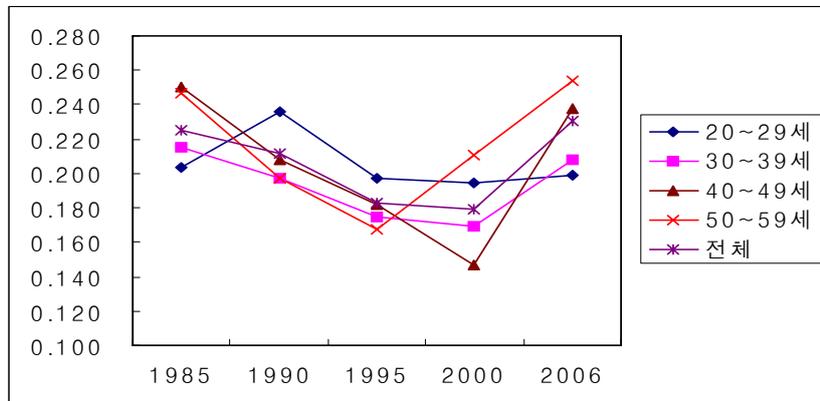
2. 분석결과

□ 불평등지표의 변화 추이

- 전체적인 불평등도의 경우 $p/90/p10$, 지니계수, $GE(0)$, Atkinson(1) 모두 'U자 형'을 나타냄.
 - 1980년대 중반 이래 감소하던 불평등도가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6년의 경우 오히려 1985년에 비해 불평등도가 더 높아짐.
- 연령대별로 볼 때, 불평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즉 노동시장 퇴거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30대 가구주의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이가 전체 불평등도의 변화 추이와 가장 유사.

- 20대 가구주의 소득 불평등도는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 40대와 50대 가구주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

[그림 4-1] 연도별·연령대별 불평등지표(GE(0))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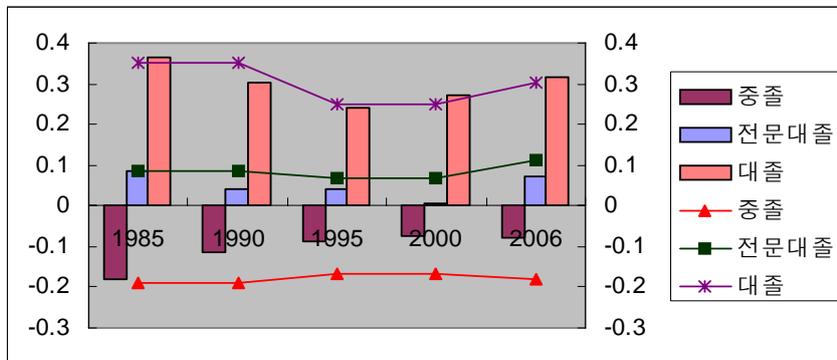
□ 회귀분석 결과

- 대졸과 전문대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기준변수인 고졸 가구주 가구에 비해 높은 소득을 나타내며, 중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고졸 가구주 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을 나타냄.
 -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약간 줄어들다가 이후 2006년까지 약간 증가.
- 회귀모형의 설명력, 즉 조정된 R^2 값(Adjusted R^2)의 변화
 - 우선 교육변수만을 투입한 경우, 1985~2006년 동안 조정된 R^2 값은 0.2147→0.1246→0.0788→0.0880→0.1149로 2000년까지 설명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2006년 다시 약간 높아짐.
 - 교육수준과 함께 가구주의 성, 연령, 피부양자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경우, 조정된 R^2 의 값은 0.2670→0.2196→0.2310→0.2579

→0.2733으로 1990년 다소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985년보다 더 높아짐.

-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교육수준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떨어진 반면, 성, 연령, 직종 등 다른 영향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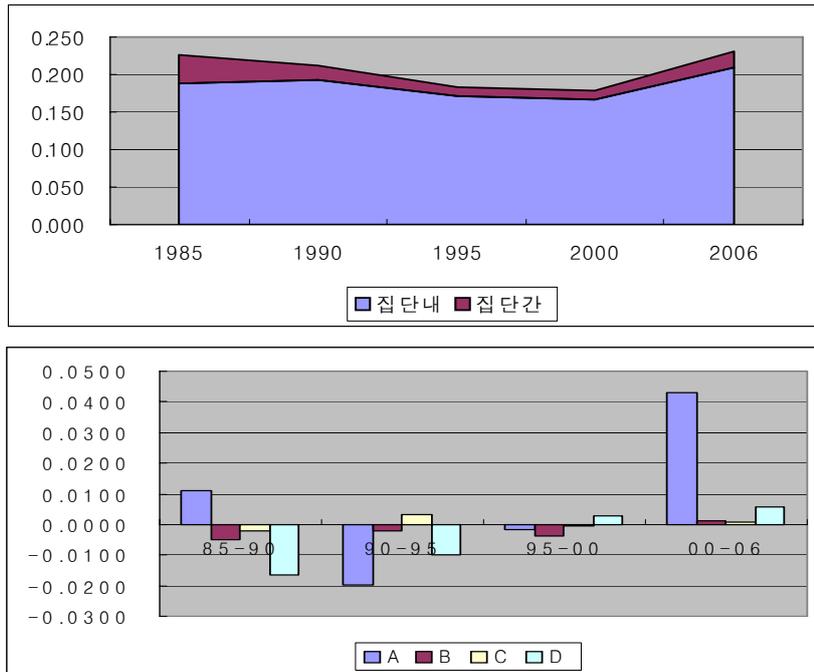
[그림 4-4] 학력이 임금근로자가구의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Beta값) 추이



□ 엔트로피분해 결과

- 학력집단내 불평등(83~93%)이 학력집단간 불평등(7~17%)보다 소득 불평등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 들어서는 학력간 불평등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음.
- 전체적으로 볼 때, 학력집단간 구성의 변화, 즉 고학력화 현상은 2000년까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2006년에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남(그림 4-5의 B+C).
- 2006년의 경우 학력간 소득격차, 학력내 소득격차 모두 소득불평등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



V.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문제 및 분석 변수

□ 연구 문제

- 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 가족소득과 빈곤은 아동의 교육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분석 자료: 2004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 분석대상: 한국교육고용패널 표본 중 2004년 일반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2000명의 학생

□ 분석 변수

- 종속변수: 교육성취(2005년 수능표준점수 평균, 2005년 대학진학 여부, 2005년 대학진학유형)
- 독립변수: 가구소득
- 통제변수: 가구규모, 여성보호자 교육수준, 가족구조, 청소년 특성, 재학고교 특성, 사교육비, 청소년 건강상태, 재학 중 근로경험, 가정생활 만족도, 보호자의 교육관여 및 기대

2. 분석결과

□ 기초분석 결과

- 수능 평균점수의 분포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체로는 고소득가구의 청소년이 높은 수능점수를 얻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양상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음.
- 대학진학 비율은 육구소득비가 3 이상인 고소득 청소년에서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빈곤층 청소년이 그 다음으로 높은 74.6%를 보임.
 -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비율에서만 교육성취의 소득계층별 분포가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되는 양상을 보임.

〈표 5-2〉 소득수준 별 교육성취

육구소득비	전체 사례수	수능 평균점수 (사례수)	대학입학 % (사례수)	4년제 대학 % (사례수)
0~1	585	95.71 (224)	74.67 (496)	42.42 (495)
1~2	1223	93.86 (573)	72.65 (1063)	44.45 (1063)
2~3	1046	98.99 (571)	73.27 (916)	49.31 (916)
3~	1025	97.68 (682)	75.87 (899)	53.47 (899)
소득정보 없음		100.23 (107)	78.18 (104)	60.72 (104)
계	3879	93.24 (2157)	74.25 (3478)	48.93 (3477)

□ 분석모형의 추정결과

- 수능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추정결과, 월평균 소득이 수능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빈곤 여부는 수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음. 육구소득비가 1배 증가할 경우 수능 평균점수가 0.4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은 대학입학여부나 전문대와 4년제대학을 구분한 대학진학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매개변수로서 청소년 재학 고교의 소재 지역, 재학고교의 계열, 재학고교의 학부모 경제적 수준의 세 가지 학교특성 변수 모두 수능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 청소년에 비해 광역시 등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1.5점 높은 수능점수를 얻고 농어촌의 청소년들은 2.5점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계 고교의 청소년에 비해 실업계 등 비일반계 고교의 청소년은 18.5점 낮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학교(경제수준=1)의 청소년과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학교(경제수준=5)의 청소년은 10점 정도의 수능 평균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학교특성 변수의 추가로 모형의 설명력이 0.02에서 0.21로 크게 증가하였음.

VI. 교육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문제 및 분석 변수

연구문제

-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대물림되는가?
- 교육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조사) 원자료

- 분석대상: 20세~59세 남성 가구주(3,557명)

분석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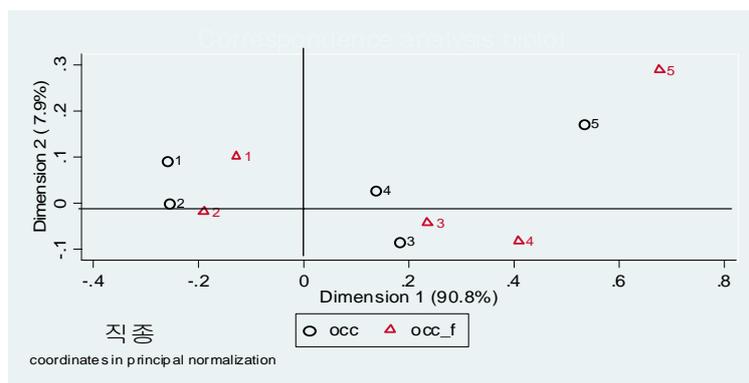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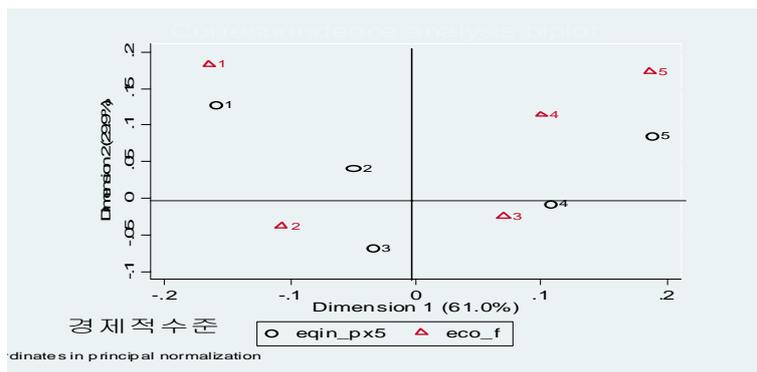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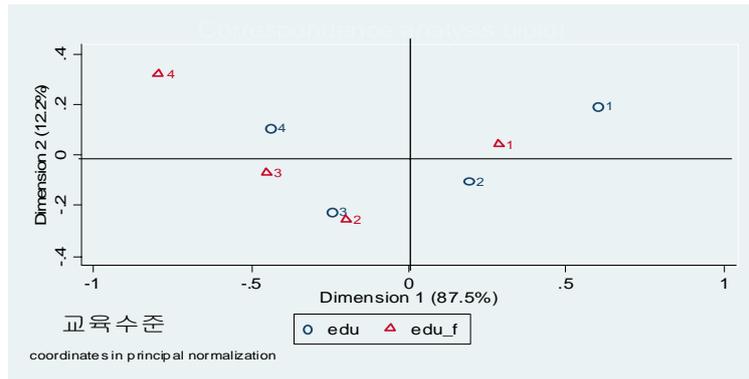
- 종속변수: 자녀의 소득(균등화된 일차소득)
- 독립변수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직종
 - 자녀의 교육수준

2. 분석결과

□ 대응분석 결과

- 대응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일치도가 뚜렷하게 나타남.
 -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직종의 양극단 간의 방향성과 거리가 매우 멀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양극단을 가로질러 지위상승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예를 들면, 초졸이하 아버지를 둔 자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성취하기 어렵고, 최하위계층 아버지를 둔 자녀가 최상위계층이 되기 어려우며,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전문직이 되기가 어려움을 나타냄.
- 특히, 계급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직종 변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아버지의 직종과 자녀의 직종 간에 대응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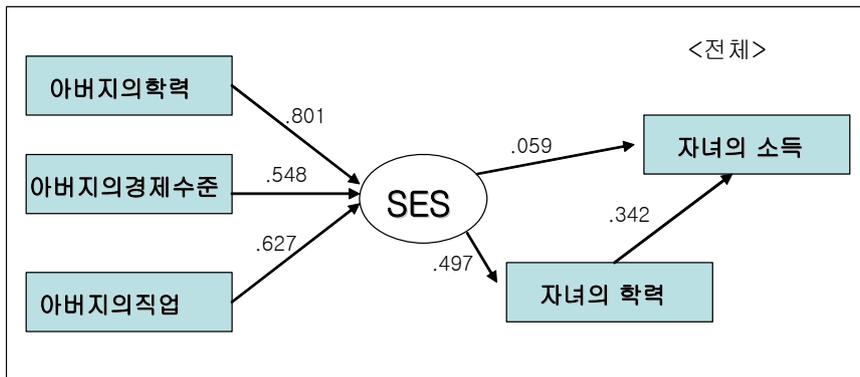
[그림 6-2] 아버지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 경로분석 결과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497로 매우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 0.470, 40대 0.478, 20~30대 0.433으로 최근 세대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기에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05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을 경유해서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172로 직접효과보다 높게 나타남. 교육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는 0.172이며, 총효과는 0.342임.
 -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성취지향적 사회의 성격이 강한 반면, 20~30대로 올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교육의 순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로 직접적으로 이전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유전적 요인 등을 통제한다면)를 통해 전승되고 있음.

[그림 6-5] 경로분석 결과(표준화된 계수)



<표 6-5>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1) SES의 요인설명 효과

		전체	50대	40대	20-30대
SES요인	부의학력	0.801	0.812	0.774	0.689
	부의경제수준	0.548	0.626	0.583	0.415
	부의직업	0.627	0.670	0.682	0.681

(2)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SES가 자녀 학력에 미치는 영향

	전체	50대	40대	20-30대
자녀학력에 미치는 효과	0.497	0.470	0.478	0.433

(3)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SES와 교육이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체	50대	40대	20-30대
SES효과	직접효과(a)	0.059	0.061	0.013	0.120
	간접효과(b)	0.170	0.156	0.187	0.130
	총효과(a+b)	0.230	0.218	0.200	0.250
교육효과	순효과(c-b)	0.172	0.177	0.204	0.169
	총효과(c)	0.342	0.333	0.391	0.299

VII. 결론 및 함의

□ 결과의 요약

- 교육수준의 상승은 개인 차원에서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회의 빈곤을 감소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저학력자의 빈곤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고학력화로 인한 교육분포의 변화는 사회적 불평등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
- 가구소득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역과 학교의 학부모 소득수준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음.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 일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으로든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의 함의

-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되고 있고, 교육이 그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사부담률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역차별적 정책이 요구됨.
-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은 상호작용하는 만큼, (기회, 과정, 결과를 포함하는) 교육의 포괄적인 평등성의 확보와 교육성취를 나타내는 지표의 다원화가 요구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하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시민을 재생산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많은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교육이 오히려 자본주의적 계급형성과 지속에 일조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성공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주는 제약을 벗어나 개인들이 성장과정에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경제적 풍요와 정치, 사회, 문화적인 공공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민주시민과 생산자로서의 사회 참여를 위한 아동에 대한 교육이 운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제약되어 이들이 생산자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앞당겨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장수명 2006)는 것이다.

다렌도르프(Dahrendorf 1956:540)에 의하면 “초기산업사회 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획득한 성취력을 통한 고정된 신분질서의 해체에 있으며, 일반적 의미에서 산업사회는 사회적인 차별의 기초가 되는 연령, 성별, 혈통, 출생신분과 같은 특징들이 성취사회의 원리를 통하여 바

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안관수 1996)¹⁾.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해방 후 계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 이동을 통해 계급형성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향적 사회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교육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육은 부존자원이 결여된 국가 차원에서는 발전의 주동력이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상향이동의 통로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사회적 이동성의 폭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매우 강한 나라의 경우, 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내하거나 기꺼이 희생하려는 전통 하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교육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중국에는 자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와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류방란 2006). 이는 교육이 부모 세대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빈곤) → 자녀의 낮은 노동시장 성취 → 자녀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빈곤)를 매개하는 주요 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²⁾.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교육성취가 노동시장 성과와 빈곤지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살펴보고,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 자녀의

1) 다렌도르프는 또한 (성취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해 사회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오르만(Ortmann 1972:28)은 “성취사회에서는 사회구조적인 개인의 불평등이 외면적으로는 다소간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 극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업성취를 통한 학교에서의 기회평등이란 본질적으로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능이 있거나 지적 수준이 높은 노동자 자녀의 경우 단지 ‘그 자신의 계층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예외적 상황’일 뿐”(안관수 1996 재인용)이라고 반박한다.

2) 최근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 자료와 분석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 16.8배로 급증하였으며, 졸업생 만명 당 입학생 수에서도 전국 평균은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서울은 약 15명, 서울 강남지역은 25명에 육박하고 있다(김광익 외 2004).

교육성취 →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 불평등구조와 빈곤의 대물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교육과 관련된 사회정책 수립에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교육,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이동(social mobility) 등은 교육학, 노동경제학, 사회학에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거의 간과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교육이 사회불평등과 특히 빈곤 대물림의 주요 기재(mechanism)로 작동하는 한에 있어 교육은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된다³⁾. 2005년 개최된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의 최종 회의에서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아동과 청년이 삶의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아동기에서 성인기를 통틀어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나아가 “아동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족이 이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중략)...결론적으로 OECD는 어떠한 개입이 아동빈곤을 경감시키고 종국적으로 빈곤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며, 세대간 박탈과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생애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 능력을 개발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OECD 2006; d’Addio 2007 재인용)고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면, 교육은 분명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고리의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의 영역과 사회복지

3) 이와 관련하여 류방란(2006)은 최근 연구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육복지를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면서 취약집단의 교육적 취약성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 혹은 완화하려는 사회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영역의 교집합 영역을 모색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의 영역이 아동과 청소년의 기회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함의를 얻고자 한다⁴⁾.

둘째,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교육양극화의 현황과 원인(김경근 외 2005; 류방관 2006; 성열관 2006), 교육과 노동시장소득 간의 관계(이병희 외 2005), 교육기회평등과 사회이동(김기석 2004;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오호영 2006) 등 최근까지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들은 비교적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⁵⁾. 본 연구는 교육과 빈곤지위, 교육과 불평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성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빈곤, 불평등, 세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히 교육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매우 드물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교육 불평등이 빈곤의 고착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출발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빈곤계층의 자녀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중국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빈곤과 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교육을 바라볼 때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여 년간 교육과 빈곤지위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4) 본 연구는 교육, 빈곤, 불평등, 사회경제적 지위 세습 등에 대한 포괄적이지만 기초적인 연구로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기회균등정책을 다루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논의 영역을 벗어난다.

5) 방하남 외(2004)를 예외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교육 불평등의 개념적·철학적 정의와 범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적 결과들을 기존 연구들과 통계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실질적 논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과 그 결과는 3장부터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교육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 1985~2006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포효과와 계수효과로 분해(decomposition)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 활용된 분해방법은 이시쿠라(Ishickura 2007)의 분해방법과 로짓분해 방법으로, 분해 결과를 통해 기간 동안 교육수준별 빈곤율의 변화가 교육 분포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분포효과), 혹은 빈곤율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불평등효과)를 제시한다.

제4장은 교육성취, 특히 고등교육의 확대가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도 1985~2006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도별·연령별 불평등지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불평등도가 동일 학력집단 내에서의 불평등에 의한 것인지, 학력집단 간의 불평등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기간 동안의 불평등도 변화 역시 집단 내·집단 간 기여분으로 분해해서 살펴

보았다. 4장에서는 회귀분석과 엔트로피 분해 방법이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제5장에서는 가족의 경제·사회적 배경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본 중 2004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능 평균, 대학 입학 여부, 전문대 입학 여부, 4년제 대학 입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족특성과 개인특성을 통제된 후 가족소득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하게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의 경향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6년부터 본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6장에서는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이를 통틀어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로 칭한다-과 자녀의 학력, 직업, 소득의 일치도를 분석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 그리고 교육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주요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항상 논란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 중 하나였다. 이는 그만큼 교육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상과 파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교

육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교육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즉, 교육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교육 제도와 컨테츠가 가지는 제도적·구조적 문제나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이 사회 내의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나 사회이동에 가지는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교육의 효과는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만큼 교육의 거시적이고 종단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미흡하나마 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 특히 교육이 빈곤, 불평등, 사회이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활용가능한 국내의 축적된 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횡단적·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와 컨테츠를 둘러싼 논의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회의 전반적인 고학력화로 인해 여전히 교육제도로부터 소외된 빈곤 아동, 학교 중도탈락자와 저학력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 빈곤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의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교육 컨테츠나 교육 제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대학 입시 자율화 등과 같은 교육제도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미치는

과장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자뿐만 아니라 독자 역시 그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한계는 자료상의 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육수준 변수는 학제에 따른 분류(중졸이하~대졸이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분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학력화로 인하여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분류의 의미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 정원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대학 내부의 서열 또한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졸업의 프리미엄이 10년 또는 2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을 좀 더 세분류하려는 시도들(예를 들면, 장수명(2006), 최형재(2007))이 최근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상당히 제한된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는 최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아동의 인지능력 변수를 도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자료상의 한계로 이러한 엄밀한 연구도 시도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필자의 한계와 자료의 제약 등으로 분석상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결과를 과대 혹은 과소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근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불평등 문제를 고찰한 선구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불평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며 불평등의 영향도 거의 무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불평등의 기원과 발전을 인간정신의 연속적인 진보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정신의 진보와 더불어 소유권과 정치권력이 발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통치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사회는 불평등의 기원을 이루는 사적 소유권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와 평등한 시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라는 양대 기둥으로 형성된 미묘한 갈등과 조화의 구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교육은 '시장질서에 순응하는 기능적인 노동자'라는 시장경제의 요구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시민'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건축물을 형성하는 반석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교육은 귀족과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교육은 대중에게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의 확대는 인간정신의 보편적인 진보를 가져오면서, 기술과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주체의식과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육은 한편으로는 성취사회라는 신화를 통해 시장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면서도 동

시에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통해 시장경제를 견제하는 그야말로 ‘시지프스’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 절에서는 먼저 교육 불평등을 정의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교육 불평등의 개념과 범위

교육 평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근대 사회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근대 이후 평등사상의 확산으로 교육은 소수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들 모두가 천부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결과이다(김영화 2002; 왕재선·박원수 2006 재인용). 초기 교육 평등은 기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기회의 균등, 즉 사회계층이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왕재선·박원수 2006).

그러나 오늘날 교육 평등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목적과 평등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 평등과 사회적 평등 간의 관계가 얽히면서 더욱 복잡을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 평등에서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6) ‘무엇’의 평등인가에서 그 무엇은—물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출발선상의 기회의 평등부터 최종적인 도착지점의 결과의 평등까지의 연속선상에 다양하게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무엇’은 출발선상에서의 기회(opportunity)(노직)나 자원(resource)(드워킨)일 수도 있고, 기초재(primary goods)(롤즈)일 수도 있으며, 기능(functioning)과 역량(capability)(센)일 수도 있고, 포괄적인 의미의 기회(로머)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Sen(1995), Dworkin(2000), 황경식(1984), 손준중(1995), 염수균(2004) 등을 참조하라.

특히 로머와 같은 평등주의적 분배정의론에서는 최초의 투입과 최종적 결과 사이의 수많은 단계들을 각각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회로 보았다. 이 때 최초의 투입에 가까운 단계일수록 그 때의 기회는 형식적인 기회이며, 최종적인 결과에 가까운 단계일수록 그 때의 기회는 실질적인 기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다양한 수준의 기회 가운데 어느 단계를 선택하여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는 또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평등주의는 개인의 책임(responsibility)의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가에 대해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즉, 평등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차별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어디까지-기회, 과정, 결과 등-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먼저, 교육기회의 평등관은 근대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형성된 가장 초기의 평등관으로서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금지함으로써 누구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취학을 가로막는 모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 주어 교육기회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능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교육기회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등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능력에 기초한 평등관이라 할 수 있다(김영화 2002). 즉, 교육기회의 평등은 의무교육 혹은 무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진학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이돈희 1981:164; 조수환 1996 재인용). 교육기회의 평등관에 머문 관점은 노직(Nozick)⁷⁾과 같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출발선상에서의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다⁸⁾.

평등의 두 번째 쟁점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강신욱(2003. 10.)을 참조하라.

7) 노직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이다. 전자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국가의 개입도 부정의하다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소유가 정당하고(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그 이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현재의 소유의 내용 중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 부정함이 있었다면 이를 정당한 소유의 상황으로 교정해야만 한다는 원리(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violation of the first two principles)이다.

8) 로머(Roemer)와 같은 평등주의적 분배론자들은 기회의 개념을 크게 확장한다. 즉, 투입과 결과 사이의 모든 과정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기회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다음으로, 교육조건에의 평등관은 교육기회 뿐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 교육의 여건과 과정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떤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교사들의 자질이 떨어지는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육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교육조건에의 평등관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동등하게 쾌적하며, 동등하게 효과적이며, 모든 진로를 동등하게 준비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육 평등이라는 것이다(김영화 2002). 교육기회의 평등과 함께 교육조건에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러한 관점은 롤즈(Rawls)⁹⁾나 드워킨(Dworkin)¹⁰⁾과 같은 자유주

적용할 때 실질적인 의미의 교육기회의 평등은 여기에서 논하는 교육의 기회, 조건, 결과의 평등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는 입장은 차경수의 교육 기회균등 개념이다. 그는 진정한 교육 기회균등 개념은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차이, 또는 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 학교시설의 우열이나 인문, 실업과 같은 교육과정, 공립과 사립, 부모의 직업 등과 체계적관계가 없는 상태, 학생의 학업성적이 부모의 직업과 관계없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세한 것은 석태종(1988)을 참조하라.

- 9) 롤즈의 정의론은 도덕적, 정치적 이념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사회의 최약자가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합리화할 수 있는 입장, 즉 평등주의적 복지의 추구하고 양립 가능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 할 수 있다(황경식 1984; 최병두 2005). 그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당사자들이 '기초재'(primary goods)의 분배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우선 '평등의 원칙'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리 하에서 그가 도달한 정의의 원리는 "모든 기초재-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자존감의 기반 등-는 이러한 제가치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병두 2005).
- 10) 드워킨은 분배적 평등에 대한 견해로 자원(resource) 평등론을 제시한다. 그의 자원평등론에 의하면, 가상적인 시초 상황 속에서 경매를 통해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초 상황에서 평등하게 분배된 자원은 이후 거래나 새로운 자원 생산의 과정을 통해 처음 받았던 자원의 양에 비해 그 크기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있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 때 드워킨은 자원이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즉 시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또 그런 원칙에 따른 분배가 진정한 평등이라고 보았다. 반면 자원의 차이가 사람들의 재능-포괄적으로 여건-에 의한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의 자원 평등론은 사람들의 비개인적 자원이 그들의 선택에는 민감하고, 그들의 여건에는 둔감한 것으로 만드는

의적 평등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초적 재화(primary goods)나 자원(resources)을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진정한 평등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선호에 의한 차이, 즉 개인의 책임(responsibility)에 의한 결과적 차이는 평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결과의 평등관은 ‘학업성취’와 같은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교육을 받는 목적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교육결과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 수준’을 의미한다. 교육결과의 평등관은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관과는 반대로 능력이 낮거나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같은 수준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종의 역차별적 평등관이며 보상적 평등관이라 할 수 있다(김영화 2002).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의 공적인 역할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통으로 향유해야 하는 공공재적 가치로서 평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서열화와 그에 따른 차별적 교육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다만 교육에 있어서 차별의 개념이 허용될 때는 열등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슷해 질 수 있도록 더욱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왕재선·박원수 2006). 이와 같은 개혁적 평등관은 부분적으로 롤즈(Rawls)의 ‘최대최소원칙’(Maximin principle)을 반영하지만, 더 나아가 센(Sen)¹¹⁾과 맑시스트 계열의 로머(Roemer)¹²⁾ 등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염수균 2004).

11) 센은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개별적 특성들—예를 들면, 연령, 성,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평가공간’의 선택문제—즉, 소득, 부, 효용, 자원, 자유, 권리, 삶의 질 등 상대적인 핵심변수의 선정—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모든 인간이 완전히 똑같다면, 한 공간(예. 소득)에서의 평등은 다른 공간(예. 건강, 복지, 행복)에서의 평등과 일치하겠지만, ‘인간 다양성’의 결과로

의 평등관을 반영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이 의무 교육화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된 오늘날 교육기회의 평등은 상당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 기회의 확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이돈희 1981; 조수환 1996 재인용). 첫째, 능력에 따른 진학은 교육의 기회가 능력 있는 자에게만 개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만큼 교육의 기회를 제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때의 능력이란 IQ와 재능 같은 생득적 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가정환경 등 환경적 요소도 포함하는 것이다. 타고난 능력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를 차치하고라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상이하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발선상의 기회의 평등’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한 공간에서의 평등이 사실상 다른 공간에서의 불평등과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정확하게 같은 소득을 가진다 하더라도,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식으로 기능할 수 없다(Sen 1995). 이와 같은 이유로 센은 재화 그 자체보다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적절한 영양공급, 자존심의 성취, 사회 일원으로서의 생활영위 등과 같은 기능(functioning)이 평등해지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의 집합인 기본적 역량(basic capability)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en 1982; 강신욱 2003 재인용).

- 12) 로머는 ‘무엇’의 평등을 다시 ‘기회’로 되돌리고자 시도하는데, 그가 의미하는 기회의 평등은 다섯 가지 요소들 속에서 설명된다. (1) 환경(circumstances):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그들의 신념, 행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 (2) 유형(type): 동일한 환경에 의해 특성 지워지는 개인들의 사회집단; (3) 노력(efforts):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벗어나 있는 그러한 특성들; (4) 목표(the objectives): 기회 평등이 달성되어야 하는 근거; (5) 수단(the instruments): 기회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도구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회를 평등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개인들의 환경과 독립적이며, 그들의 노력에만 달려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정책들은 주어진 제한된 자원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로머는 최선의 정책은 주어진 상대적 노력 수준(즉 기회평등 정책)에서 최악 유형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머는 또한 기회평등은 반드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도록 경합장(playing field)을 고르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d’Addio 2007).

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 기회의 평등 개념은 학교 교육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며, 사회 교육 등의 기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즉,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s), 빈곤문화, 아비투스 등과 같이 사회계층에 따라 문화적·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학교 교육에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셋째, 이와 같은 교육 기회의 평등은 단지 아동의 입학 혹은 진학에 관한 언급일 뿐이고,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평등의 개념, 즉 교육과정 및 결과의 평등과 연결된 것으로서, 지역간·학교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학생 간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교육 평등의 문제가 사회적 평등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학업의 성취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 배경에 의해 좌우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형식적인 확대가 사회적 평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교육과정의 평등과 나아가 교육결과의 평등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 한,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은 고등교육의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최근 교육 평등이 포괄하는 범위는 기회의 평등, 과정(조건)의 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까지 확대되어 왔다(김병성 2003)¹³. 즉, 산업화 초기에는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줄이

13) 최근에는 교육 불평등 대신 교육격차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김경근(2005)에 의하면 이 둘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 불평등은 이념적·사상적·상징적인 의미가 큰 데 반해, 교육격차는 보다 현상적이고 실제적·가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는 데 주력하였지만,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취학기회의 격차가 크게 해소되면서,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과 같은 제반 교육여건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에는 교육결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목적이 단지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김경근 2005). 그러나 교육 평등의 범위에 교육기회의 평등만을 포함할 것인가, 교육결과의 평등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뒤에서 논의될 교육과 사회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의 관계

가.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학에서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로써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즉, 교육 성취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전적 사회학의 세 가지 조류를 대표하는 뒤르케임(Emile Durkheim), 마르크스(Karl marx) 그리고 베버(Max Weber)는 사회적 불평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Sanderson 1999). 세 학자들의 학문적 독특성은 불평등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뒤르케임에게 있어서 불평등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불평등은 인간을 구속하고 소외시키는 원인으로서 반드시 극복되

어야 하는 사회적 부조리이다. 베버는 불평등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 현상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집착하였으므로 대안 사회를 암시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오욱환 2003:79). 교육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세 학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뒤르케임은 교육을 생업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의 교육, 규범의 내면화와 사회화, 사회계층적 지위로의 배분기제로 보았다. 마르크스는 계급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기구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았다. 베버는 교육의 지위표출기능에 주목하여 신분적 지위로 보기도 하고 '시장능력'으로서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했다(남춘호 2004:54).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기준으로 학파를 분류할 때 사회학의 세 학파는 뒤르케임, 마르크스, 베버의 핵심 개념을 이용하여 기능론, 갈등론, 경쟁론으로 지칭되기도 한다(오욱환 2003:80-81).

〈표 2-1〉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 접근방법, 하위 이론의 관계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	접근방법	하위 이론
수용적	기능론	인적자본이론, 지위획득론
비관적	갈등론	경제적 재생산이론 문화적 재생산이론 저항이론
	경쟁론	선별이론, 계층경쟁론

자료: 오욱환(2003)

기능론적 관점을 대변하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을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투자행위, 즉 인적자본의 중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교육은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이처럼 제고된 생산성에 대한 대가의 형태로 보다 높은 임금이 지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로 쓰여진 기회비용은 미래의 더 높은 임금으로 회수되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 교육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준구 1990). 베커(Becker 1975), 민서(Mincer 1963) 등에 의해 제기된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하나의 자본으로 보고 자신에 대해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면 그만큼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는 교육이 생산성을 증대시켜 개인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므로 학력별 임금격차는 학력별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남춘호 2004:75). 한편, 지위획득론(status attainment theory)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는 각 개인들이 사회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되므로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과 그에 따른 위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없고 자신들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취득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능론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사회집단들이 갈등 또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관계가 기능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현실왜곡이라고 비판한다(오욱환 2003). 보울즈와 진티스(Bowles & Gintis 1975) 등으로 대표되는 급진파적 견해, 즉 갈등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재생산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높은 생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기초를 둔 권력구조를 수용하는 태도를 배양하거나 또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고용주가 교육을 더 많이 받은 노동자로부터 쉽게 노동을 빼낼 수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을 통해 이들을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분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이준구 1990). 이와 같이 갈등론자들은 현재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들이 현 상태를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폭력과 함께 이데올로기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은 평등화를 가져오는 매개

체가 아니라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한다(이준구 1990).

경쟁론 중 특히 선별이론(Screening theory)은 애로우(K. Arrow)나 스티글리츠(J. Stiglitz) 등에 의해 주장된다. 이들은 개별 노동자의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교육은 간접적인 신호(signal)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교육의 중요한 의미는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를 가려내는 선별도구라는 것이다(이준구 1990). 이들에 의하면, 교육이 효율적인 선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잠재적 생산능력에 관한 신호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으려면,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육은 잠재적 생산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고 따라서 교육의 선별기능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다(남춘호 2004:76). 써로우(L. Thurow) 등에 의해 주장되는 직무경쟁이론은 교육을 생산성 그 자체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훈련가능성(trainability)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즉 노동시장에 갓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골라 뽑는 기준은 가장 낮은 훈련비용만으로도 소망스러운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리라고 기대되는 순으로 뽑는 것이며, 이 때 교육수준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이준구 1990). 이들 경쟁론자들—선별이론과 직무경쟁이론—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으로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며, 집단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편리한 조건을 경쟁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사회적 폐쇄로 개념화된 이 전략을 구사하는 지배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객관적이며 타당한 기준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이나 개인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조건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오욱환 2003).

요컨대,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출신배경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세대간 사회이동을 촉진시켜 능력주의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왕재선·박원수 2006). 반면, 비판적·갈등론적 관점은 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재로 간주하고, 교육성취는 순수한 능력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신 배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이 출신 배경의 영향을 은밀히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왕재선, 박원수 2006).

나.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논쟁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교육과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 즉 “교육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교육은 사회적 평등에 기여하고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교육 그 자체의 평등한 상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상태를 이룰 수 있을까와 관련된 교육을 위한 평등(equality for education)이 그 하나이고, 사회적 평등을 위하여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냐와 관련된 평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quality)이 다른 하나이다(김민환 1987). 이러한 교육 평등과 사회적 평등화에 대한 관점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매개하는 변수가 계층(계급)¹⁴이다. 즉 교육의 불평등

14) 일반적으로 계층현상은 사회적 불평등구조가 성층(成層)으로 나타나며 각 층간에는 경제·사회명망적·권력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계급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 생산관계에 기초한 대자적(對自的)·갈등적 집단관계를 의미한다(홍두승·구혜근 2001). 사회계층은 생물학적으로 생겨난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사회불평등(structured social inequality)을 내포하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구조적 불평등은 지속성을 갖는다. 즉, 계층간의 불평등이 대개 세대간에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생물학적인 요인 말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해도 지속성이 없으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층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없다. 둘째, 구조적 불평등은 제도화된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개인의 차이보다는 사회제도와 사회조직에 기초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요인은 사회분업과 그에 따른 사회분화이다. 사회분화는 역할과 지위의 분화를 만들어내고 사회는 각 개인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상

을 논할 때 일차적으로 등장하는 변수가 계층(계급)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논할 때 일차적으로 등장하는 변수 역시 계층(계급)이다.

교육 평등이 교육기회의 평등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흔히 사회에 대한 기능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입장과 맞물린다. 이들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개인의 학력성취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Boudon 1973)이며, 그 결과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점진적인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그 논거를 산업사회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김경근 1993). 즉, 국가에 의해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세습에 의해 직업과 계층이 결정되지 않는 근대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교육은 하류계층 출신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으며, 대중교육 혹은 공교육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계층적 편견을 감소시키거나 나아가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교육기회가 확대되면 특히 하층민들에게 상승이동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Harvigust 1961; 김경근 1993 재인용). 한마디로 교육은 사회계층의 종속변수이기도 하나, 사회적 계층이동의 독립변수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이한 물질적, 위신적 보상을 제공한다. 셋째로, 구조적 불평등은 도덕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된 불평등이다. 사회적 불평등구조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의 빈곤층 사람들이 자신이 교육을 못받아서 그렇게 가난하다고 믿는 것은 교육제도가 얼마나 계층구조의 정당화에 기여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렇게 계층 계급구조가 도덕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구조를 타파하기가 극히 힘든 것이다(홍두승·구혜근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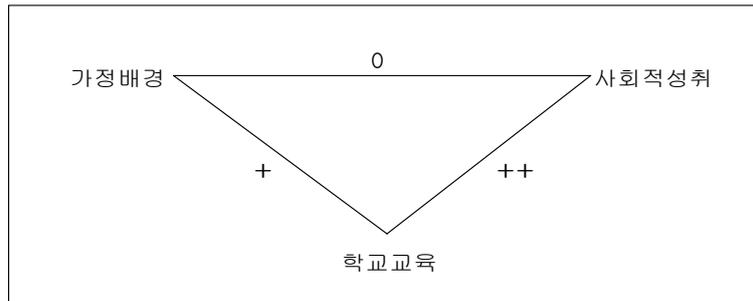
- 15) 엄밀히 말해서 각주 10)에서 정의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생물학적인 요인 말고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해도 지속성이 없으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층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없으면’ 계층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귀결에 의하면 사회는 계층이나 계급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성취사회의 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 때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능력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고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

것이다. 특히 초기 산업화시기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있는 경우, 경기의 호조로 인해 새로운 많은 직업이동의 기회가 제공될 때, 또 성취중심의 개방형 민주제도가 확대될 때, 평등화 기제로서 교육의 독립변수적 기능은 확대된다고 본다(이영자, 진규철 2000:4장; 양재진 2005 재인용).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과정에서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게 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숙련이 요구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숙련이 학교를 통해 습득되고 직업지위획득에서 학력과 같은 업적요인이 귀속요인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업적요인의 중시경향과 보편주의적 가치의 확산은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를 감소시킨다. 결국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교육기회의 평등'은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적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교육체계 확대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체계 확대는 진학가능성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으로 뒷받침되는 물질적 풍요와 직업의 안정은 교육비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하층계급의 교육성취를 가로막은 장애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남춘호 2004:57-61; 방하남 외 2004:57-58).

이러한 기능주의적인 낙관론은 블라우와 던컨(Blau & Duncan 1967), 세웰과 하우스(Sewell & Hauser 1975) 등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된다. 블라우와 던컨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가정배경은 어느 정도 학교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회적인 성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학교 교육은 사회적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아래와 같은 모형을 제시했다.

[그림 2-1] 블라우와 던컨의 모형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개방적 성취사회의 이상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우리나라와 선진 산업사회 어디에서도 이 같은 낙관적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즉, 사회계층(계급)에 따라 교육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그 결과-다른 요인들과 더불어-세대내·세대간 사회이동은 상당히 제약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계몽주의 문화와 학교의 확산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체제의 정당화 문제가 맞물리면서 형성된 근대교육체제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 즉 해방이 아니라 예속,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전략한다는 것이다(김종엽 2003).

즉,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은 다시 사회적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계층을 더욱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된 계층에 따라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사회나 특권적 위치를 점한 계층은 자신의 자녀세대가 자신들과 비슷한 계층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경제적 자원동원에서의 강한 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계층의 강한 세습화를 낳는다”(Parkin 1971).

이들 논의를 수용한다면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견제하는 제도이기보다는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하기도 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규정된다.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과 보다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향후 사회에 나아가 부모와 비슷한 상위계층에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위계층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적 분화와 고착화는 세습이 아니라 업적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되며,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구조가 공고화되는 것이다. 결국 콜만과 후센(James Coleman & Torsten Husen)의 교육적 하위계층(the educational lower class)이 탄생하며, 교육은 그 어떤 불평등화 기제보다도 정상성을 갖춘 불평등 기제가 되는 것이다(Rinne and Kivirauma 2005:67; 양재진 200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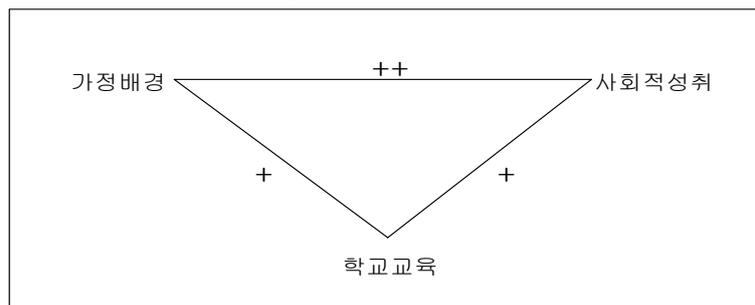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후반 교육기회의 전반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가족배경에 따른 학력성취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써로우(1972)는 ‘방어적 투자’(defensive expenditure)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육기회 확대에 따라 일반적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지위경쟁에 위협을 느낀 지배계층은 더 많은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의 ‘차별화 전략’을 피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방하남 외 2004:60)¹⁶. 최근 하우트 등(Rafery & Hout 1990)과 루카스(Lucas 2001) 등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좀 더 진전된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하우트 등에 의해 제기된 MMI(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에서는 상층계급과 하위계급 간의 교육격차는 상층계급이 포화상태일 때만 감소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Muller 2007).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구성장

16)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기유학 열풍과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계층구성의 상향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육기회 역시 확대된다. 그런데 이때 교육체계 팽창에 따른 교육기회(공급) 확대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가족배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지만 그전까지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즉 상층계급의 이득이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교육기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충분히 팽창한 하급단계의 이행에서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감소하지만, 아직 팽창 중인 상급단계의 이행에서는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방하남 외 2004:60). 이에 대해, EMI(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에서는 고등교육체계가 충분히 팽창하면 가족배경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MMI 가설의 주장이 부정된다. EMI 가설에서는 학력성취를 둘러싼 경쟁이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EMI 가설에 의하면 상층계급은 자녀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든지 그 이득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교육수준의 양적 차이가 존재하면 양적 차별화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 하고, 양적 차이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미미하면 질적 차별화를 통해 이득을 획득하려 한다. 다시 말해, 상급학교로의 이행이 중요하다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이루어지고, 상급학교로의 이행 그 자체보다 좀 더 유리한 계열(track)이나 좀 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대학으로서의 진학이 중요하다면 유리한 계열이나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 경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출신배경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EMI 가설은 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행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언제든지(고등교육이 팽창해 대학교육기회의 공급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더라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⁷⁾(방하남 외 2004:61).

이와 같이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앤더슨(Andersen 1961)은 미국, 스웨덴, 영국 등 3개국에서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과의 상관관계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보다 낮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을 높임으로 해서 더 나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돈(Boudon 1973)도 사회적 지위이동 및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회의적인 역할에 대한 실증적 결과 제시했다. 이러한 회의론은 쉐로우(Thurow 1972), 벤딕스와 립셋(Bendix & Lipset 1972), 베르그(Berg 1971), 프리만(Freeman 1976), 홀(Hall 1975)에 의해서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젠크스 등(Jencks et al 1972)은 학교 교육 연한이나 인지적인 요인과 개인의 수입 간에는 별 상관이 없으며,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나 교육은 아들의 수입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직업과 교육과의 관계($r=.648$)에서는 수입과 교육과의 관계($r=.353$)보다 다소 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발견했다.

[그림 2-2] 보울즈와 진티스의 모형



17) 우리나라의 특목고 진학을 위한 경쟁이라든지 명문대 진학 경쟁 등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보울즈와 진티스(Bowels & Gintis 1976)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은 이외에도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블라우와 던컨의 연구 결과와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그들은 학교가 사회적 지위 이동을 통하여 평등을 실현시키는 기관이기보다는 현존하는 불평등 체제를 유지, 존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파악하였다. 리트(Litt 1963), 스타인츠(Steinitz 1973), 클락(Clark 1960), 로드바트(Rothbart 1970), 현(Hurn 1978), 밀스(Mills 1963) 등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병성 외 1982).

제2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확대 과정과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교육제도의 변화와 그 결과, 그리고 교육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와 쟁점들이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교육에 대해 '모든 사람이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국가적 대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조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공교육 비중이 최상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개인(가구)적 투자 또한 유래 없이 높은 나라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등교육이 보급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가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래 없이 높은 나라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교육의 높

은 민간부담과 사교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결국 저소득 계층의 교육기회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고등교육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만, '동등한 조건과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라는 기회 평등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은 그 결과에 대한 수익자 회수원칙과도 맞물리게 되며, 이는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공교육에 대한 낮은 공적 투자와 그 결과로 초래된 공교육의 부실은 높은 민간부담과 사교육시장에서의 경쟁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며 국가가 세금이나 공적인 기여를 통해 이를 요구할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본 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 보편화와 고등교육 확대의 과정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의무교육제도¹⁸⁾가 도입된 이래 정규교육은 일반국민에게 급속히 확대되었다. 즉, 의무교육제도 도입에 따라 1945년 48.0%에 머물던 초등학교 취학율이 1950년에 81.8%로 꺾충 뛰었으며, 중학교 진학률은 1950년 26.1%에 머물던 것에서 1955년 47.1%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법제화는 근대교육 발전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지만, 빈약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값싼 대량생산교육이었으며, 사친회비의 징수, 빈곤으로 인한 중퇴자의 속출로 초등 의무교육은 사실상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못했다(김경미, 2001).

18) 의무교육은 미군정기부터 추진되었으나, 법제화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루어졌다(헌법 제31조, 교육법 제8조). 그러나 인프라의 부족으로 전면적인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실시는 196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고, 중학교 의무교육은 1952년 교육법에 명시된 이래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하여, 1994년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 이르러 전국민의 9년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다. 먼저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학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중학교 입시지옥이 해소됨에 따라 중학교 진학률이 급증하였지만, 평준화정책의 하나로, 공·사립 학교간의 공납금 차이를 조정하여 공립학교의 공납금을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도 빈곤한 경우 진학에 장벽이 되기도 하였다¹⁹⁾.

〈표 2-2〉 연도별 초등학교 취학률

(단위: 명, %)

연도	취학아동수	취학률
1948	2,405,301	74.8
1950	2,658,420	81.8
1951	2,073,844	69.8
1952	2,399,776	80.0
1953	2,247,057	75.7
1954	2,664,460	81.5
1955	2,930,327	87.0
1956	3,216,217	80.5
1957	3,503,967	93.4
1958	3,651,338	94.2
1959	2,785,050	96.0

자료: 김경미(2001)

결국, 당시 중학교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입시제도의 병폐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평준화정책은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진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평준화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돌림으로써 평등성은 훼손

19) 미리 입학예치금을 낸 사람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여, 1971년도 중학진학 희망자 중 6천 2백 64명(5.5%)의 국민학교 졸업생이 추천을 포기해야 했다(조선일보 1970년 12월 18일자; 김경미, 2001에서 재인용)

손되었으며, 교육내용 측면에서 획일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무용지물 이거나 불평등한 교육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이어서, 당시 문교부는 1973년 6월 28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 하였다. 이는 중학교 평준화와 같은 논리로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를 배 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립학교 공납금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 립학교 평준화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립학교 간 교육환경의 격차 는 극복되기 어려웠다²⁰⁾. 또한 모든 고등학교 진학자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학업 환경에 있어서의 심각한 공·사립 격차 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평준화 시책의 전국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 여했으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완성의 평준화라는 점과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 에게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강요했으며, 불만족한 공교육으로 인해 과외수 업이 증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고교생이 증가하고, 대입 경쟁이 과열 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 방안'이라는 새로운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대입 본고사를 폐지 하고 예비고사만 보게 하여 과외 요인을 없애며, 과외를 금지하고 내신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여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다. 그 결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여, 대학입학 경쟁의 공정성 을 확보해주어, 대학교육의 불평등한 분배를 확보했다. 그러나 학교 교육

20) 공립학교는 교원봉급의 50%와 시설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사립학교가 준공립 화 됨으로써,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 지원도 없어 교육환경의 격차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기피현상이 일반화되었다.

2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불평등을 강제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으로 오히려 과외수업이 늘어나 학부모의 부담 을 가중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실의 문제는 간과되었으며, 평준화 작업이 미비하여 지역 간, 학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여, 입시에 있어서 내신 성적의 유리함, 불리함에 대한 논쟁과 불만의 소지가 되었다. 요컨대, 7.30교육개혁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과외금지조치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해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교육의 획일화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차를 고려하는 교육의 평등성이 무시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1981년에는 졸업정원제의 실시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에 졸업정원의 30%를 추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까지 유지되어왔던 고등교육 억제와 직업교육의 강화 정책과는 다른 고등교육확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졸업정원제는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엄격하게 졸업 여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늘어난 입학 정원은 고스란히 대학 졸업자들의 확대에 이어졌다. 이러한 고등교육정책 확대에 따라 1980년 고등교육 진학률은 27.2%였으나 불과 5년 후 36.4%로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확대의 또 다른 계기는 김영삼 정부 하의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었다.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이 조치는 명목적으로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Edutopia) 건설”을 내세웠다(박거용 1995)²²⁾. 그러나 5·31 교육개혁은 국가의 재정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

22)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9개 방안은 ①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학점은행제 도입, 시간제 학생등록 실시, 최저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2~4년제 생업기술고등교육기관 등, ②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6개 대학모형 제시, 대학설립과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 ③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④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⑤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국공

획 없이 대학설립자율화와 정원자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공교육의 문제를 대학간 무한 경쟁과 국민 개인적 사부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방기하고, 아울러 고학력 풍조를 조장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비판받게 된다.

아래 <표 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고등교육 확대의 계기, 즉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1981년을 전후로 고등교육 진학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차 고등교육 확대의 계기, 즉 대학정원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1995년 이후 다시 한번 고등교육 진학률은 크게 상승한다. 1970년~1980년 사이 고등교육 진학률은 불과 0.3%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1980년~1990년 사이 고등교육 진학률은 6%p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2000년 사이에는 진학률이 무려 34.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추진된 교육정책의 결과로 고등교육은 보편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대학교육의 부실화, 대학입시경쟁과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한 사교육 부담의 증가, 그리고 대학 내의 서열화 심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한다. 결국, 교육비의 공적 부담과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담보되지 못한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확대는 오늘날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평준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영재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였다. 1983년 이후부터 정부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했으며, 과학고는 1987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는

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선발,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진학정보센터 운영 등, ⑥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⑦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규제완화위원회,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운영 등, ⑧품위있는 유능한 교원육성, ⑨교육재정 GNP 5% 확보: 1998년까지, 그러나 8월 30일 교육재정 확충방안 발표 등이다(박거용 1995).

1992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하였다. 또한 대학정원 확대와 함께, 2000년 4월 27일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위헌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수차례 대학입시제도가 변화하였지만, 대학정원이 고졸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대학 내 서열화의 가속화를 막지는 못했다.

〈표 2-3〉 진학률¹⁾ : 1970~2006년

(단위 : %)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 →고등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고등교육	고등학교→고등교육
1970	40.2	9.6	26.9
1975	41.5	8.8	25.8
1980	39.2	11.4	27.2
1985	53.8	13.3	36.4
1990	47.2	8.3	33.2
1995	72.8	19.2	51.4
2000	83.9	42.0	68.0
2001	85.3	44.9	70.5
2002	87.0	49.8	74.2
2003	90.2	57.6	79.7
2004	89.8	62.3	81.3
2005	88.3	67.6	82.1
2006	87.5	68.6	82.1

주 :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2) 고등학교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3) 고등교육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요컨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와 실태 변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등교육의 급격한 확대와 사교육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 취학률은 1980년 11.1%에서 2005년 71.1%로 불과 25년 만에 60%p가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 진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학률은 2006년 82.1%로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취학률¹⁾ : 1980~2005년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²⁾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80	102.9	103.7	95.1	92.5	63.5	56.2	11.1	5.2
1990	101.7	102.2	98.2	98.5	88.0	85.4	28.4	16.7
1995	100.1	100.3	101.6	101.8	91.8	91.3	36.8	24.2
2000	98.7	99.3	99.5	100.0	95.6	95.5	50.9	37.5
2004	100.0	100.3	97.0	97.4	95.7	96.1	65.9	50.7
2005	100.1	100.5	97.4	98.1	95.8	96.3	71.1	54.9

주 : 1) 취학률은 소수의 조기입학자나 과령아로 인하여 100을 넘을 수 있음

2) 일반대학교(4년제)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이러한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례적인 것이다. 아래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위 취득에 소요된 공식적인 평균 교육연수는 전체 12년, 남성 12.5년, 여성 11.4년이며, 이 중에서도 25-34세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남성 13.7년 여성 13.6년이다. 전체 평균 교육연수는 OECD 평균인 11.9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데 비해, 25-34세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OECD 평균(각각 12.5년과 12.8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OECD 국가들의 학위 취득에 소요된 공식적인 평균 교육연수
(단위: %)

	2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5-34	35-44	45-54	55-64	25-34	35-44	45-54	55-64
한국	12	12.5	11.4	13.7	13.2	11.6	10.2	13.6	12.2	10	8
호주	12.6	12.8	12.5	13.2	12.8	12.7	12.2	13.3	12.4	12.3	11.7
캐나다	13.2	13.2	13.3	13.6	13.3	13	12.2	14.1	13.6	13	11.8
덴마크	13.4	13.5	13.3	13.6	13.6	13.4	13.6	13.6	13.3	13.3	13
핀란드	11.2	10.9	11.4	12.5	12.3	10.5	8.5	13.5	13	11.2	8.5
프랑스	11.6	11.7	11.4	12.8	12.1	11.3	10.3	13.1	12	10.7	9.6
독일	13.4	13.7	13.2	13.6	13.8	13.8	13.7	13.5	13.4	13.2	12.5
이탈리아	10.1	10.2	10	11.2	10.5	10	8.7	11.7	10.7	9.5	7.6
일본	12.4	12.6	12.1	13.3	13.3	12.4	11.2	13.2	12.9	11.9	10.5
멕시코	8.8	9.1	8.6	9.5	9.4	8.8	7.8	9.4	8.9	8	7.1
네덜란드	11.2	11.4	11.1	12	11.5	11.3	10.6	12.5	11.4	10.5	9.8
뉴질랜드	12.6	12.6	12.6	11.8	11.4	11	9.6	12.1	11.5	10.7	8.4
노르웨이	13.9	13.9	13.9	14.2	14.1	13.7	13.4	14.7	14.2	13.8	13.1
포르투갈	8.5	8.3	8.7	9.3	8.4	7.8	7.3	10.3	8.8	7.9	7.2
스페인	10.6	10.6	10.6	11.9	11.2	10.1	8.9	12.5	11.4	9.7	8
스웨덴	12.6	12.4	12.8	13.1	12.7	12.2	11.3	13.6	13	12.7	11.8
스위스	13	13.5	12.5	13.7	13.7	13.5	13.2	13	12.7	12.3	11.7
영국	12.6	12.7	12.4	13	12.6	12.7	12.4	12.9	12.4	12.3	12
미국	13.3	13.2	13.4	13.1	13.2	13.4	13.2	13.4	13.4	13.5	13.1
OECD평균	11.9	11.9	11.8	12.5	12.2	11.7	11	12.8	12.1	11.4	10.3
EU19평균	11.8	11.8	11.7	12.5	12.1	11.7	11	12.9	12.2	11.4	10.3

자료: OECD (2006) 『Education at a Glance』 .

〈표 2-6〉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진입연도별 고등교육 성취(2004)
(단위: %p, %)

노동시장 진입연도	순위	1990-94과 1995-99사이 %p 변화	1975-79와 1995-99사이 %p 변화	1995 -99	1990 -94	1985 -89	1980 -84	1975 -79	1970 -74	1965 -69
프랑스	1	9.7	18.0	35.5	25.8	21.4	18.3	17.5	15.5	12.9
한국	2	7.9	32.8	46.2	38.3	28.7	18.6	13.4	10.7	8.4
아일랜드	3	7.4	19.1	38.5	31.1	26.6	23.5	19.4	16.9	14.2
스페인	4	5.4	18.1	35.9	30.5	26.0	20.9	17.8	13.4	11.2
벨기에	5	5.0	15.9	39.9	34.9	31.8	26.6	24.0	21.7	17.8
스웨덴	6	4.9	9.3	41.8	36.9	34.4	33.3	32.5	29.4	24.6
호주	7	4.6	6.5	35.8	31.2	31.0	32.1	29.3	24.6	20.8
폴란드	8	4.4	9.0	20.9	16.5	12.5	12.0	11.9	12.4	12.1
캐나다	9	3.8	13.1	54.3	50.5	44.0	41.5	41.2	37.2	31.0
영국	10	3.3	5.9	32.9	29.6	29.5	27.9	27.0	23.2	21.4
덴마크	11	3.1	6.9	38.6	35.5	31.9	34.3	31.7	28.8	25.4
이탈리아	12	2.7	4.5	15.4	12.7	11.1	11.0	10.9	8.5	5.7
포르투갈	13	2.4	7.5	16.5	14.1	11.4	10.6	9.0	7.7	5.7
네덜란드	14	2.2	5.3	32.9	30.7	28.7	29.8	27.6	25.2	21.5
노르웨이	15	2.1	10.7	39.0	37.0	31.1	30.3	28.3	24.5	21.5
뉴질랜드	16	1.9	2.5	28.2	26.3	25.9	25.6	25.7	20.8	18.2
오스트리아	17	1.5	4.4	21.1	19.6	20.0	18.4	16.7	15.6	14.1
슬로박 공화국	18	1.2	1.2	12.9	11.7	13.0	13.9	11.7	10.8	7.9
미국	19	1.1	-0.1	41.1	40.0	38.9	40.2	41.2	38.8	32.7
터어키	20	0.9	1.1	9.6	8.6	6.7	9.0	8.5	7.5	5.5
스위스	21	0.9	5.9	32.9	32.0	29.7	28.7	27.0	23.5	20.3
멕시코	22	0.1	4.4	18.0	17.9	18.2	15.9	13.6	9.4	7.4
독일	23	-0.3	0.9	26.7	27.0	26.6	26.5	25.8	23.7	21.9
핀란드	24	-0.3	12.9	43.3	43.6	36.2	34.7	30.4	26.3	24.1
체코 공화국	25	-0.6	1.3	12.7	13.3	14.4	13.1	11.4	10.2	10.2
그리스	26	-2.5	7.4	24.9	27.4	22.0	20.1	17.5	13.3	9.6
OECD 평균		2.8	8.6	30.6	27.8	25.1	23.7	22.0	19.2	16.4

자료: OECD (2007) 『OECD at a Glance』

또한, <표 2-6>에 의하면, 한국은 단기간 내에 고등교육자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성취자 비율은 1979-79년과 1995-1999년 사이에 무려 32.8%p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OECD 국가들 중 한국 다음으로 고등교육 성취자 비율이 높게 증가한 나라는 아일랜드이며 그 비율 증가는 19.1%p이다. 즉, 2위와의 차이가 13.7%p 날 정도로 한국의 고등교육 성취자 비율 증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1990-1994년과 1995-1999년 사이 비율 변화는 프랑스의 9.7%p에 이어 한국이 7.9%로 최근에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의 경우, 1995-1999년 사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 중 고등교육 성취자의 비율은 46.2%로 캐나다의 54.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고학력화 현상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물론이고, 두 배 이상 높은 미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보다도 청년층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욱환(1995:95-123)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 특히 대학 교육 열이 낙관적, 낭만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대학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사회계층 이동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국가·사회적으로도 대학교육은 경제발전과 근대화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열은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낙관적 및 낭만적 시각에서 출발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전개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남으로써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족수의 축소, 부모의 교육수준 향상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층의 증가,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격심한 삶의 기회 격차, 대학교육 보편화로 인한 미진

학자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정적 변화 등의 사회적 측면, 그리고 빈약한 대학재정의 보완과 사회불만의 해소방안으로 대학교육의 팽창을 유도한 정부 정책적 측면 등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팽창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2. 고등교육 확대의 부수효과(side effects)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의 입지조건 하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성공의 열쇠이자 신분상승의 주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인적자원 투자이론이 비교적 잘 들어맞는 국가의 전형으로 삼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IT 산업 등 최첨단 산업계에서 국제적 두각을 나타내며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개발주의적 교육관과 고등교육 확대의 긍정적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질적 성장을 담보로 하지 않은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는 오늘날 심각한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이다.

가. 대학교육의 임금프리미엄 하락

여러 가지 이유로 가속화된 대학교육의 팽창은 의도된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 졸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프리미엄이 저하하고, 고용구조와의 불일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연령별로 나누어서 학력별 임금격차를 살펴본 남춘호(2004:83)의 연구에 의하면, 임금격차는 40대>50대>30대>20대 순으로 학력별 임금격차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1980년대 고졸자 임금수준이 대졸자의 40% 정도였던데 비해, 1990년대 후반에는 50%

후반정도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명(2002)의 연구에서도 고졸자 대비 4년제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졸업정원제 이전세대에서는 35-45% 였으나 졸업정원제 이후세대에서는 28-38%로 줄어들었으며, 고졸자 대비 전문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은 30-10% 내외로 격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별·학력별 교육투자 수익 변화를 분석한 이병희 외(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 수익률은 1983년 이후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4년에는 약 9% 정도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학교급별로 특히 대졸자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연령대별로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은 젊은 연령층의 상대적 임금이 1987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구조실태분석 결과(2007)인 아래 <표 2-7>에서도 확인된다. 분석 결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평균임금은 고졸자 평균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경력을 감안한 임금은 2006년의 경우 고졸자의 96.3%로 오히려 고졸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학력별 평균임금과 경력별 임금 (단위: 천원)

학력	경력	'06	'05	'04	'03	'02	'01	'00
고졸	평균	1,731 (100)	1,618 (100)	1,542 (100)	1,456 (100)	1,363 (100)	1,244 (100)	1,186 (100)
	전문대졸	1,764 (101.9)	1,675 (103.5)	1,578 (102.4)	1,489 (102.3)	1,386 (101.7)	1,289 (103.6)	1,226 (103.4)
대졸이상	평균	2,636 (152.2)	2,506 (154.9)	2,347 (152.3)	2,208 (151.7)	2,036 (149.4)	1,894 (152.3)	1,789 (150.9)
	고졸	1,542 (100)	1,443 (100)	1,369 (100)	1,328 (100)	1,233 (100)	949 (100)	943 (100)
전문대졸	2~3년	1,485 (96.3)	1,425 (98.7)	1,281 (93.6)	1,228 (92.5)	1,167 (94.7)	976 (103.2)	964 (102.3)
	미만	1,733 (112.4)	1,614 (111.8)	1,508 (110.2)	1,454 (109.5)	1,312 (106.5)	910 (95.9)	880 (93.3)

자료: 노동부(2007) 『2006년 임금구조실태분석』.

또한, 청년 일자리 총수는 1996년 542만개에서 2003년 461만개로 7년 사이 81만여 개가 감소하였으며,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주요 기업(30대 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산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6년 154만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여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인수·김기민 2005). 결국, 고등교육의 확대로 특히 2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프리미엄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며, 대학 졸업자는 10여년 사이에 20여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²³⁾.

나.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

대학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 간 줄세우기 즉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일류대학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팽창과정에서 사학 중심의 대학이 난립하면서 대학간 목적, 조직, 운영에 있어 대동소이한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학생선발방식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거의 없고, 대학교육의 질과 결과보다 고착화된 대학의 명성과 대학생들의 입학성적에 따른 서열화가 진행되어 왔다(김안나 2003). 이는 학연, 지연 등 연줄망 중심의 사회구조와 맞물려 소위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선별적 프리미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을 가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장수명(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의 최상위 5개 대학은 교육연수나 근속, 경력, 가족배경 등을

23) 학교의 팽창은 학력소지자의 수를 증대시켜, 학력의 투자수익률을 낮추게 되는데, 이 낮아지는 수익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적인 학력의 획득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학교의 팽창에 따른 교육의 투자수익률 감소가 역설적으로 추가적인 학교의 팽창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근대교육체제는 학교팽창과 더불어 학교를 지위경쟁의 장으로 만들게 된다(Collins 1995; 김종업 2003 재인용)

통제한 후에도 매우 유의미한 임금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능 성적이 취업과 월평균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성재(2006)의 연구 결과, 졸업한 대학을 입학 할 당시의 수능성적 상위 20%에 속했던 대학 졸업자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는데 평균 2개월 걸리고 약 162만 9천원의 평균 임금을 받는 반면, 중위 30%에 속했던 졸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약 2.63개월이 걸리고 평균임금이 139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0%에 속했던 졸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약 2.25개월이 걸리고 약 126만 5천원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직기간과 초임 모두 수능성적 상위자들이 우월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장수명(2006)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는 재확인된다. 5개년도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대학 여건 서열과 수능 성적 서열과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여건 서열 뿐 아니라 수능성적 서열상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임금과 소득 프리미엄이 매우 크고 특히 소수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최하위권 대학들의 경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34세 이하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가진 신설 하위권 사립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과 관련된 인적자본의 축적기능, 신호·선별기능 또는 사회자본의 축적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결국, 이들 소위 명문대학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거나, 이들 대학의 교육훈련 질이 다른 대학에 비해 높거나, 혹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이들 소위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연줄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장수명 2002).

따라서, 고등교육의 확대는 기존의 교육을 둘러싼 경쟁의 패러다임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부에 의해 독점되던 고등교육의 기회가 대부분의 계층으로 확대되자, 조기유학 또는

소위 명문대 입학을 둘러싼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사교육에 대한 엄격한 금지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19.2%, 중학교 20.3%, 고등학교 26.2%였으며, 1990년까지도 중학생 31.0%, 고등학교 12.6%에 불과하였다²⁴⁾. 그러나, 1991년 7월 22일 초중고생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1996년 3월 1일 대학원생 과외 허용, 1998년 8월 12일 보충수업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 발표, 그리고 2000년 4월 27일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이어진 사교육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사교육이 크게 확산되었다(양정호 2006).

〈표 2-8〉 사교육 참여 비율

(단위: %)

	1980	1990	1997	1999	2000		2001	2003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인적 자원부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인적 자원부	한국 교육 개발원	한국 교육 개발원
초등학교	12.9	-	72.9	70.9	73.5	70.7	70.5	83.1
중학교	20.3	31.0	56.0	62.8	50.7	59.5	63.9	75.3
고등학교	26.2	12.6	32.0	47.2	39.8	35.6	48.3	56.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3.11.27) 『사교육비 경감방안 보도자료』; 양정호(2007)에서 재인용

〈표 2-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생의 83.1%, 중학생의 75.3%, 고등학교생의 56.4% 정도가 개인과외, 학원, 인터넷과외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현대경제연구소(2007)의 추산에 의하면 국내

24) 1980년 7월 30일에 과외 전면금지 및 보충수업 폐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사교육시장 총규모는 최대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액수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인 31조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기회가 보편화되면서 명문대학에 대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사교육 열풍을 일으켰으며, 경쟁이 경쟁을 낳는 악순환으로 인해 대입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의 시기는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 형식적 기회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의 강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기회의 균등화가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기대심리'를 매개로 한 과도한 교육열과 사학을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성장시켜온 국가의 교육정책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잉학력화'로 인한 교육프리미엄 하락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 즉 대학서열화를 통한 대학 내에서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제3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고등교육의 확대에 의하여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OECD 국가 중 공교육에 대한 사부담율이 가장 높은 현실에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인적 자본이론은 대부나 장학금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취업이후 이를 상환하는 방식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사회의 대부제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대학의 장학제도 또한

매우 제한적이고 등록금 인상률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표 2-9〉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교육지출 (단위: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합계		
	공공	민간	합계	공공	민간	합계	공공	민간	합계
Australia	3.5	0.7	4.2	0.8	0.8	1.6	4.3	1.6	5.9
Austria	3.6	0.2	3.7	1.1	0.1	1.2	5.0	0.4	5.4
Belgium	4.0	0.2	4.1	1.2	0.1	1.2	5.8	0.2	6.1
Czech Republic	2.8	0.4	3.2	0.9	0.2	1.1	4.2	0.6	4.9
Denmark	4.2	0.1	4.3	1.8	0.1	1.8	6.9	0.3	7.2
Finland	3.9	n	3.9	1.7	0.1	1.8	6.0	0.1	6.1
France	3.9	0.2	4.1	1.2	0.2	1.3	5.7	0.4	6.1
Germany	2.8	0.6	3.5	1.0	0.1	1.1	4.3	0.9	5.2
Greece ³	2.1	0.1	2.2	1.1	n	1.1	3.3	0.2	3.4
Hungary	3.3	0.2	3.5	0.9	0.2	1.1	5.1	0.5	5.6
Iceland	5.2	0.2	5.4	1.1	0.1	1.2	7.2	0.7	8.0
Ireland	3.3	0.1	3.4	1.0	0.1	1.2	4.3	0.3	4.6
Italy	3.3	0.1	3.4	0.7	0.3	0.9	4.4	0.5	4.9
Japan	2.7	0.3	2.9	0.5	0.8	1.3	3.5	1.2	4.8
Korea	3.5	0.9	4.4	0.5	1.8	2.3	4.4	2.8	7.2
Mexico	3.6	0.7	4.3	0.9	0.4	1.3	5.2	1.2	6.4
Netherlands	3.3	0.2	3.4	1.0	0.3	1.3	4.6	0.5	5.1
New Zealand	4.4	0.6	5.0	0.9	0.6	1.4	5.6	1.3	6.9
Poland	3.7	0.1	3.8	1.1	0.4	1.5	5.4	0.6	6.0
Portugal	3.8	n	3.8	0.9	0.1	1.0	5.3	0.1	5.4
Slovak Republic	2.6	0.5	3.0	0.9	0.2	1.1	4.0	0.8	4.8
Spain	2.8	0.2	3.0	0.9	0.3	1.2	4.2	0.6	4.7
Sweden	4.5	n	4.5	1.6	0.2	1.8	6.5	0.2	6.7
Switzerland	3.9	0.6	4.5	1.6	m	m	5.9	m	m
Turkey	2.9	0.2	3.1	0.9	0.1	1.0	3.8	0.3	4.1
United Kingdom	3.8	0.6	4.4	0.8	0.3	1.1	5.0	1.0	5.9
United States	3.7	0.4	4.1	1.0	1.9	2.9	5.1	2.3	7.4
OECD average	3.6	0.3	3.8	1.0	0.4	1.4	5.0	0.7	5.7

자료: OECD (2007) 『Education at a Glance』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투자는 GDP 대비 7.2%로 OECD 평균인 5.7%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7.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교육 부담 중 약 39%(GDP의 2.8%)를 민간 부문(주로 가계)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부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부담(GDP의 2.3%) 중 약 78%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의 부담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부담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호주(0.8%), 일본(0.8%), 미국(1.9%) 등 일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대륙 국가와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률은 GDP의 0.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민간 부담률이 높은 유일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 공적 부담 또한 1.0%로 우리나라의 2배에 이르러, 총 고등교육에서 민간부담률은 65.5%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이는 〈표 2-10〉과 〈표 2-11〉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흔히 사민주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대부분 나라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90% 내외이며 국공립대학 수업료는 무료이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등 내륙 조합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90% 내외이며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는 1,000달러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체코 공화국, 헝가리, 슬로박 공화국 등과 같은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22.3%로 낮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수업료 또한 평균 3,623달러로 호주,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1인당 GDP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대학 장학생의 비중도 44.2%로 호주의 27.2%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77%보다는 훨씬 낮다.

〈표 2-10〉 OECD 국가들의 국공립대학 수업료와 장학금

	학생비중	평균수업료 (미국 달러)	전액장학금 수혜자비중	부분장학금 수혜자비율	비수혜자 비중
Australia	99.9	5,289	n	27.2	72.8
Austria	90.0	853	m	m	m
Belgium1	48.8	540	21.5	1.0	77.5
Belgium2	34.2	658	12.0	x(4)	88.0
Canada	m	3,267	m	m	m
Czech Republic	95.0	무료	a	a	a
Denmark	99.7	무료	a	a	a
Finland	87.0	무료	a	a	a
France	90.0	156-462	24.6	x(6)	75.4
Hungary	88.3	351	m	m	m
Iceland	87.0	무료	a	a	a
Ireland	m	m	m	m	m
Italy	93.7	983	9.4	9.5	81.1
Japan	24.9	3,747	n	n	100.0
Korea	22.3	3,623 (1,955~7,743)	9.8	34.4	55.8
Mexico	66.1	m	n	n	100.0
Netherlands	0	a	a	a	a
New Zealand	98.1	2,538	1.0	30.0	69.0
Norway	88.0	무료	a	a	a
Portugal	72.1	868	19.2	n	80.8
Slovak Republic	99.3	무료	a	a	a
Spain	87.4	801(668~935)	20.0	11.0	69.0
Sweden	93.3	무료	a	a	a
Switzerland	95.0	566~1,132	12.8	n	87.2
Turkey	100.0	274	n	n	100.0
United Kingdom	0	m	m	m	m
United States	69.2	4,587	x(5)	77.0	23.0

자료: OECD (2006) 『Education at a Glance』

〈표 2-11〉 OECD 국가들의 사립대학 수업료와 장학금

	학생비중	평균수업료 (미국 달러)	전액장학금 수혜자비중	부분장학금 수혜자비율	비수혜자 비중
Australia	0.1	13,420	n	n	100.0
Austria	10.0	800	m	m	m
Belgium1	51.2	536	18.6	0.9	80.5
Belgium2	65.8	751	x(4)	x(4)	x(6)
Canada	m	m	m	m	m
Czech Republic	5.0	3,449	m	m	m
Denmark	0.3	m	m	m	m
Finland	13.0	무료	a	a	a
France	10.0	500~800	m	m	m
Hungary	11.7	991	m	m	m
Iceland	13.0	3,000 (2,100~4,400)	m	m	m
Ireland	m	m	m	m	m
Italy	6.3	3,992	6.7	1.4	91.9
Japan	75.1	5,795 (4,769~25,486)	n	n	100.0
Korea	77.7	6,953 (2,143~9,771)	3.9	24.5	71.6
Mexico	33.9	m	5.0	n	95.0
Netherlands	100.0	1,565	82.5	2.5	15.0
New Zealand	1.9	3,075	n	26.0	74.0
Norway	12.0	4,000~6,500	m	m	m
Portugal	27.9	3,803	2.4	11.7	85.9
Slovak Republic	0.7	m	m	m	m
Spain	12.6	m	n	4.7	95.3
Sweden	6.7	무료	a	a	a
Switzerland	5.0	m	m	m	m
Turkey	n	9,303~11,961	1.0	14~19	80~85
United Kingdom	100.0	1,794	m	m	m
United States	30.8	17,777	x(9)	87.0	13.0

자료: OECD (2006) 『Education at a Glance』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사정은 이보다 더 나쁘다.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중은 영국(100%)과 네덜란드(100%)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77.7%에 이른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사립대학만 존재하는 대신 사립대학의 평균수업료는 각각 1,794달러와 1,565달러로 우리나라의 6,953달러의 약 1/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수업료는 미국(17,777달러)과 호주(13,420달러)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보다도 더 높다. 사립대학의 수업료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미국의 경우 87%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 장학금 수혜율 또한 28.4%인 우리나라보다 3배 더 높다. 따라서 실제 수업료 부담은 우리나라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실제로 대학의 문호는 넓게 열려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많은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인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확대는 고등교육 내에서의 서열화와 사교육을 통한 명문대 입시경쟁을 심화시켰다. 즉, 학부모의 자발적인 사교육비 지출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요인은 입시경쟁 구조이다. 전통적으로 높은 학부모의 교육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이에 따른 급격한 계층구조의 변동 속에서 사회적 이동의 유일한 준거로 작용했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상승으로 더욱 가열되었으며 이것은 입시경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높은 4년제 대학의 투자수익, 명문대 졸업생에게 집중된 경제적 프리미엄, 그리고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되는 의료 관련 학과나 교육대학의 부상 등의 요인이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팽창한 원인으로 파악된다(우천식 외 2004)

이와 같이 국내 사교육시장의 규모가(최대 33조 5,000억원) 정부의 교육 예산과 맞먹는 상황에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에 따라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이 전체 고교생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사교육 지출의 계층분포를 살펴보면, 분위별로 소득과 지출 상위분위일수록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우천식 외 2004). 이는 통계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2-12〉 자녀 1인당 월평균교육비 지출액(2004년)

(단위: 만원)

	지출 총액	취학전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대학 이상	재수생	휴학생
초졸이하	25.8	8.7	8.4	15.3	50.1	38.1	34.7
중졸	28.7	12.9	11	19.2	53.3	23.8	29.2
고졸	26	14.3	16	26.4	55	38.4	36.8
대졸이상	32.9	17.9	23.7	41.1	67.8	43.3	52
전문관리	36.5	17.6	24.9	44	67.9	50.9	58.5
사무	28.1	18.1	21.9	32	56.8	33.3	40.2
서비스판매	27.7	15	17	26.9	55.6	36.9	38.4
농어업	28.4	9.3	9.9	18.5	60.3	38.1	31
기능노무	24.6	14.3	14.9	23	51.8	33.3	29.5
계	28.7	15.8	18.6	29.3	57.3	38.4	37.9

자료: 통계청(www.kosis.kr)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별·직종별로 자녀 1인당 투자하는 교육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41만 1천원으로 초졸 이하 가구주 가구의 15만 3천원보다 2.7배 더 높으며, 고졸 가구주 가구의 26만 4천원보다도 1.6배 더 높다. 직종별로도 전문직 가구주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44만원으로 기능노무직 가구주 가구(23만원)보다 1.9배, 농어업 가구주 가구(18.5만원)보다 2.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사교육비 차이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예컨대, 유전적 요인, 가정의 학습 분위기, 부르디외가 주장하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아비투스(habitus)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차이들 등-과 어우러져 실질적인 학력격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에는 16.8배로 급증하였으며, 졸업생 만 명당 입학생 수에서도 전국 평균은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해 서울은 약 15명, 서울 강남지역은 25명에 육박하고 있다(김광역 외, 2004).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역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걸쳐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별로도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경근 2005).

요컨대, 사교육비 지출에서의 계층간 차이는 교육기회 배분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교육체제는 교육기회 배분을 계층간 경쟁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계층간의 심각한 교육기회의 격차를 야기하고 기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직접교육비의 부담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배분이 규정됨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에의 접근가능성은 희박해지고 결국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분배는 재생산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교육재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의 민간 부담 및 사교육비의 불평등은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김규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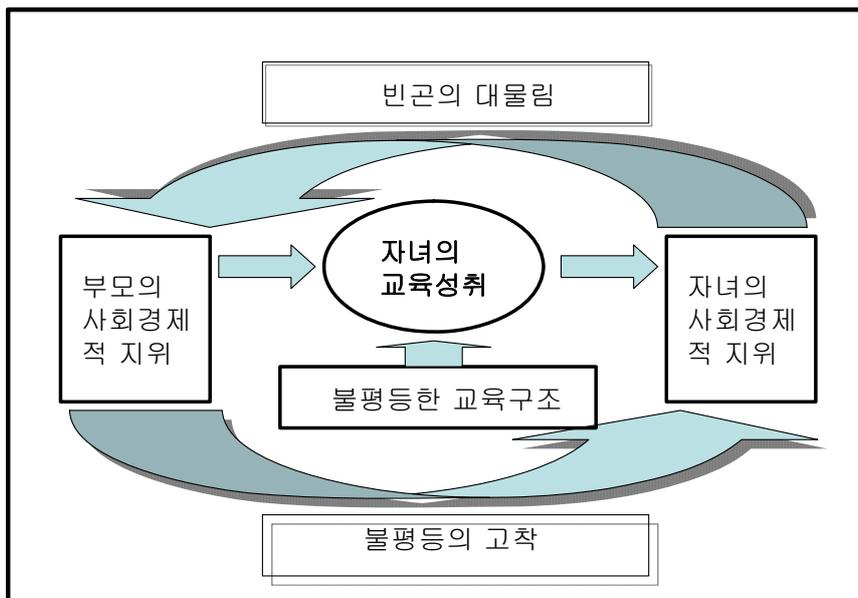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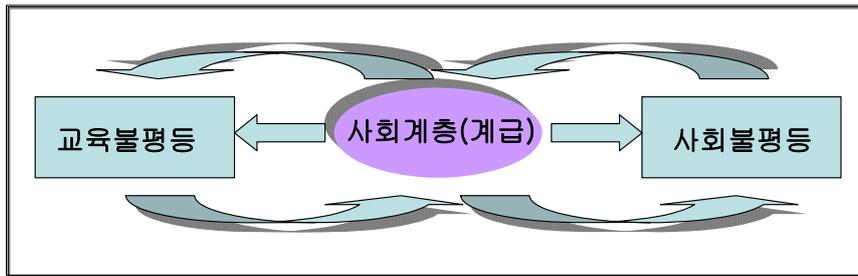
제3절 분석틀: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 평등의 범위와 관련해서,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 가까울수록 교육 평등을 형식적 기회균등에 국한하는 반면, 평등주의적 관점에 가까울수록 교육조건의 평등과 나아가 교육결과의 평등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과 노동시장 지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인적자본이론과 지위획득이론은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진정한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는 반면, 선별이론과 직무경쟁이론은 학력이 능력에 대한 간접적인 신호이거나 훈련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며, 그나마 학력이 계층(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신호나 가능성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갈등론에 기초한 급진파 이론은 교육이 계급에 기초를 둔 권력구조를 수용하는 태도를 배양하거나 또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노동시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계급사회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로 귀결된다. 셋째, 교육 불평등과 계층(계급) 세습과 관련하여, 기능주의적 낙관론은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계층(계급)과 관련 없이 능력에 따른 교육성취가 가능하며, 이러한 교육 성취의 결과는 진정한 능력의 척도로 기능하므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는 계층이나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 성취도에 따라 분배되는 진정한 '개방적 성취사회'가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에 반해 경쟁론이나 갈등론적 관점에서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견제하는 제도이기보다는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하기도 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규정된다.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과 보다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향후 사회에 나아가

부모와 비슷한 상위계층에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위계층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계층적 분화와 고착화는 세습이 아니라 업적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되며,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구조가 공고화된다는 것이다.

모든 이론은 그 나름의 탄탄한 논리와 이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거나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빈곤과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기능론적 관점보다는 갈등론적 관점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이는 해방 이후 교육 확대가 가져다 준 많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가 기능주의자의 기본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성취사회의 요건, 즉 사회 계층(계급)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 사회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으로 교육 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고졸자 대비 대입자의 비율이 8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격차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으로 임금불평등을 비롯한 양극화 현상이 최근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적 측면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력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이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고 있다(김경근 2005, 2006, 2007; 김기석 2005; 김종엽 2003;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류방란 외 2006; 박성재 2006; 방하남 외 2004; 신광영 2005; 오호영 2006; 유한구 2006; 이병희 외 2005; 이혜영 2007; 이혜영·강태중 2004; 장수명 2002, 2006; 차종천 2002). 이론적 측면과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3] 과 같다.

[그림 2-3] 분석틀: 갈등론적 관점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관계



제3장 교육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 1985년~2006년 도시가계조사 분석

제1절 연구문제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했다. 1981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졸업정원제와 1996년 대학정원 자율화 등 지난 20년간 진행되어온 고등교육 확대 정책은 한국의 대학생 수를 단기간에 급속한 속도로 팽창시켰다. 1985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졸자의 수가 19만여 명이었는데 비해, 20년 후인 2004년에는 50만을 넘어 2.5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 또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82%가 대학(전문대포함)에 진학해 대학교육 자체가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보편 교육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²⁵⁾. 한국사회에서 고학력은 빈곤탈출은 물론 성공과 출세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다. 이러한 열망을 배경으로 한 1980년대 고등교육 확대 정책은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고학력 사회로 변화시킨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과연 개인의 빈곤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합적인 수준에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선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빈곤은 교육투자를 제약하고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저학력을 낳고, 반대로 낮

25) 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일반고는 졸업생 71.1%가 4년제 대학에, 15.6%가 전문대에 진학했고,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졸업자도 4년제 대학에 24.7%, 전문대에 46.4%가 진학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은 교육수준은 좋은 직업,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에의 접근을 제약하기 때문에 빈곤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생애주기나 세대구조를 살펴 본다면 교육과 빈곤은 연쇄적 대물림의 구조를 갖는데, 부모의 빈곤은 아이들의 교육박탈로 이어지고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생애주기 내내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세대 이상의 시간범위를 포괄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며, 가족 및 개인수준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득정보가 충분히 축적된 자료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장의 연구범위는 동일 세대 수준에서 개인의 교육수준과 빈곤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개별시점에서 개인의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집합적인 수준에서는 어떠한 빈곤의 지형도를 만들어내는지, 또 장기적인 시계열 속에서 이 지형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즉, 이 연구의 출발점은 교육이고 빈곤은 그 결과로 다루어진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시기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0년이다. 이 시기 동안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지난 20년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위기로 굴절되어 있는데, 1990년대 말은 대량실업과 빈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을 통해 우리사회 빈곤층의 성격과 구성을 변화시킨 변곡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1985년에서 현재까지 시기를 아우르는 본 연구에서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시 주요 관심사이다. 물론, 경제적, 사회적 격변의 와중에도 계층상승의 정당한 경로로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은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쟁적으로 가속화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취업란, 대졸 실업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실업율의 고

학력화²⁶⁾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과연 고등교육 확대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삼스럽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은 개인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가? 고학력은 빈곤위험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해왔는가? 또, 고학력화는 빈곤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우리사회에서 교육효과를 밝히는 기존 연구는 주로 임금, 자녀의 직업지위나 계층지위를 종속변수로 한 것이었다.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학력성취, 노동시장진입, 임금 등을 차별화하며 이를 통해 계층지위의 세습을 낳는 요인으로 작동해왔다는 점을 밝혔다(방하남, 김기현, 2001,2003; 장미혜, 2002; 장상수, 2000) 이 연구들은 주로 개별시점의 횡단 자료를 이용하거나 연령코호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 교육계층화 과정을 분석해왔다.

한편, 빈곤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교육은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과 함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로 포함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논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인의 교육성취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탈빈곤을 위해서는 학력자체와는 상관없는 직업교육이나 기술훈련과 같은 것에 방점이 두어지게 된다. 또, 방법론적으로는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여러 선행변수와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결정의 기제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 개인의 교육기회와 교육성취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또 교육은 직업지위를 매개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개인의 소득은 임금구조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생애주기적, 가족적 상황에 의해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영

26) 통계청에 따르면 고졸 이하 실업자 수는 2000년 30만1000명에서 2006년 20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12만9000명에서 15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실업자 중 대졸자 비중은 2000년 30%에서 2006년 42.9%로 증가한 상태이다 (KOSIS)

향력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다. 개인의 교육수준, 교육지위는 단지 교육년 수나 졸업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과 연동하는 깊은 구조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학력화”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빈곤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고학력화”는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처럼 고학력화 과정 역시 그 진행속도나 범위에 있어서 급속하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다른 사회보다도 짧은 시기에 돌진적으로 이루어진 “고학력화”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소득변수를 포함한 장기시계열 자료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이 연구는 1985년부터 2006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첫째,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로 빈곤위험이 어떻게 차등화되었는지 교육수준별 빈곤지표를 살펴볼 것이다. 빈곤지표(빈곤율, 빈곤갭, FGT 지표)를 교육수준별로 구성하여 교육수준과 빈곤의 관계가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 교육의 빈곤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 교육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오랫동안 교육기회가 제한되었고 고학력기회는 남성에 의해 우선 선점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성취는 성별로 분절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젠더효과). 또, 고등교육확대 이전 시기를 살았던 고연령층의 학력과 취업경험은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연령효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우 서울에 고등교육기회가 집중되어 있고 소득기회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서울로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

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 농촌에 있어 교육분포는 큰 차이를 보인다(지역효과). 요컨대, 성, 연령, (거주) 지역은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조화하는 3대 통제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 살펴보고 이것이 20년 기간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고학력화는 고학력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낮추고 저학력자의 불리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고학력화가 진행되기 이전 대졸자가 갖는 유리함을 다수가 대졸자인 사회에서는 누리기 어렵다. 반면, 20년전 고졸학력은 사회적 평균을 웃도는 것이었지만 다수가 대졸자인 사회에서 고졸자는 교육약자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고학력화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고학력집단일수록 빈곤위험이 낮기 때문에 고학력화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빈곤지형을 변화시켰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IMF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현실이 웅변하듯이 학력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고학력화 과정에서 저학력자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이 더 증가할 수 있으며 고학력자 내부에서도 소득 불안정과 빈곤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빈곤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에서 변동은 두 가지 차원, 즉 교육 분포의 변화에 따른 빈곤위험의 변화 그리고 각 교육수준별로 노출되는 빈곤위험계수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 빈곤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효과를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계수효과)로 구분해서 분석할 것이다. 즉 비교대상이 되는 두 시점을 정하고 교육수준과 빈곤의 분할표를 작성한 후 두 시점의 빈곤을 차이분에서 분포의 차이로 인한 것과 교육수준별 불평등도의 증가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빈곤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육분포 변화가 빈곤에 미친 영향력의 방향과 규모를 분해한다. 이는 앞서 실시한 분해에 포함되어 있었던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황에서 교육의 순 기여효과를 밝힐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교육은 성, 연령, 지역 등의 변수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황에 교육의 기여 정도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2006년의 교육분포를 1985년에 대입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1985년에는 고졸학력만으로도 빈곤위험으로부터 상당정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학력화된 2006년의 교육분포를 대입한다면 빈곤위험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예로, 10년전인 1995년의 교육분포를 2006년에 대입한다면, 이 기간 동안 고학력화 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실업의 고학력화 역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학력은 빈곤방지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고 고학력집단의 빈곤위험은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집단별 빈곤위험계수가 높아진다면 고학력화는 전체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 교육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다른 변수들의 빈곤효과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빈곤율 차이에서 교육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빈곤을 분해를 통해 실제 교육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장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둘째, 성, 연령, (거주) 지역은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조화하는 3대 통제변수이다. 그렇다면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셋째,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포효과와 계수효과로 나누어본다면, 지난 20년동안 분포 및 계수효과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제2절 자료 및 분석변수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85년부터 2006년 도시가계조사이다. 도시가계조사는 1982년부터 생산되었는데, 이 연구는 1985년부터 5년 간격으로,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고등교육 확대 정책의 출발시점을 1981년 졸업정원제로 본다면 1985년은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고학력화 정책이전의 과거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985년은 시작시점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또, 이 다섯 개의 시점 중 1995년까지 세 시점은 경제위기 이전까지의 경향을 보여줄 수 있고, 2000년과 2006년은 위기 이후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자료가 가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한 해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전국 가구 대표도는 35.2% 수준에 불과하다(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²⁷⁾ 또 1인가구, 농어촌가구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석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도시가계자료가 급격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에서 시계열적으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 변화의 폭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전국가계조사로 전환되면서 도시뿐 아니라 전국을 포괄하는 자료로 확대되었지만 이전 시점과

27) 1988년 이전의 통계청 도시가계자료의 경우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의 자료와 단절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부득이하게 1985년 자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비교를 위해서 2006년 자료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추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수준을 비롯한 개인변수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빈곤율 역시 가구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빈곤선은 일차소득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사용되지만, 교육의 효과는 사회보장이전이 이루어진 가처분 소득보다는 일차소득(primary income)²⁸⁾을 통해 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절대빈곤선을 포함하지 않고 상대빈곤선만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절대빈곤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데 1999년 이전에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시가계조사에서 교육변수는 시기별로 다른 방식으로 코딩되어 있는데, 1985년에서 89년기간은 교육년수로, 1990년에서 1997년기간은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학년별 재학중퇴졸업여부를 반영해 세자리 코드로 입력되어 있으며, 1998년이후에는 학년을 대신해서 계열이 포함된 세자리 코드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변수의 통일성을 높이고 학력별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이상의 4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는데, 대졸이상의 경우는 졸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다른 학력의 경우는 중퇴나 재학, 휴학등을 포함해 학력 구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학력으로 구분하였다. 85년처럼 교육년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따라 분류하였다.²⁹⁾

28) 일차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더한 것이다.

29) 1985년에서 1989년기간의 교육코드는 졸업여부가 없이 현재 재학중이거나 중퇴자인 경우 바로 전학년의 코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의 경우 전문대졸의 학력 역시 구분하기 어려운데, 코드북에 따르면 교육기간 14년, 대학 2학년일 경우 전문대로 표시되어 있다. 85년자료에서 교육은 9년까지 중졸, 12년까지 고졸, 14년까지 전문대졸, 그 이상은 대졸이상학력으로 구분되었다.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장

통제변수로 포함된 것은 성, 연령, 지역, 취업지위, 부양가족수 변수이다. 먼저 성별 분류는 “가구주의 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시가계조사의 특성상, 1982년부터 1997년 기간의 자료에서 배우자나 기타가구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가구주가 아닌 개인수준, 특히 여성배우자의 경우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분석단위가 가구주 개인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성별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이고 학력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빈곤의 관계에서 통제변수로서 성별 변수의 영향력은 여성 ‘가구주’라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연령의 경우, 노인가구나 미성년가구의 빈곤영향력을 제외하기 위해 20-59세로 통제하였고 10세기준으로 연령대를 4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의 경우 현재의 자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서울/비서울(기타지역)의 구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취업지위는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영향력이 높은 변수이고 두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취업지위 변수는 공무원/공무원외 사무종사자/기능공및 상용노무자/임시및 일용노무자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그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상인(자영자, 고용주), 무직, 자유업자 등의 범주가 있으나 2003년 이전에는 소득정보가 없으며, 이 연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빈곤과 관련하여 가족형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도시가계조사에서 가족형태를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신뢰도도 떨어진 다. 최근 자료의 경우 배우자를 비롯한 가구원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과거자료는 배우자유무 조차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적 특징은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가구규모(가구원수)와 취

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졸이상’ 범주는 대학 4년 이상이고 졸업일 경우로 한정하였다.

업자수를 정보를 통해 가구주의 부양부담크기를 부양가족수 변수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 거주지역, 부양가족수, 취업지위, 빈곤(여부)이다.

제3절 교육수준별 빈곤지표의 변화(1985-2006)

1. 빈곤지표

1982년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율 측정지표인 Foster, Greer and Thorbecke(1984)의 Headcount index, poverty gap index, Poverty severity index를 사용하였다.

① 빈곤율 Headcount index:(P0)

$$P_0 = \frac{N_p}{N}$$

(N_p: number of the poor N: total population)

② 빈곤갭 Poverty gap index: (P1)

$$P_1 = \frac{1}{N} \sum_{i=1}^N \frac{G_i}{z}$$

$$G_i = (z - y_i) \cdot I(y_i < z).$$

(z: poverty line) (Y_i: dpi) (I: ()안의 표현이 참이면 1, 아니면 0값)

③ 빈곤심도 poverty severity index(P2)

$$P_2 = \frac{1}{N} \sum_{i=1}^N \left(\frac{G_i}{Z} \right)^2.$$

(weighted sum of poverty gap index: 빈곤선 이하 중에서도 극빈층에 weight를 부여함으로써 빈곤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2. 교육수준별 상대빈곤율의 변화

일차소득에 상대빈곤선을 적용했을 때, 전체빈곤율은 1995년까지 서서히 줄어들고,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표3-1>). 교육과 관련하여 본다면, 95년까지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간의 빈곤율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압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95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육집단에서 빈곤율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간격 역시 확대되고 있다.

중졸이하 집단은 1995년까지 빈곤율이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크게 증가하여 2006년 중졸학력자의 1/4이 빈곤층에 속한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학력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여주는데 대체로 2006년 현재 1985년에 비해 2배이상 빈곤율이 증가했다. 빈곤갭과 빈곤심각성 지수 역시 비슷한 변동을 보이는데,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1995년까지 빈곤갭이 감소하다가 다시 2006년에 오면 크게 증가하며,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1995년과 2006년 사이 빈곤갭이 2배정도 증가했다.

다섯 개 시점을 두고 보았을 때 1990년과 1995년의 빈곤율 분포는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물론, 1995년 전체빈곤율이 감소했고 90년에 비해 대졸자의 상황이 약간 유리해지긴 했지만 다른 시기보다 이 두 시기간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교육과 빈곤의 관계만을 두고 보았을 때, 그 이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와 대비해서 1990년대 초반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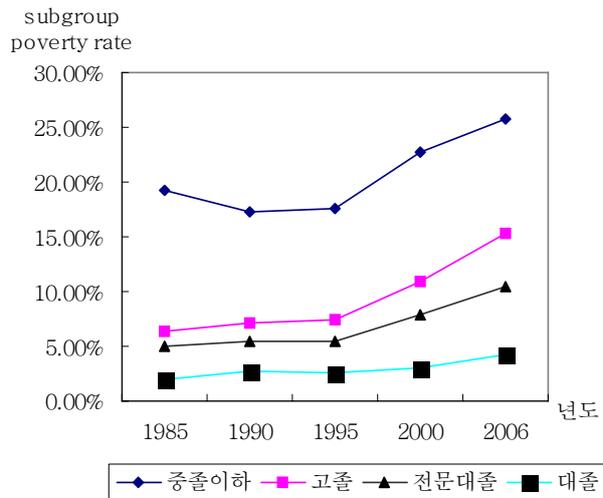
는 것이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추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시기에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 교육수준별 빈곤율, 빈곤갭, 빈곤심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전체	빈곤율	0.103	0.091	0.083	0.108	0.127
	빈곤갭	0.034	0.030	0.025	0.034	0.045
	빈곤심도	0.017	0.017	0.012	0.018	0.024
중졸이하	빈곤율	0.192	0.173	0.176	0.228	0.257
	빈곤갭	0.067	0.053	0.053	0.072	0.091
	빈곤심도	0.033	0.029	0.025	0.036	0.050
고졸	빈곤율	0.063	0.071	0.074	0.109	0.153
	빈곤갭	0.019	0.024	0.021	0.032	0.053
	빈곤심도	0.010	0.014	0.011	0.017	0.029
전문대	빈곤율	0.051	0.054	0.055	0.079	0.104
	빈곤갭	0.015	0.017	0.016	0.029	0.035
	빈곤심도	0.007	0.010	0.009	0.018	0.019
대졸이상	빈곤율	0.019	0.028	0.025	0.030	0.042
	빈곤갭	0.009	0.010	0.008	0.011	0.015
	빈곤심도	0.006	0.006	0.005	0.007	0.00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그림 3-1] 교육수준별 상대빈곤율 변화(1985-2006)



3. 성, 연령, 지역의 효과

교육과 더불어 성, 연령, 지역은 한국 사회 빈곤을 차별적으로 구조화하는 주요변수이다. 성별 변수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남성에게 비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시근로자 가구 20세-59세의 샘플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젠더격차를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남성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와 같은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95년에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였고(5.6%), 빈곤율이 다시 상승한 2000년 이후에도 85년 상황과 유사한 수준의 빈곤율을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우호적이었던 90년대 초반 빈곤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 빈

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직후라고 할 수 있는 2000년의 경우 빈곤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전 시점에 비해 급격하지 않은데 비해 2006년에는 36%로 크게 증가하였다. 30)

연령대별로 빈곤율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중반에 모든 연령대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이며,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이다. 전시기에 걸쳐 40대보다 30대의 빈곤율이 낮고, 50대의 경우 95년 이전에는 40대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령과 빈곤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고 2차항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연령구간을 나누어보았을 때 20대가 높고 30대가 낮고 40대는 다시 높아지고 50대는 다시 낮아지는 3차항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노동지위가 불안정한 연령대인 20대에 가구주가 된 경우 빈곤위험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30, 40, 50대의 빈곤율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와 세대변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95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경우 90년이 최저점이고, 그 이후의 시기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50대의 경우 90년까지는 40대 빈곤율보다 1-2% 정도 높지만, 95년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 40대보다 낮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경우, 전시기에 걸쳐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의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다. 시기별로는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1995년까지 빈곤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난다.

1985년과 2006년 시기를 종합적으로 개관하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교육, 성, 연령, 지역 변수의 모든 하위 범주들에서 빈곤위험이 다시

30) 이는 경제조건이 악화 뿐 아니라 인구학적 변화의 효과가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1985년보다 2006년의 빈곤위험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표 3-2〉 성, 연령, 지역별 빈곤율 변화 (단위: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전체	10.3	9.1	8.3	10.8	12.7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17.3	17.6	22.8	25.7
고졸	6.3	7.1	7.4	10.9	15.3
전문대	5.1	5.4	5.5	7.9	10.4
대졸이상	1.9	2.8	2.5	3.0	4.2
성별					
남자	7.5	6.3	5.6	7.5	7.9
여자	32.7	33.7	27.2	28.1	36.0
연령별					
20대	9.9	11.8	10.4	11.6	13.9
30대	9.5	8.0	7.0	10.2	11.9
40대	11.4	8.6	10.3	11.3	13.4
50대	12.6	10.2	6.8	10.8	12.6
지역별					
서울	8.9	7.7	6.0	9.1	10.3
기타지역	11.2	9.9	9.4	11.6	13.6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교육과 성별을 교차했을 때(〈표 3-3〉), 중졸을 제외한다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전 학력구간에서 빈곤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특이하 게도, 남성가구주의 경우 2000년 이후에도 중졸과 고졸학력의 빈곤격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가구주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중졸, 고졸의 빈곤 위험에 차이가 거의 없고 둘다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인다.

교육과 연령을 교차했을 때, 2006년 20대 중졸자의 빈곤위험은 이례적 이라 할 만큼 높다(56.2%). 중졸이하의 빈곤위험이 25.7%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배 이상의 빈곤위험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이 점은 샘플에 20대 중졸 학력의 가구주가 32명으로 매우 적게 대표되고 있 다는 점과 관련된다.

〈표 3-3〉 교육수준별 성, 연령, 지역의 빈곤격차

(단위: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성별						
남자	중졸이하	14.4	12.0	11.4	17.2	16.3
	고졸	4.9	5.4	5.6	7.8	9.6
	전문대	2.6	3.5	3.6	6.7	7.6
	대졸이상	1.7	1.7	2.1	2.8	3.2
여자	중졸이하	41.7	42.5	34.9	31.2	41.4
	고졸	21.5	25.9	23.8	32.3	41.8
	전문대	26.3	28.1	19.7	17.6	29.1
	대졸이상	6.9	23.0	9.8	6.8	15.0
연령						
20대	중졸이하	14.7	16.2	18.9	24.4	56.2
	고졸	8.8	11.6	7.6	13.1	19.6
	전문대	8.9	11.7	4.5	11.2	10.7
	대졸이상	3.6	8.5	2.4	6.5	8.2
30대	중졸이하	20.6	19.0	18.9	32.8	32.5
	고졸	4.6	6.0	7.6	12.3	18.8
	전문대	3.2	2.9	4.6	8.9	11.2
	대졸이상	1.6	1.5	2.4	3.3	4.3
40대	중졸이하	19.2	15.6	20.2	23.5	33.9
	고졸	6.3	5.4	6.2	10.9	14.7
	전문대	5.1	2.0	2.3	3.1	8.5
	대졸이상	1.9	1.7	1.6	1.1	3.9
50대	중졸이하	20.6	17.8	12.5	18.5	19.6
	고졸	3.8	2.5	1.5	4.4	8.8
	전문대	5.9	2.0	1.5	1.8	12.1
	대졸이상	1.9	1.6	0.7	2.9	3.2
지역						
서울	중졸이하	19.4	14.7	16.8	21.5	21.7
	고졸	6.0	7.6	3.9	8.6	14.2
	전문대	8.4	4.3	3.4	10.5	9.2
	대졸이상	2.0	1.9	2.8	2.7	3.6
기타지역	중졸이하	19.2	18.4	17.3	23.2	26.8
	고졸	6.5	6.8	6.8	12.0	15.6
	전문대	3.3	5.8	5.8	7.0	10.8
	대졸이상	1.9	3.8	3.8	3.2	4.6

자료: 통계청, 『도시가지조사』 원자료

있을 때의 빈곤위험을 비교함으로써 가상적으로 1980년대 20대 가구주의 생애주기별 빈곤위험을 구성해볼 수 있다.

85년 20대의 경우 중졸학력은 빈곤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학력집단의 경우 95년에는 감소했다가 06년에는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85년 30대의 경우,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2006년에 빈곤율이 고졸자를 넘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역시 2006년 샘플에서 전문대졸자의 빈곤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이터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2004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50대 전문대졸의 빈곤율이 6.3%로 크게 뛰어올랐다는 점에서 고학력 사회에서 고연령 전문대졸(85년 당시 전문대졸자수 73,927명) 근로자의 불리함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절 교육의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

1. 교육과 빈곤: 빈곤변화율의 분해

가. 분해방법

빈곤율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교육의 효과는 두 가지 차원, 즉 두 시점 간 교육 분포의 변화로 인한 기여분과 교육집단별 빈곤위험계수가 다르므로써 나타나는 기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시점 y_1 과 y_2 에서의 빈곤율 변화는 빈곤을 설명하는 변수의 분포효과와 계수효과로 구분해서 설명될 수 있다(Ishikura, 2007)³¹⁾

31) 이시쿠라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고용패턴(정규직/비정규직 비율)변화로 인한 효과와 소득불평등효과(정규직/비정규직의 차등보상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Ishikura,

먼저, 두 시점간의 빈곤율 차이를 4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교육변수의 변화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환이 필요하다. 두시점간의 빈곤율 차이는 각시점에서 교육범주별 빈곤율 차이를 더한 값이다(Eq.1)

$$P^{t+1} - P^t = (P_{mp}^{t+1} - P_{mp}^t) + (P_{hp}^{t+1} - P_{hp}^t) + (P_{cp}^{t+1} - P_{cp}^t) + (P_{up}^{t+1} - P_{up}^t) \quad (Eq.1)$$

(mp, hp, cp, up: 빈곤층내에서 각 학력수준이 차지하는 비율
mp: 중졸빈곤율, hp:고졸빈곤율 cp:전문대졸 빈곤율 up:대졸빈곤율)

둘째, 두 시점에서 각 교육범주의 빈곤율 차이는 집단의 비율변화에 집단 i의 빈곤율 웨이트를 준값 (Eq.2의 좌측항)와, 두시점간 집단의 빈곤율 증가분(Eq2의 우측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두 시점간의 빈곤 변화율 (예:(2006년 빈곤율-2000년빈곤율)/2000년빈곤율)은 각 교육수준의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를 더한 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 32)

$$P_{ip}^{t+1} - P_{ip}^t = (P_i^{t+1} / P_i^t - 1) P_{ip}^t + (P_{ip}^{t+1} / P_{ip}^t - P_i^{t+1} / P_i^t) / P_{ip}^t \quad (Eq.2)$$

$$(P_{ip}^{t+1} - P_{ip}^t) / P_{ip}^t = [(P_m^{t+1} / P_m^t - 1) P_{mp}^t / P_{ip}^t + (P_h^{t+1} / P_h^t - 1) P_{hp}^t / P_{ip}^t + (P_c^{t+1} / P_c^t - 1) P_{cp}^t / P_{ip}^t + (P_u^{t+1} / P_u^t - 1) P_{up}^t / P_{ip}^t] \quad (Eq.3)$$

$$+ [(P_{mp}^{t+1} / P_{mp}^t - P_m^{t+1} / P_m^t) P_{mp}^t / P_{ip}^t + (P_{hp}^{t+1} / P_{hp}^t - P_h^{t+1} / P_h^t) P_{hp}^t / P_{ip}^t + (P_{cp}^{t+1} / P_{cp}^t - P_c^{t+1} / P_c^t) P_{cp}^t / P_{ip}^t + (P_{up}^{t+1} / P_{up}^t - P_u^{t+1} / P_u^t) P_{up}^t / P_{ip}^t]$$

(i=학력집단 m, h, c, p)

2007). 여기서의 설명은 이쉬쿠라의 예를 따른 것이지만,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 분해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Clogg,1993;Kitagawa, 1964, 1955; Das Gupta, 1978)
32) Eq.3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분포효과, 두 번째 []항은 불평등효과

나. 분해결과

5년 간격으로 빈곤율 변화(change rate)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표 3-4> 와 같다. 구간별 빈곤증감율($(Et+1-Et)/Et$)은 두 번째 줄(row)에 제시되어 있다. 1985년 대비 90년의 빈곤율은 11.7%감소하였고 2000년 대비 2006년의 빈곤율은 18%증가하였다. 85년부터 95년까지 빈곤율 변화는 주로 분포효과에 의해 주도되면서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다가, 95년을 정점으로 불평등효과가 빈곤율 증가를 주도하게 된다. 빈곤율 변화가 가장 큰 시기는 역시 경제위기의 효과가 극적이었던 95년에서 00년 사이 기간인데, 이 시기에도 교육분포는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빈곤위험계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빈곤율 변화를 주도하였다.

구간을 10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85년 대비 95년의 빈곤율은 19.3% 감소하였으며, 반면 2006년에는 23.4% 증가한다. 이와 같은 변화를 교육변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해했을 때, 85년에서 95년 사이 -19.3% 변화율은 교육분포의 변화로 인해 기여분 -22.1%와 불평등효과로 인한 2.8%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빈곤감소율 19.3%는 교육분포가 유리하게 변동함으로써 발생한 분포효과 -22.1%와 학력별 빈곤위험의 증가로 인한 불평등효과 2.8% 의 결과이다. 이 기간의 빈곤개선효과 대부분이 분포효과에서 기인했다(114.5%).

반면 그 다음 시기에서는 1995년 대비 2006년 사이 빈곤율은 52.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1995년 8.3%, 2006년 12.7%) 대부분 불평등효과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이전 시기와는 역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85년에서 06년 전체기간을 두고 보면, 분포효과보다는 불평등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빈곤증가의 249.1%가 하위집단의 빈곤위험계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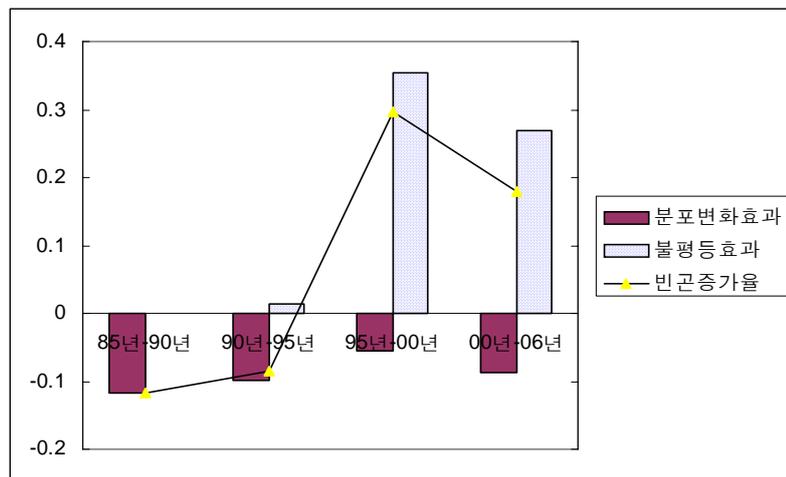
〈표 3-4〉 빈곤율 변화의 분해: 교육변수의 효과

빈곤율변화 분해	85년- 90년	90년- 95년	95년- 00년	00년- 06년	1985-1995		1995-2006		1985-2006	
	빈곤 변화율(전체)	-0.117	-0.086	0.297	0.180	-0.193	100%	0.529	100%	0.234
교육분포변 화효과	-0.118	-0.099	-0.056	-0.088	-0.221	114.50%	-0.14	-26.47%	-0.349	-149.14%
교육 불평등 효과	0.001	0.013	0.353	0.268	0.028	-14.50%	0.669	126.47%	0.583	249.1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표 3-4〉를 그림으로 제시한 〈그림 3-3〉은 지난 20년 동안 교육 분포는 지속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였고, 교육계수(불평등효과)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95년에서 2000년 구간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불평등 효과가 극적으로 증가해 빈곤율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3-3] 빈곤율 변화 : 분포효과와 불평등 효과(1985-2006)



교육수준별로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를 분해하면 아래의 <표 3-5>와 같다. 1985년에서 1995년 빈곤율변화는 중졸이하 저학력층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교육분포에서 중졸이하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이 집단의 빈곤위험도 감소했다. 중졸이하 다른 집단의 빈곤율 변화가 크지 않았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저학력 집단에서의 빈곤감소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표 3-5> 교육수준별 분포효과 및 불평등 효과의 변화(1985년-2006년)

1985-1995			
	분포효과	불평등효과	합계
중졸이하	-0.271	-0.037	-0.308
고졸	0.013	0.045	0.058
전문대	0.022	0.005	0.026
대졸	0.15	0.015	0.030
합계	-0.221	0.028	-0.193
1995-2006			
중졸이하	-0.163	0.148	-0.014
고졸	-0.023	0.381	0.358
전문대	0.026	0.077	0.103
대졸	0.019	0.063	0.082
합계	-0.140	0.669	0.529
1985-2006			
중졸이하	-0.414	0.095	-0.319
고졸	-0.003	0.350	0.346
전문대	0.041	0.069	0.111
대졸	0.027	0.069	0.096
합계	-0.349	0.583	0.23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그에 비해 1995년에서 2006년 동안 저학력집단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분포개선효과를 불평등증가 효과가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의 빈곤율은 1995년 대비 2006년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분포효과는 16%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집단내 불평등 효과 증가분은 15%로 유리한 분포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5년이후 불평등효과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고졸집단이다. 전문대집단과 대졸집단에서도 역시 불리함이 크게 증가했지만, 고졸집단의 경우 이전 시점 대비 35% 빈곤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시기 빈곤율 증가분은 고졸집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대부분 위험계수의 증가, 즉 불평등효과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과 2006년 두 시점을 비교하면, 중졸집단의 감소가 빈곤율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면 고졸집단의 빈곤위험 증가가 전체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졸과 대졸의 경우 집단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면서 분포효과도 증가했고, 또 과거보다 빈곤위험이 높아짐으로써 불평등효과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빈곤설명 로짓모형

앞에서의 변화율 분해는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변수만을 사용해 빈곤변화율(rate change)을 분해한 것이다. 2)절에서도 지적했듯이 빈곤은 복합적인 결정요인을 갖고 있고 성, 연령, 지역 등 여러 변수의 영향 하에 있다.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중에서 교육의 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모델을 구성, 종속변수를 빈곤으로 하고 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 변수를 포함하고 가구 특징으로는 부양가족수 변수를 포함시켜 로짓식을 구성하였다. 변수별 기술통계는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장에서 로짓분석은 빈곤을 설명하는 적절한 모델을 찾기 위한 것이기 보다 로짓분해를 위해 선행작업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아래의 분석 결과는 변수별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표 3-7〉).

$$\text{Model: Logit } (P_i / (1-P_i)) = \alpha + \beta_1 \text{성별} + \beta_2 \text{연령} + \beta_3 \text{교육수준} + \beta_4 \text{지역} \\ + \beta_5 \text{취업지위} + \beta_6 \text{부양가족수}$$

〈표 3-6〉 독립변수의 분포 및 평균 (1985-2006)

		85년	90년	95년	00년	06년
성별	남	0.887	0.897	0.874	0.841	0.827
	여	0.113	0.102	0.126	0.159	0.17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20대	0.280	0.199	0.158	0.124	0.063
	30대	0.393	0.457	0.443	0.399	0.354
	40대	0.234	0.247	0.246	0.311	0.376
	50대	0.093	0.097	0.153	0.166	0.2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	중졸이하	0.374	0.282	0.228	0.190	0.151
	고졸	0.409	0.464	0.429	0.435	0.403
	전문대졸	0.048	0.086	0.092	0.117	0.132
	대졸	0.170	0.168	0.251	0.258	0.3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	기타지역	0.628	0.651	0.688	0.694	0.747
	서울	0.372	0.349	0.312	0.306	0.2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지위	공무원	0.099	0.110	0.088	0.088	0.096
	사무직	0.266	0.262	0.350	0.348	0.376
	상용직	0.531	0.545	0.472	0.449	0.414
	임시일용직	0.104	0.083	0.090	0.115	0.1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양 가족수(명)		2.885	2.545	2.202	2.073	1.87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표 3-8〉 연도별 로짓분석(1985년~2006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b	exp(b)								
성(남=0)	2.003	7.408	2.157	8.643	2.175	8.804	1.585	4.880	2.209	9.114
연령(20대=0)										
30대	-0.248	0.780	-0.420	0.657	-0.707	0.493	-0.540	0.583	-0.330	0.719
40대	-0.646	0.524	-0.912	0.401	-1.101	0.332	-1.005	0.366	-0.683	0.505
50대	-0.560	0.571	-0.684	0.505	-1.483	0.227	-1.192	0.304	-0.915	0.401
교육(중졸=0)										
고졸	-0.597	0.550	-0.548	0.578	-0.654	0.520	-0.539	0.583	-0.398	0.672
전문대졸	-0.447	0.640	-0.476	0.621	-0.739	0.477	-0.490	0.613	-0.348	0.706
대졸	-1.024	0.360	-0.818	0.441	-0.896	0.409	-0.880	0.415	-0.810	0.445
지역(지방=0)	-0.133	0.875	-0.168	0.845	-0.313	0.731	-0.181	0.835	-0.437	0.646
취업지위(공무원=0)										
사무직	0.814	2.258	1.761	5.820	1.343	3.830	1.581	4.859	2.126	8.384
기능상용직	1.544	4.683	2.474	11.872	2.097	8.143	2.494	12.107	2.996	20.001
임시일용직	3.127	22.807	3.548	34.749	3.125	22.762	3.631	37.745	4.307	74.223
부양가족수	0.334	1.397	0.411	1.508	0.532	1.702	0.494	1.638	0.611	1.842
상수	-4.514		-5.297		-4.766		-4.774		-5.592	
N	31370		33218		38460		33072		33611	
pseudo-R ²	0.1522		0.1924		0.2045		0.1907		0.2535	

* 모든 변수가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교육변수의 효과를 보면, 전 시기에 걸쳐 중졸이하 대비 대졸이상 학력자의 빈곤위험은 55-60% 정도 낮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 전문대졸자의 경우는 30-40%정도 낮게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1995년을 제외하면) 모든 시기에 고졸자의 빈곤위험이 전문대졸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앞의 분할표 분석의 결과와는 상당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연령이나 취업지위 등 다른 변수의 효과가 학력의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연령층의 경우 전문대졸업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취업지위 등에서는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지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성, 연령, 지역의 경우, 분할표 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성가구주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남성가구주보다 7-9배 정도 높은 빈곤위험을 보인다(예외적으로 2000년에만 5배로 낮추어진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3-4배 정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통제된 상황에서 2배 이상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여성가구주가구에 분석에 포함된 다수의 변수들에서 총체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지위의 경우,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집단의 빈곤위험이 높다. 특히 2000년 이후의 빈곤위험비율은 매우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체노동자층에서 빈곤위험이 크게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은 공무원집단의 74배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부양가족수의 경우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배우자(여성)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자녀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한 빈곤위험은 상쇄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로짓분석을 통한 빈곤을 분해: 구성효과와 계수효과 분석

가. 분해방법

빈곤율은 인구학적 변화와 같이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변화되기도 하고, 또 각 변수와 관련된 빈곤위험이 변화할 경우에도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계부양을 맡고 있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다면 소득잠재력(earning potential)이 높기 때문에 이 가구의 빈곤위험은 다른 가구보다 낮다. 따라서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20년동안 경험처럼 교육분포(distribution)가 고학력화 될 경우 이런 변화는 빈곤위험을 낮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composition effect). 한편, 특정 교육수준별 보상수준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빈곤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coefficient effect). 즉, 80년대의 대졸자의 소득보상수준과 2000년의 대졸자의 소득보상수준이 다르고 빈곤위험도가 상이하다고 할 때, 이러한 차이는 빈곤율에 차등화된 영향력을 미친다.³³⁾ 앞절의 로짓식 결과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빈곤을 분해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빈곤결정함수는 종속변수 Y 가 이분(binary)변수이고, 로지스틱 회귀식은 비선형식이기 때문에, 선형회귀의 원칙은 유지하되 X 변수의 평균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 비선형 회귀 분석에서 분해는 X 의 평균값이 아니라, 전체 X 변수의 로짓추정값 평균을 사용하고, 다른 집단의 분포를 사용할 경우에도 로짓추정값을 이용한 평균을 사용한다.

페어리(Fairlie, 2005) 방식에 따라 분해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변의 첫번째 항은 변수구성(composition), 즉 분포의 차이가 빈곤격차에

33) 이와 관련된 방법론으로는 Oaxaca(1973), Blinder(1973), Gomulka and Stern(1990), Picot and Myles(1996), Fairlie(1999, 2005)을 참조할 것.

기여하는 부분이고($X_i^w X_i^b$ 차이) 두 번째항은 빈곤결정함수의 차이($\widehat{\beta^w \beta^b}$ 의 차이)가 빈곤격차에 기여하는 계수효과, 즉 불평등효과부분이다. 34)

$$\bar{Y}^w - \bar{Y}^b = \left[\sum_{i=1}^{N^w} \frac{F(X_i^w \hat{\beta}^w)}{N^w} - \sum_{i=1}^{N^b} \frac{F(X_i^b \hat{\beta}^w)}{N^b} \right] + \left[\sum_{i=1}^{N^b} \frac{F(X_i^b \hat{\beta}^w)}{N^b} - \sum_{i=1}^{N^b} \frac{F(X_i^b \hat{\beta}^b)}{N^b} \right],$$

※F는 로지스틱 함수, N은 총케이스수

우변첫항의 베타값을 집단 B로 고정시키고 집단 W와 B의 분포차이를 계산하고 두 번째항(II)에서는 집단W 계수를 대신해 B계수를 포함시키는 방법 역시 사용될 수 있다.

$$\bar{Y}^w - \bar{Y}^b = \left[\sum_{i=1}^{N^w} \frac{F(X_i^w \hat{\beta}^b)}{N^w} - \sum_{i=1}^{N^b} \frac{F(X_i^b \hat{\beta}^b)}{N^b} \right] + \left[\sum_{i=1}^{N^w} \frac{F(X_i^w \hat{\beta}^w)}{N^w} - \sum_{i=1}^{N^w} \frac{F(X_i^w \hat{\beta}^b)}{N^w} \right],$$

그러나 비교대상 집단의 순서를 바꿀 경우, 선형회귀와는 달리, 비선형 회귀에서는 로짓 계수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분포효과와 계수효과의 크기가 변화한다. 이 경우, 대안은 집단을 교대로 바꾸어서 추정한 값의 평균을

34) 분포효과와 불평등 효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과 2006년의 빈곤율 차이에서 분포효과의 변화로 인한 빈곤율변화와 계수효과로 인한 빈곤율 변화를 분해하려면,

① composition 효과

$$L = \beta X + u$$

$$L = \ln(P/1-P), P = \Pr\{Y=1/X\}$$

1987년의 회귀계수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수분포를 2006년으로 변화

$$L^* = \beta_{87} X_{06} + u$$

$\bar{P}^* - \bar{P}_{87}$: 1987년과 2006년 \bar{P} 의 차이중 분포의 변화로 인한 차이

② coefficient 효과

$L_{06} = \beta_{06} X_{06}$ then, \bar{P}_{06} 을 계산

$\bar{P}_{06} - \bar{P}^*$: 1987년과 2006년 \bar{P} 의 차이중 계수의 변화로 인한 차이

취하거나, 두집단을 풀링한 로짓값을 웨이트(B)값으로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풀링값보다는 두개 집단의 순서를 차례로 바꾸어 평균값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개별변수의 분포를 바꾸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W집단의 회귀식에 B집단의 X1변수의 분포를 대입하는 방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집단 W와 B의 케이스수(N)가 동일하다면³⁵⁾, W의 로짓추정평균에서 X1변수만을 B집단의 분포로 바꾸었을 때의 로짓추정평균을 빼면 B집단의 X1변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W의 X2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B집단의 로짓식에 W집단의 X2를 대입하여 분석하면 된다.³⁶⁾ 이와 같은 분석이 갖는 잇점은 개별변수들의 기여를 모두 더하면 전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frac{1}{N^B} \sum_{i=1}^{N^B} F(\hat{\alpha}^* + X_{1i}^W \hat{\beta}_1^* + X_{2i}^W \hat{\beta}_2^*) - F(\hat{\alpha}^* + X_{1i}^B \hat{\beta}_1^* + X_{2i}^W \hat{\beta}_2^*)$$

$$\frac{1}{N^B} \sum_{i=1}^{N^B} F(\hat{\alpha}^* + X_{1i}^B \hat{\beta}_1^* + X_{2i}^B \hat{\beta}_2^*) - F(\hat{\alpha}^* + X_{1i}^B \hat{\beta}_1^* + X_{2i}^B \hat{\beta}_2^*).$$

35) 대부분의 경우 비교대상 집단의 케이스 수는 다르다. 이 경우 적은 수의 샘플사이즈를 가진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많은 케이스 집단에서 동일한 수만큼 무작위 표집을 한다. 그 다음 predicted probability의 순서대로 양집단을 배열하고 매칭을 시켜 데이터셋을 새로 구성하는데, 무작위샘플링을 반복수행함으로써 샘플의 수를 늘려 여기서 추정된 값의 평균을 사용하게 된다(Fairlie, 2003)

36) 아래의 식에서 베타값은 두집단을 풀링한 데이터의 베타값이다. 풀링값을 사용하더라도 원리는 동일하다.

나. 분해 결과

앞에서 소개한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06년간의 빈곤율 변화를 분석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7〉 연도별 빈곤율차이의 분해

	1985-1995	1995-2006	1985-2006
전체차이 ¹	1.1	-4.4	-3.3
분포변화효과	3.5	2.1	6.2
계수변화효과	-2.4	-6.5	-9.5
준거년도(앞연도)			
분포효과의 분해			
성	-0.7	-1.1	-1.4
연령	0.4	1.2	0.4
교육	0.7	0.7	1.2
취업지위	0.6	-0.3	0.1*
지역	-0.1	0.0	-0.2
부양가족수	1.6	1.2	2.5
총분포변화효과	2.6	1.7	2.5
준거년도(뒷연도)			
분포효과의 분해			
성	-0.5	-1.3	-2.1
연령	1.0	1.3	3.8
교육	1.0	0.8	1.8
취업지위	0.5	0.1**	0.3
지역	-0.5	-0.1	-1.2
부양가족수	3.0	1.6	7.2
총분포변화효과	4.4	2.3	9.8

* P <0.05 에서 not significant

** P <0.05 에서 significant (Z=2.08)

다른 변수들은 P <0.001수준에서 의미있음

1. 전체차이는 로짓식으로 추정된 앞연도의 빈곤율에서 뒷연도를 뺀 것임.

〈표4〉의 차이는 빈곤증감율이고, 여기서는 빈곤율차이값임.

부호의 방향이 〈표4〉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표4〉의 경우 뒷연도에서 앞연도를 빼었이기 때문임.

2. 준거년도는 coefficient 를 사용하는 연도를 의미함, 다른 연도의 분포를 대입함

먼저 <표8>의 분해결과를 변수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빈곤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성, 연령, 부양가족수(자녀수))에서의 분포 변화가 우리 사회 빈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값의 크기가 보여주듯이 이들 인구학적 변수들에서의 분포의 변화는 빈곤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성별 변수의 경우 모두 (-)값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값의 크기가 크다. 지난 20년동안 이혼, 별거, 사별 등을 통해 빈곤에 취약한 여성가구 주가구의 수가 증가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과 부양가족수 역시 전년도에 걸쳐 (+) 값을 갖고 있는데, 지난 20년동안 근로연령층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부양가족수의 감소는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취업지위의 분포변화는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다른 시기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취업지위 변수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취업지위 구분이 다소 자의적이라는 문제점도 있고, 또 “도시근로자”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직변수의 효과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역변수는 성별변수와 더불어 분포의 변화가 빈곤을 악화시킨 양대변수이다. 지역변수와 관련된 해석은 주의를 요하는데, 지난 20년동안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서울의 과밀화, 지역 낙후성을 가속화시킨 요인인데, 도시가계조사의 샘플에서는 서울의 인구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샘플링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지역의 비례를 조정할 다른 연구들을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교육은 모두 (+)의 값을 갖고 있는데, 모든 시기에 걸쳐 교육분포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 시기에 걸쳐 분포효과는 빈곤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동(+값을 가짐)할 뿐 아니라, 양 시기 모두 유사한 값을 가지

고 있다(준거연도를 앞시점으로 잡았을 때는 0.7, 0.7 뒷시점으로 잡았을 때는 평균 1.0, 0.8). 그러나 두기간의 분포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이 빈곤을 차이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1985년에서 1995년 기간에는 분포효과의 개선에 24% (0.85/3.5)기여하고, 1995년에서 2006년 기간에는 35.7% (0.75/2.1) 기여했다.³⁷⁾ 두 번째 시기는 전반적인 분포효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빈곤을 개선하는데 있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한편, 계수효과를 포함한 전체빈곤율 변화에서 교육분포의 효과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준거연도를 앞년도로 했을 때, 교육분포 효과는 전체변화효과에서 1985-1995년 시기 11.9%(0.7/5.9)를 차지했으나 1995-2006년 시기에는 8.1%(0.7/8.6)로 감소했다.

제5절 소 결

이 장에서는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고 분석은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근로연령층에 있는 20-59세 인구샘플을 대상으로 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율 변화는 시기별 전체빈곤율의 변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1995년까지 모든 집단에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1995년 이후 모든 집단에서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교육집단별로 빈곤율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간격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집단별 빈곤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7) 두 개의 준거연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둘째, 성, 연령, (거주) 지역은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조화하는 3대 통제변수라고 할 때,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먼저 남녀 모두 중졸이하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아 다른 교육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남성가구주의 경우 중졸과 고졸 학력의 빈곤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여성가구주의 경우 2000년 이후 중졸과 고졸의 빈곤위험에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중졸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늘 35%에서 4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2000년 이후 고졸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급속히 높아져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남성가구주와 달리 여성가구주는 빈곤위험에서 학력순위가 종종 붕괴되곤 하는데, 여성가구주의 경우 학력 이외의 다른 요인이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50대의 경우 전문대학력과 고졸학력의 빈곤순위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전문대졸 샘플의 크기가 작고 집단 특성상 고졸학력과 전문대졸 학력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빈곤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고 다른 변수들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교육수준별 특징이 그대로 관찰되고 있다.

셋째,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포효과와 계수효과로 나누어본다면, 지난 20년동안 분포 및 계수효과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지난 20년동안 교육분포는 지속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였지만, 교육변수의 위험계수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 시기별로는, 1995년 이전시기에는 분포효과의 크기가 크고 불평등효과(계수효과)의 크기가 작았지만 그 후에는 이 관계가 역전된다. 1995년을 기점으로 분포효과의 유리함을 거대한 위험계수효과가 상쇄함으로써

하위집단별 빈곤이 큰 비율로 증가했다. 즉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고학력화의 빈곤개선효과는 상당정도 약화되고 오히려 각 교육하위집단별 빈곤위험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위기 전후 차이를 보면, 각 교육집단에서 빈곤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위험계수효과가 변화율의 1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 연령, 지역등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로짓분해) 즉, 통제 후 분해결과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고학력화는 꾸준히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육분포의 빈곤개선효과는 궁극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 계수효과가 분포효과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분석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분포 및 계수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전시기에 비해 1995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고학력화로 인한 빈곤개선효과는 감소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사회 고학력화는 교육분포를 고도화시킴으로써 빈곤을 감소시켜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교육집단의 빈곤위험계수가 상승하는 과정이 병행됨으로써 고등교육 자체의 빈곤방어력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복합적으로 빈곤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고학력의 빈곤위험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어도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고학력 자체만으로는 빈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 “고등교육을 향한 질주”가 절반의 성공을 낳았음을 시사한다. 즉, 지난 20년 동안 고학력화는 저학력집단의 상대적 규모를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지만,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 같은 우호적 효과를 상쇄해 버렸다. 전체적인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하위 교육집단에서 빈곤율이 증가했고 교육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빈곤율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대졸이상 범주 내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가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대졸이후의 학력 차이는 고려되지 못했으며, 대졸자들 내부의 차이 역시 고려하지는 못했다. 특히, 대졸자가 다수가 된 사회에서는 고학력자체보다 학벌, 즉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대학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이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학력수준만을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수도권대학/지방대학 등 대졸자 내부의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동원해 좀더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한계상 전문대졸과 관련된 지표는 불완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고졸과 대졸 사이에서 전문대졸은 어떤 시기에는 고졸과 유사하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대졸과 유사하다. 전문대졸자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전문대졸의 학력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비선형모델에 대한 분해방식으로 Fairlie(1999, 2005)에 의거, 샘플크기를 조정한 후 분포와 계수를 바꾸는 시뮬레이션 방식을 채택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블라인더 옥사카의 분해방식을 비선형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분석 방법을 사용한 분해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한데(Bartus, 2006³⁸) 이 연구에서 검토,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빈곤율분해의 방법론적 정교화를 위해 추후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38) Bartus의 방법은 Stata ado 파일로는 gdecomp로 모듈화되어 있다.

제4장 교육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985~2006년 도시가계조사 분석

제1절 연구문제

선형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간에 교육이 소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라는 데는 거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이후 산업화 단계에서 급격한 사회적 이동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았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자식이 단순노동보다는 기술직에, 기술직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열망은 곧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으며, 이는 최근에 이르러 80%를 초과하는 대학진학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전통과 골드러쉬를 통한 부의 축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자원-인구과밀국의 특징과 맞물려 더욱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단 산업화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이 줄어들고, 특히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고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다. 이병희 외(2005)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학력별 교육투자 수익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 수익률은 1983년 이후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4년에는 약 9% 정도까지 하락하였으며, 학교급별로 특히 대졸자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연령대별로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은 젊은 연령

층의 상대적 임금이 1987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투자 수익률은 2000년대 들어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본 연구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의 변화를 시기별·연령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개인적·노동시장적 특성 대신, 학력에 따른 가구의 일차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단위 대신 가구단위에 주목하는 것은 교육이 개인의 귀속적 속성으로 귀착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복지의 수혜자는 개인이 아니고 가구라는 점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학력의 차이는 결혼과 가구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동질혼(homogemy)’적 경향으로 인하여 개인, 특히 가구의 학력은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의 교육과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뒷장에 이어질 가구소득(가족배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1985~2006년 기간 동안 가구주 연령별 소득불평등 추이와 가구의 교육수준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 기간 동안 소득과 교육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구의 교육수준이 가구의 일차소득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기간 동안 가구주 학력이 가구 소득을 설명하는 정도와 각 교육수준별 소득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 교육수준별 소득격차가 상대소득 변화에 의한 것인지, 내부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혹은 전체적인 불평등 증감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마치

막으로 엔트로피지수(GE(0))의 분해를 통해 학력별 소득불평등도의 내부 구성(집단내 소득불평등+집단간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고, 기간 동안의 불평등도 변화의 요인(불평등도의 변화의 순효과+집단구성의 변화효과+상대 소득 변화효과)을 밝히고자 한다.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앞서 3장과 마찬가지로 1985, 1990, 1995, 2000, 2006년의 6개 연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는 1982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나, 1982~1984년까지는 교육변수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가장 오랜 연도(1985)와 가장 최신 연도(2006) 사이를 5년 단위(2000년과 2006년 사이는 6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표본가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소득 변수가 제공되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만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표 4-1>은 분석 대상 연도의 성별, 연령, 직종, 피부양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구주 성별로 볼 때, 1985년의 경우 여성 가구주 가구가 11.3%였으며, 1995년 12.6%, 2006년 17.3%로 2000년의 예외적인 결과를 제외하고는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⁹⁾. 연령별로는 20~29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28%였지만 1995년 15.8%, 2006년 6.2%로 크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노령화와 만혼(晩婚)의 경

39) 성별 외에도 직종, 피부양자 수 등에서도 2000년 자료는 다른 연도와의 일관적 추세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이는 표본추출 혹은 결측치 처리 등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서 기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향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29세 가구주 가구 비율의 감소세는 주로 40~49세와 50~59세 가구주 가구의 증가세로 반영되었으며, 이 또한 인구고령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가구주의 직종으로 볼 때, 공무원의 비율과 임시일용 노무자의 비율은 2000년을 제외하고는 1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무직은 1985년 26.6%에서 1995년 35.0%, 2006년 37.6%로 증가하여, 1990년을 전후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비례하여, 기능공 및 상용 노무자의 비율은 1985년 53.1%, 1995년 47.3%, 2006년 41.1%로 감소하였다.

〈표 4-1〉 도시가계조사 각년도의 가구주 특성: 기술통계 결과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6
성별	남자	88.7	89.7	87.4	91.8	82.7
	여자	11.3	10.3	12.6	8.2	17.3
연령	20~29세	28.0	19.9	15.8	10.2	6.2
	30~39세	39.3	45.7	44.3	42.6	35.4
	40~49세	23.4	24.7	24.6	32.3	37.6
	50~59세	9.3	9.7	15.3	15.0	20.7
직종	공무원	9.9	11.0	8.8	14.3	9.7
	사무직	26.6	26.2	35.0	37.6	37.6
	상용직	53.1	54.5	47.3	41.6	41.4
	임시일용직	10.4	8.3	9.0	6.6	11.4
피부양자 수	0명	2.6	4.4	7.6	6.8	11.7
	1명	11.6	12.5	18.1	17.7	24.8
	2명	23.8	30.7	32.9	33.2	34.0
	3명	33.1	35.2	31.9	33.8	24.3
	4명이상	29.0	17.2	9.5	8.5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2.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가. 회귀모형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3장에서 가구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 가구특성(가족유형, 가구원수, 취업자수 등), 노동시장적 요인(취업지위 등) 중에서 기존연구를 통해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서 활용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은 교육수준만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으로 다른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 3은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성별, 연령, 부양가족수, 취업유형을 통제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으로 완전모형에 가까운 모형이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중 특히 교육수준과 취업유형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6~.7)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상 교육수준은 취업유형을 매개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것은 모형설정과 해석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모형 2에서는 취업유형을 제외하고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모형 1 : } Y = a + \beta_1 \text{교육수준}$$

$$\text{모형 2 : } Y = a + \beta_1 \text{교육수준} + \beta_2 \text{성별} + \beta_3 \text{연령} + \beta_4 \text{부양가족수}$$

$$\text{모형 3 : } Y = a + \beta_1 \text{교육수준} + \beta_2 \text{성별} + \beta_3 \text{연령} + \beta_4 \text{부양가족수} + \beta_5 \text{취업유형}$$

분석모형에 사용된 주요 변수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주요 변수와 그 정의

변수(변수명)		변수 정의
종속변수	일차소득	$(\text{근로소득} + \text{사업(부업)소득} + \text{재산소득}) / (\text{가구원수})^{1/2}$
독립변수	가구주 학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대학중퇴포함) 대졸이상
통제변수	가구주 성별	남자 여자
	가구주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가구주 직종	공무원 공무원 외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
	피부양자 수	가구원수 - 경제활동 가구원수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먼저, 종속변수는 1인 균등화된 일차소득으로 정의된다.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계로서 시장에서 획득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⁴⁰⁾.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로는 국제비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구규모의 제공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40) 한국에서는 일차소득이 오히려 OECD에서의 시장소득 개념에 부합된다. OECD의 시장소득은 일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때 사적 이전소득은 대부분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근로소득에 대한 부가급여(fringe benefit) 혹은 장기저축의 성격을 띤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사적 이전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간 이전(송금보조)이다. 따라서 엄밀히 우리나라에서의 사적 이전소득은 시장소득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 변수가 독립변수로 사용된다. 교육수준 변수는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대학중퇴 포함), 그리고 대졸 이상의 네 범주로 구분되며 더미변수로 처리되었다. 통제변수로는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종, 피부양자 수가 사용되었다. 이 중 가구주 직종에 해당되는 변수는 공무원,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로 구분된다.

나. 엔트로피 분해모형(여유진 외(2005))

다음으로 교육 수준별 집단내·집단간 불평등도를 분해하기 위하여 엔트로피 분해 공식이 활용되었다. 타일의 엔트로피지수를 좀 더 보편적인 공식으로 바꾼 것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frac{1}{n} \sum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여기서 y_i 는 가구(혹은 개인) i 의 소득을 의미하며, μ 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α 값은 각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이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지수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α 값은 0, 1, 2이다. 여기서 $\alpha=0$ 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 $\alpha=1$ 이면, 모든 소득분포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진다. $\alpha=2$ 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득 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 엔트로피지수는 불평등지수가 가져야 하는 다섯 가지 공리를 모두 만족하며⁴¹⁾, 특히 가법적 분해가 가능하여 하위집단별 분해에서 많

41) 불평등지수의 공리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원칙(principle of transfer), 소득의 비례적 가산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te addition to income), 소득의 동액가산 원칙(principle of equal addition to income), 소득인원의 비례적 가산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te addition to person), 익명성의 원칙(principle of anonymity) 등이 자주 언급되며, 후에 가법성의 원칙(principle of decomposibility)이 추가되었다. 먼저, 이전

이 활용된다.

이 중 하위 집단별 분해에 주로 활용되는 엔트로피 지수는 $GE(0)$ 이며, $GE(0)$ 에서 전체 불평등도는 아래와 같이 집단간 불평등도와 집단내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

$$GE(0) = \sum_k v_k GE(0)_k + \sum_k v_k \log\left(\frac{1}{\lambda_k}\right)$$

- 단, $GE(0)_k$: k집단의 소득불평등도,
- v_k : k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equiv n_k/n$)
- λ_k : k집단 평균소득의 모집단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equiv \mu_k/\mu$)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체 불평등도의 변화는 정태적 요인분해(위 식)에 관한 식을 시간에 대한 차분하고 이를 근사치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Delta GE(0) &\equiv GE(0)_{t+1} - GE(0)_t \\ &= \sum_k \overline{v_k \Delta GE(0)_k} + \sum_k \overline{GE(0)_k \Delta v_k} \end{aligned}$$

의 원칙(The Pigou-Dalton Transfer Principle)¹⁾이란 두 사람의 소득자가 있다고 할 때, 고소득자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면 불평등도는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득의 비례적 가산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te addition to income)은 불평등측정치가 균일한 비례적 변화에 대해 불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득의 동액가산원칙(principle of equal addition to income)이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동액을 가산하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고 불평등도는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소득인원의 비례적 가산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te addition to person)이란 소득계층별 인원분포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인원을 가산해도 불평등도는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익명성 원칙(principle of anonymity)은 대칭성(Symmetry)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불평등 측정치가 개인의 소득(혹은 분포를 측정하는 복지 지표) 이외의 어떠한 개인들의 특성과도 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법성 원칙(principle of decomposability)은 전반적인 불평등이 인구 하위집단과 같이 분포의 일부로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세한 것은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하시오.

$$\begin{aligned}
& -\sum_k \overline{\log(\lambda_k)} \Delta v_k - \sum_k \overline{v_k} \Delta \log(\lambda_k) \\
& \approx \sum_k \overline{v_k} \Delta GE(0)_k \quad (\text{A항}) \\
& + \sum_k \overline{GE(0)_k} \Delta v_k \quad (\text{B항}) \\
& + \sum_k [\overline{\lambda_k} - \overline{\log(\lambda_k)}] \Delta v_k \quad (\text{C항}) \\
& + \sum_k [\overline{\Theta_k} - \overline{v_k}] \Delta \log(\mu_k) \quad (\text{D항})
\end{aligned}$$

위 식에서 Δ 은 차분연산자이며, $\overline{v_k}$ 는 비교대상이 되는 두 기간 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근사치에 의한 식을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좌변은 모집단 전체의 불평등 변화를 의미하며, 우변 A항은 불평등 변화의 순효과(pure inequality effects), B항 및 C항은 집단구성 변화의 효과(allocation effects), D항은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의 효과(income effect)를 의미한다. 또한, A+B는 집단 내 변화의 효과를 나타내며, C+D는 집단 간 변화의 효과를 나타낸다.

제3절 분석결과

1. 불평등지표의 변화 추이

먼저 연도별·가구주 연령대별 불평등지표의 변화 추이는 아래 <표 4-3>와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불평등도의 경우 p/90/p10, 지니계수, GE(0), Atkinson(1) 모두 'U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 이래 감소하던 불평등도가 2000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6년의 경우 오히려 1985년에 비해 불평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도별·연령대별 불평등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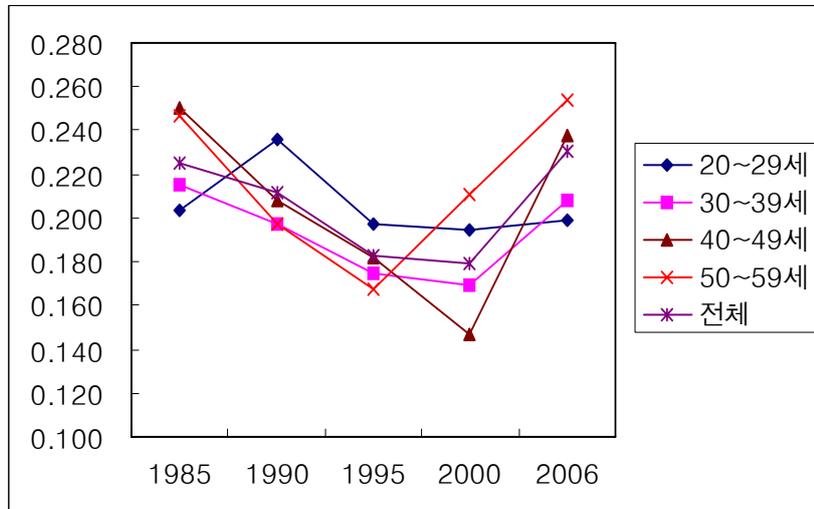
연령	연도	p90/p10	지니계수	GE(0)	A(1)
전체	1985	4.053	0.309	0.225	0.202
	1990	3.731	0.294	0.212	0.191
	1995	3.602	0.284	0.182	0.167
	2000	3.782	0.291	0.180	0.164
	2006	4.379	0.311	0.230	0.206
20대	1985	3.396	0.275	0.203	0.184
	1990	3.646	0.281	0.236	0.210
	1995	3.538	0.278	0.197	0.179
	2000	3.336	0.273	0.194	0.176
	2006	3.998	0.286	0.199	0.180
30대	1985	3.948	0.302	0.215	0.193
	1990	3.463	0.279	0.197	0.179
	1995	3.298	0.273	0.174	0.160
	2000	3.495	0.278	0.169	0.156
	2006	3.931	0.297	0.208	0.188
40대	1985	4.444	0.322	0.250	0.221
	1990	3.897	0.300	0.208	0.188
	1995	3.751	0.285	0.182	0.166
	2000	3.530	0.265	0.147	0.137
	2006	4.549	0.310	0.237	0.211
50대	1985	5.652	0.363	0.247	0.219
	1990	5.112	0.319	0.197	0.179
	1995	3.845	0.291	0.168	0.155
	2000	4.708	0.321	0.211	0.190
	2006	5.175	0.325	0.254	0.22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이는 저임금 농업 중심에서 고임금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는 이른바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보다는, 미국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Harrion, Tilly와 Bluestone에 의해 발전된 “Great U-Turn”테제에 가까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1980년대 이전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의 ‘역U자형’→‘U자형’으로 불평등도가 변화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1980년대~1990년대에 이르는 불평등의 감소가 산업화의 경제적 '물흐름효과(trickling down)' 효과인지 혹은 198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임금평등효과에 의한 것인지 또한 여기에서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1990년대 후반까지 감소하던 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 판단되는 2006년 시점에서 오히려 더욱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불평등 증가가 '중산층 몰락'(vanishing middle) 즉 양극화의 결과인지 혹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강신욱 외 2006; 민승규 2006).

[그림 4-1] 연도별 · 연령대별 불평등지표(GE(0))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볼 때, 20대는 노동시장 진입시기, 30~40대는 노동시장 주류기, 50대는 노동시장 퇴거기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대의 지니계수는 0.275~0.286, 30대의 지니계수는 0.273~0.302, 40대의 지니계수는 0.265~0.322, 50대의 지니계수는 0.291~0.363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불평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즉 노동시장 퇴거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직무 사다리의 성격, 직종별 임금구조, 그리고 연공서열제가 강한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대 가구주의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이가 전체 불평등도의 변화 추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5년까지 낮아지던 불평등도가 2000년 이래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20대 가구주의 소득 불평등도는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비해 40대와 50대 가구주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1985~2006년 간의 소득 불평등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85~199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떨어지다가 1995~2006년 동안 다시 증가하여 1985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4>와 [그림 4-2]는 임금근로자가구 가구주의 학력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1985년에는 전체 가구주의 37.4%가 중졸이하이며 대졸 이상은 17%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중졸 이하가 15.1%로 줄어든 반면 대졸 이상은 31.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고학력화 현상은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졸업정원제와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고학력화를 주도한 것은 20대와 30대였다. 이러한 고학력화는 연령 전반, 그리고 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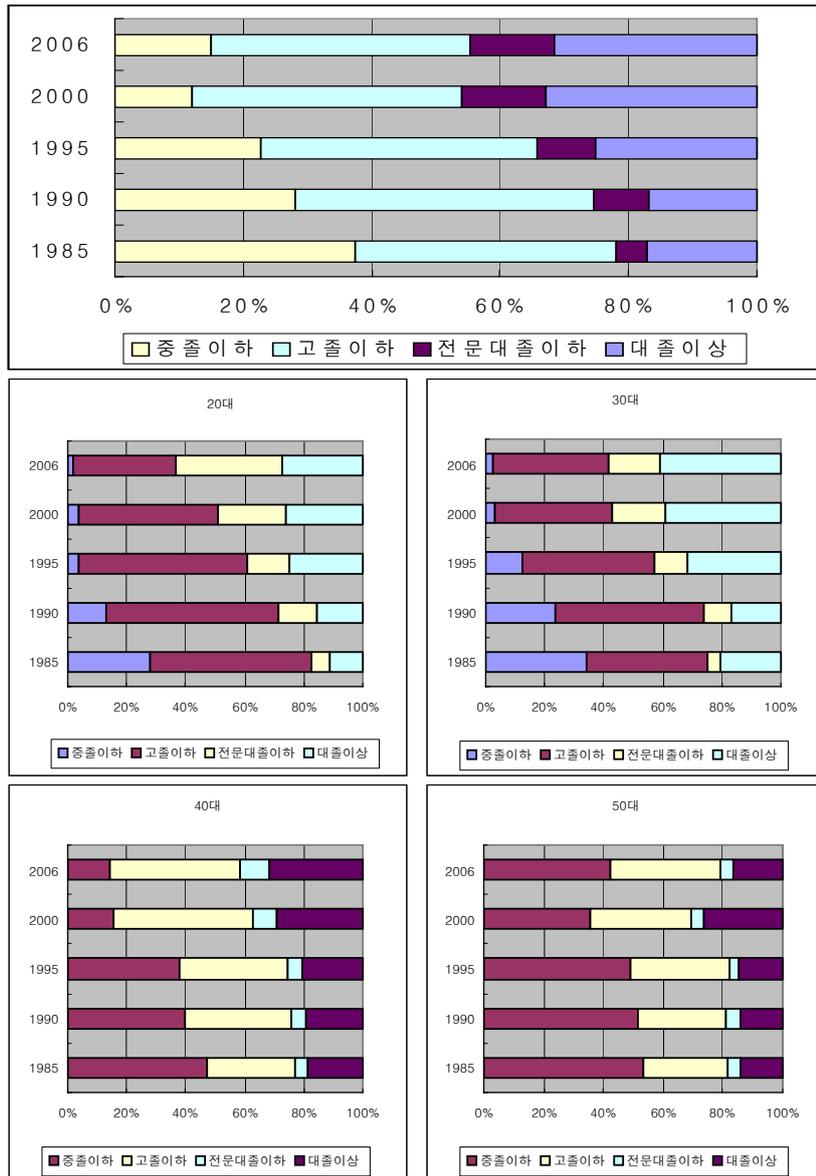
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2000년 40대, 1995~2000년 30대, 그리고 1990년~1995년 20대에서 두드러진다. 즉, 40대의 경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중졸 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37.6%에서 15.8%로 무려 21.8%p 떨어진 반면, 대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20.2%에서 29.4%로 9.2%p 증가하였다. 또한 30대의 경우 중졸 이하 가구주의 비율이 1990년 23.4%에서 1995년 12.4%로 11%p 감소하였으며, 2000년 2.8%로 다시 9.6%p 감소하였다. 이에 반비례하여, 대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1990년 16.8%에서 1995년 31.5%로 14.7%p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39.2%로 7.7%p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 중졸 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1985년 27.8%에서 1990년 13.3%로 14.5%p 하락하였으며, 다시 1995년 3.6%로 9.6%p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대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1985년 11.1%에서 1990년 15.3%로 4.2%p 상승한 데 이어, 1995년에는 다시 26.4%로 11.1%p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대졸 이상 가구주의 비율과 함께 전문대졸 이하 가구주의 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 독특하다. 전문대졸 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5년 6.2%이던 것이 2006년에는 36.2%로 무려 30%p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대졸자 비율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대체로 1980년대 이후로서 대학졸업정원제와 대학자율화가 실시된 시기와 일치한다.

〈표 4-4〉 연도별·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가구주의 학력 변화 추이

연령	학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	전체
전체	1985	37.4	40.8	4.8	17.0	100.0
	1990	28.2	46.4	8.6	16.8	100.0
	1995	22.8	42.9	9.2	25.1	100.0
	2000	12.0	42.0	13.2	32.8	100.0
	2006	15.1	40.3	13.2	31.4	100.0
20대	1985	27.8	55.0	6.2	11.1	100.0
	1990	13.3	58.3	13.1	15.3	100.0
	1995	3.6	57.2	14.7	24.6	100.0
	2000	3.9	47.3	22.5	26.4	100.0
	2006	1.6	35.1	36.2	27.1	100.0
30대	1985	34.4	40.6	4.3	20.8	100.0
	1990	23.4	50.5	9.4	16.8	100.0
	1995	12.4	44.7	11.4	31.5	100.0
	2000	2.8	40.1	17.9	39.2	100.0
	2006	2.5	38.9	17.8	40.8	100.0
40대	1985	47.5	29.3	4.3	18.9	100.0
	1990	40.0	35.9	4.9	19.2	100.0
	1995	37.6	36.8	5.4	20.2	100.0
	2000	15.8	46.8	8.1	29.4	100.0
	2006	14.3	44.3	9.8	31.6	100.0
50대	1985	53.4	28.4	4.0	14.2	100.0
	1990	51.3	29.7	5.3	13.8	100.0
	1995	49.2	32.9	3.5	14.5	100.0
	2000	35.6	33.6	4.5	26.3	100.0
	2006	42.2	37.0	4.5	16.3	10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그림 4-2] 연도별·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가구주의 학력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연도별·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의 일차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45〉 및 [그림 43] 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균등화된 일차소득(명목소득)은 1985년 약 20만원에서 2006년 약 176만원으로 약 9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가구주 가구의 명목 일차소득은 1985년에서 2006년 사이 약 8.8배 증가했으며, 동 기간 동안 고졸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약 7.9배, 전문대졸이하 가구주의 소득은 약 7.2배, 대졸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약 7.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는 저학력 가구의 소득이 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43] 은 각 연도의 전체 소득 평균값을 100으로 했을 때 각 학력 집단의 평균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졸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 상승률은 떨어진 반면 중졸이하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 상승률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1980년대와 90년대 초 대졸이상 가구주 가구의 상대소득 하락과 최근 중졸이하 가구주 가구의 상대소득 하락이 특히 두드러진다. 중졸이하 가구주 가구의 상대소득 하락은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 속에서 중졸이하 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낮은 데다 이들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의 경우 20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중반까지 대졸자 상대소득의 하락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전체 추세와 상응하여 최근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상대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특징적이다. 40대의 경우 대졸이상 가구주 가구의 상대소득 하락은 2000년까지 이어지

4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소득은 개인 근로임금이 아니라 1인 균등화된 가구소득이라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1인 균등화 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물가상승, 실질임금의 증가, 가구원수의 감소, 가구 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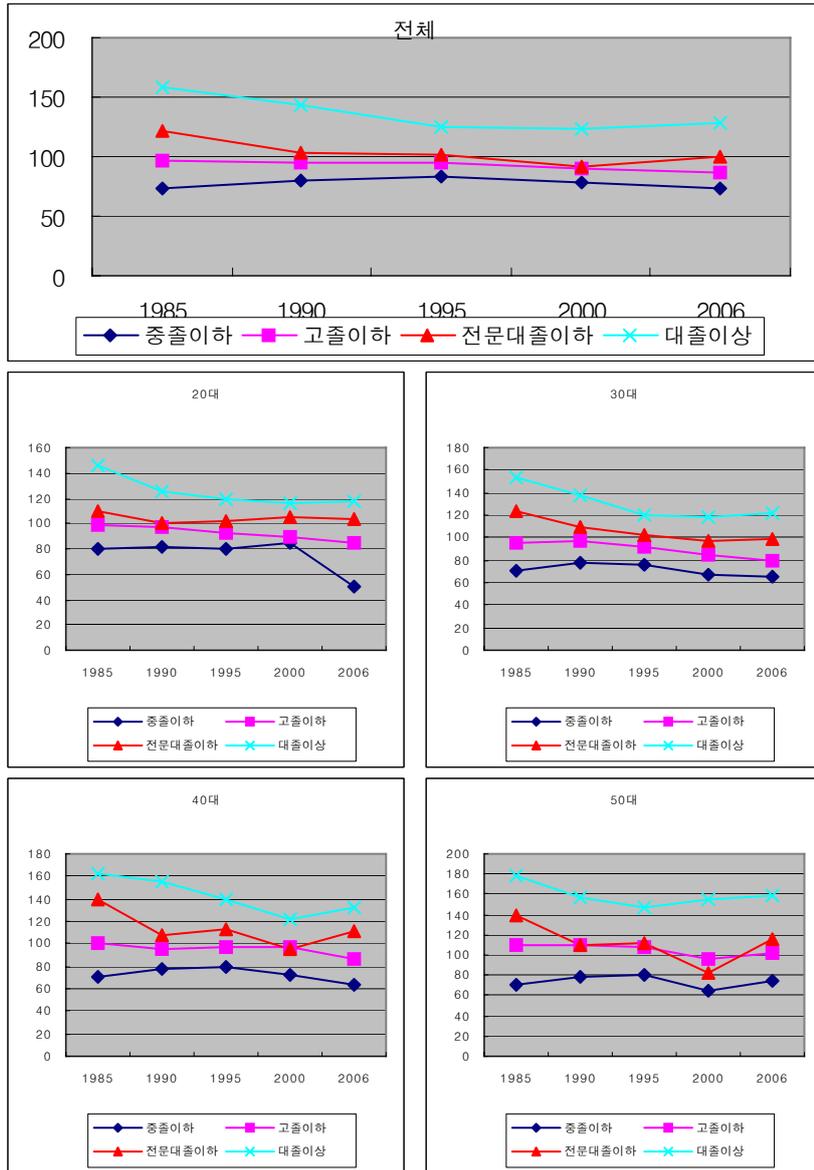
는 것이 특징이다. 50대의 경우 학력 간 소득격차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4-5〉 연도별·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일차소득의 변화 추이
(단위: 원)

연령	연도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이상	전체
전체	1985	147,571	194,525	245,028	317,214	200,274
	1990	352,280	417,268	453,481	626,207	437,163
	1995	764,948	872,360	943,434	1,159,251	926,263
	2000	1,045,050	1,218,965	1,230,334	1,662,795	1,345,081
	2006	1,302,319	1,540,221	1,768,503	2,259,504	1,760,403
20대	1985	147,073	181,272	198,858	265,357	182,193
	1990	315,188	373,292	387,106	484,089	384,336
	1995	670,874	780,409	854,073	996,753	840,562
	2000	947,077	1,002,184	1,162,116	1,292,089	1,112,456
	2006	773,988	1,299,746	1,590,825	1,815,722	1,536,668
30대	1985	141,786	192,460	248,718	310,692	201,997
	1990	323,282	406,436	463,138	577,658	421,021
	1995	683,554	820,296	928,514	1,085,757	899,421
	2000	829,759	1,034,139	1,193,902	1,455,743	1,222,158
	2006	1,094,159	1,312,215	1,635,603	2,034,806	1,659,132
40대	1985	146,862	205,867	288,927	335,550	205,946
	1990	367,821	452,602	511,044	744,015	477,631
	1995	721,661	893,434	1,034,323	1,278,340	914,130
	2000	1,026,556	1,359,021	1,346,587	1,714,804	1,410,169
	2006	1,134,190	1,555,710	1,984,780	2,354,685	1,790,218
50대	1985	165,713	255,101	323,960	418,467	233,320
	1990	403,262	571,830	572,936	807,995	518,150
	1995	884,454	1,204,409	1,249,866	1,642,344	1,112,014
	2000	1,117,801	1,631,395	1,425,470	2,661,288	1,710,752
	2006	1,432,730	1,985,184	2,239,128	3,106,852	1,946,738

자료: 통계청, 『도시경제조사』 원자료

[그림 4-3] 연도별·연령대별 임금근로자가구 일차소득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요컨대, 전체적인 소득과 불평등 지표는 지난 20여 년 동안 - 'Great'라고 하기에는 기간이나 변화의 폭이 미흡하지만 - U자형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전반적인 학력 상승이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지표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다음에는 회귀분석과 분해를 통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의 변화상을 파악해 볼 것이다.

2. 회귀분석 결과

아래 <표 4-6>은 1985~2006년 사이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면상 모형 2와 모형 3의 통제변수는 제외하고, 각 년도에서 학력이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만을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투입된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 연령, 부양가족 수, 취업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과 일차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 3의 경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고졸 이하 가구와 전문대졸 이상 가구의 일차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회귀분석에서 교육수준의 변화에 따른 소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계수, 즉 베타값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기준변수는 고졸 이하 가구이다). 먼저, 교육변수만을 투입한 단순모형 1의 경우 중졸 이하 가구의 베타값이 $-0.18 \rightarrow -0.11 \rightarrow -0.09 \rightarrow -0.07 \rightarrow -0.08$ 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즉 고졸 이하 가구와 중졸 이하 가구의 일차소득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전문대졸 이하 가구의 베타값은 $0.08 \rightarrow 0.04 \rightarrow 0.04 \rightarrow 0.05 \rightarrow 0.07$ 로 2000년대를 전후로 줄어들다가 최근에 약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고졸 이하 가구와의 단위당 일차소득 격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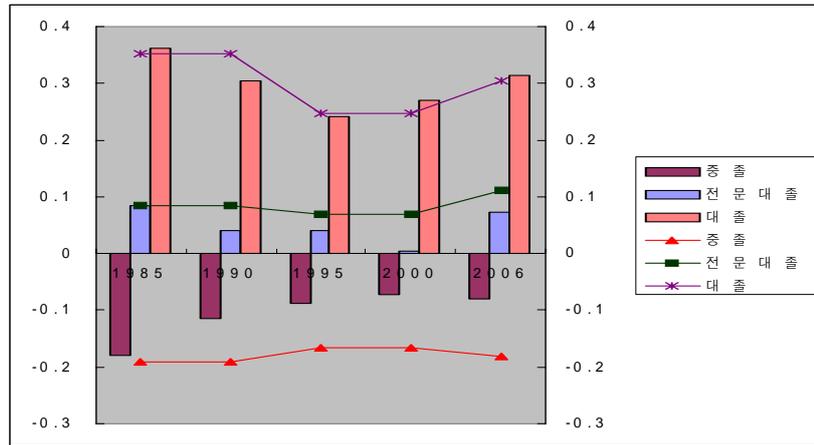
〈표 4-6〉 회귀분석 결과 교육변수의 베타값

연도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Beta	Coef.	Beta	Coef.	Beta
1985	중졸이하	-46954.18** 1440.399	-.1786173	-50138.2** 1437.3	-.1907296	-23671.02** 1541.857	-.0900464
	전문대졸	50503.34** 3072.437	.0848261	50467.17** 2969.559	.0847654	28148.14** 2956.525	.047278
	대졸이상	122688.5** 1836.07	.3624799	119117.9** 1797.382	.3519307	85641.47** 2020.543	.2530255
		N= 31370 Adj R2=0.2147		N= 31370 Adj R2=0.2670		N= 31370 Adj R2=0.3062	
1990	중졸이하	-64987.95** 3152.055	-.1137241	-87036.65** 3038.143	-.1907296	-44823.82** 3282.448	-.0900464
	전문대졸	36213.66** 4894.637	.0395383	42205.44** 4538.393	.0847654	221.7827 4750.547	.047278
	대졸이상	208939.7** 3758.7	.3037923	201183.6** 3523.577	.3519307	130996.4** 4162.54	.2530255
		N= 33218 Adj R2=.1246		N= 33218 Adj R2=0.2196		N= 33218 Adj R2= 0.2405	
1995	중졸이하	-107412.4** 6513.653	-.0877428	-197550.5** 6338.787	-.1654851	-103284.3** 6787.524	-.0843707
	전문대졸	71073.99** 9128.395	.0400144	119514.4** 8178.968	.0690354	10373.49 8652.58	.0058402
	대졸이상	286890.9** 6320.631	.2420019	298188.2** 5887.147	.2475684	152514.6** 7021.006	.1286511
		N= 38460 Adj R2=0.0788		N= 38460 Adj R2=0.2310		N= 38460 Adj R2=0.2536	
2000	중졸이하	-173914.4** 13249.03	-.073324	-343827** 9989.849	-.1654851	-279269.3** 13210.45	-.1177427
	전문대졸	11368.92 12787.85	.0049859	115807.6** 10967.7	.0690354	11859.42 11966.06	.005201
	대졸이상	443830** 9436.298	.2701833	451873.8** 8405.922	.2475684	281958.6** 10544.02	.1716435
		N= 33072 Adj R2=0.0880		N= 33072 Adj R2=0.2579		N= 33072 Adj R2=0.2951	
2006	중졸이하	-237902** 16436.02	-.0802448	-550683.3** 16735.62	-.1807243	-306018.4** 16048.14	-.1032206
	전문대졸	228282** 17279.96	.0727709	358551.1** 16401.89	.1120061	127725.2** 16125.26	.0407158
	대졸이상	719282.5** 12962.56	.3145873	724113.4** 12399.76	.3043505	409265.2** 14082.47	.1789973
		N= 33611 Adj R2=0.1149		N= 33611 Adj R2=0.2733		N= 33611 Adj R2=0.3283	

자료: 통계청, 『도시가지조사』 원자료

대졸이상 가구의 베타값은 0.36→0.30→0.24→0.27→0.31로 1995년까지 줄어들다가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졸이하 가구와 대졸이상 가구의 일차소득 격차는 외환위기를 전후를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 피부양자 수 등을 통제한 모형 2와 모형 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4-4] 학력이 임금근로자가구의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Beta값)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그림 44] 는 각 연도의 모델 1과 모델 2에서의 베타값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바(Bar)는 모델 1의 베타값이며, 실선은 모델 2의 베타값을 나타낸다. 요컨대, 대졸과 전문대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기준변수인 고졸 가구주 가구에 비해 높은 소득을 나타내며, 이에 비해 중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고졸 가구주 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을 나타낸다. 학력간 소득 격차 역시 대졸 가구주 가구의 경우 고졸 가구주 가구에 비해 1980년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가 이후 감소하며, 2000년대 들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중졸 가구주 가구의 소득과 고졸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약간 줄어들다가 이후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약간 줄어들다가 이후 2006년까지 약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의 변화는 다른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점은 회귀모형의 설명력, 즉 조정된 R^2 값(Adjusted R^2)의 변화이다. 우선 단순모형의 경우 1985~2006년 동안 조정된 R^2 값은 0.2147→0.1246→0.0788→0.0880→0.1149로 2000년까지 설명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2006년 다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육수준과 함께 가구주의 성, 연령, 피부양자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조정된 R^2 의 값은 같은 시기 동안 0.2670→0.2196→0.2310→0.2579→0.2733으로 1990년 다소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의 경우 1985년보다 좀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모형 2의 변수에 직종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그 값은 0.3062→0.2405→0.2536→0.2951→0.3283으로 모형 2에 비해 다소 높을 뿐 그 양상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교육수준의 독자적인 영향력은 떨어진 반면, 성, 연령, 직종 등 다른 영향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가구의 소득격차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무엇(what)의 불평등'과 함께 '무엇으로 인한(from what) 불평등'인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3. 엔트로피분해 결과

마지막으로, 일차소득의 불평등을 동일 교육수준 집단 내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과 상이한 교육수준 집단 간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특히 교육수준 집단 간의 격차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래 <표 4-7>에서 <표 4-16> 까지의 표는 GE(0)의 분해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평등지수 중 하나인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즉 GE(0)는 가법성 공리를 충족하며, 정태분석에서는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으로 분해된다. 또한, 동태분석에서 불평등 변화의 순효과(A항), 집단구성의 변화 효과(B항과 C항),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의 효과(D항)로 분해 가능하다. 여기에서 A항과 B항을 더한 결과는 집단 내 불평등도의 변화를 나타내며, C항과 D항을 더한 결과는 집단간 불평등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표 4-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85년의 경우 소득 불평등의 83%가 집단내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17%가 학력 집단간 불평등에 의해 설명된다. 각각의 비율은 1990년의 경우 91%와 9%, 1995년의 경우 93%와 7%, 2000년의 경우 92.2%와 7.8%, 2006년의 경우 91.1%와 8.9%이다. 즉,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불평등도의 17%가 학력 차이에 의해 설명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 그 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 미미하지만 다시 학력 차이에 의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내 불평등의 경우도 1985년에는 중졸이하의 집단내 불평등(0.0843)이 전체 집단내 불평등(0.1871)의 45.2%를 설명하였으나 2006년에는 그 비율이 18.4%로 줄어들었다. 반면, 1985년에 대졸이상의 집단내 불평등(0.0330)은 전체 집단내 불평등(0.1871)의 17.6%만을 설명하였으나 2006년에는 그 비율이 26.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고학

력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졸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집단 내부의 경쟁이 강화되어 대졸자의 임금과 소득의 편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시기별 불평등의 변화를 통해 분석한 동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85~1990년 사이의 불평등 감소는 대부분 학력간 불평등 감소와 부분적으로 집단구성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즉, 이 시기 동안 동일 교육수준 집단 내에서의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나(0.0110), 상이한 교육수준 집단 간의 불평등이 크게 감소하여(-0.0164) 결과적으로 GE(0)은 -0.0128 감소하였다. 1990~1995년 사이의 불평등 감소(-0.0228)는 집단내 불평등 감소(-0.0198)와 학력 집단간 불평등 감소(-0.0101)가 골고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0년 사이에는 불평등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0.0030). 이 시기의 불평등 감소는 주로 집단 구성의 변화(-0.0037-0.0006)와 집단내 불평등 감소(-0.0017)가 주도하였지만, 집단간 상대소득은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0.0029)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6년 사이에는 불평등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0.0509)하였다. 이 시기 불평등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집단내 불평등 증가(0.0431)로 전체 불평등 증가의 약 8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불평등 감소 혹은 증가의 원인은 상이하다. 특히, 최근 불평등 증가는 학력집단 간의 상대소득 격차의 증가보다는 학력집단 내부의 소득 격차 증가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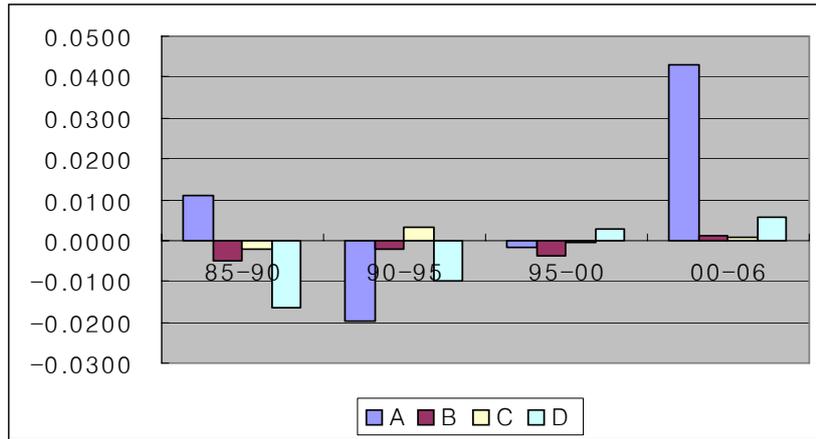
〈표 4-7〉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전체)

구분		전 체	집단 k 비중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일차소득 (원)
		불평등도		GE(0)k	ln(1/λk)	
1985	중졸이하		0.374	0.0843	0.1141	147,571
	고졸이하		0.408	0.0618	0.0119	194,523
	전문대졸		0.048	0.0080	-0.0097	245,028
	대졸이상		0.170	0.0330	-0.0782	317,214
	전체	0.2252	1.000	0.1871	0.0381	200,274
1990	중졸이하		0.282	0.0626	0.0609	352,280
	고졸이하		0.464	0.0856	0.0216	417,268
	전문대졸		0.086	0.0145	-0.0032	453,481
	대졸이상		0.168	0.0303	-0.0603	626,207
	전체	0.2119	1.000	0.1929	0.0190	437,163
1995	중졸이하		0.228	0.0446	0.0436	764,948
	고졸이하		0.429	0.0709	0.0257	872,360
	전문대졸		0.092	0.0154	-0.0017	943,434
	대졸이상		0.251	0.0401	-0.0562	1,159,251
	전체	0.1825	1.000	0.1710	0.0115	926,263
2000	중졸이하		0.120	0.0231	0.0303	1,045,050
	고졸이하		0.420	0.0699	0.0414	1,218,965
	전문대졸		0.132	0.0220	0.0117	1,230,334
	대졸이상		0.328	0.0507	-0.0695	1,662,795
	전체	0.1796	1.000	0.1657	0.0139	1,345,081
2006	중졸이하		0.151	0.0387	0.0455	1,302,319
	고졸이하		0.403	0.0877	0.0538	1,540,221
	전문대졸		0.132	0.0286	-0.0006	1,768,503
	대졸이상		0.314	0.0552	-0.0784	2,259,504
	전체	0.2305	1.000	0.2102	0.0203	1,76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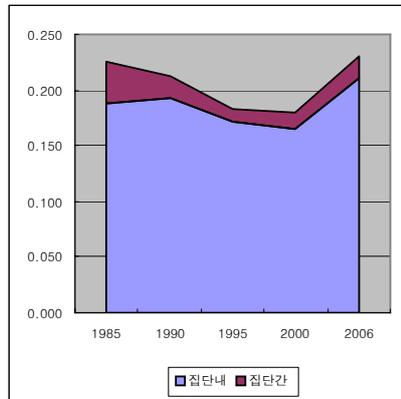
〈표 4-8〉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전체)

	A	B	C	D	합
85-90	0.0110	-0.0051	-0.0023	-0.0164	-0.0128
	-85.9	40.1	17.8	127.9	100.0
90-95	-0.0198	-0.0022	0.0032	-0.0101	-0.0288
	68.6	7.7	-11.3	34.9	100.0
95-00	-0.0017	-0.0037	-0.0006	0.0029	-0.0030
	55.8	123.2	19.4	-98.3	100.0
00-06	0.0431	0.0014	0.0006	0.0058	0.0509
	84.7	2.7	1.1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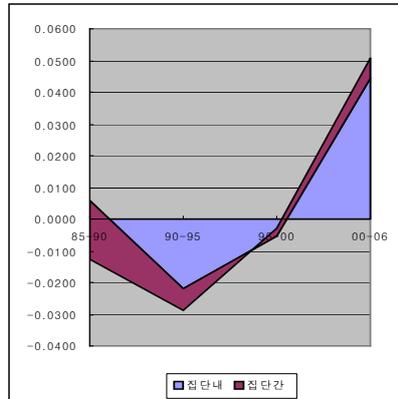
[그림 4-5]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전체)



<동태분석 1>



<정태분석>



<동태분석 2>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20대 소득집단의 불평등도는 1990년 0.2359를 피크로 이후 0.19대를 유지하고 있어 불평등도는 30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40대와 50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집단내 불평등이 설명하는 비중이 대부분으로 최대 97%(1990년), 최소 92.6%(1985)에 이른다. 즉, 20대의 경우 학력간 불평등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저학력자일수록 노동시장에 비교적 일찍 진입하는데 비해, 고학력자일수록 늦게 진입한다는 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저학력자의 경우 20대에 이미 상당한 경력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경력임금으로 인하여 대졸 초임자 임금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중졸이하의 일차소득(147,073원)은 대졸이상의 일차소득(265,357원)의 55% 수준이었으나, 2006년 그 비율은 42.6%로 떨어져 중졸이하 가구주 가구의 상대 소득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 원인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집단내 불평등과 관련해서, 특히 2000년까지는 고졸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이 매우 높아 1985년 0.976, 1990년 0.1417, 1995년 0.004, 2000년 0.994로 전체 집단내 불평등의 각각 51.9%, 61.9%, 52.0%, 52.9%를 설명하였으나, 2006년에는 그 비율이 25.8%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2006년에 전문대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집단내 불평등의 각각 44.7%와 2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 내에서의 불평등도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은 불평등 증감을 나타낸 1990년의 경우, 1985~1990년 사이 불평등 증가와 1990~1995년 사이의 불평등의 감소는 대부분 집단내 소득불평등의 감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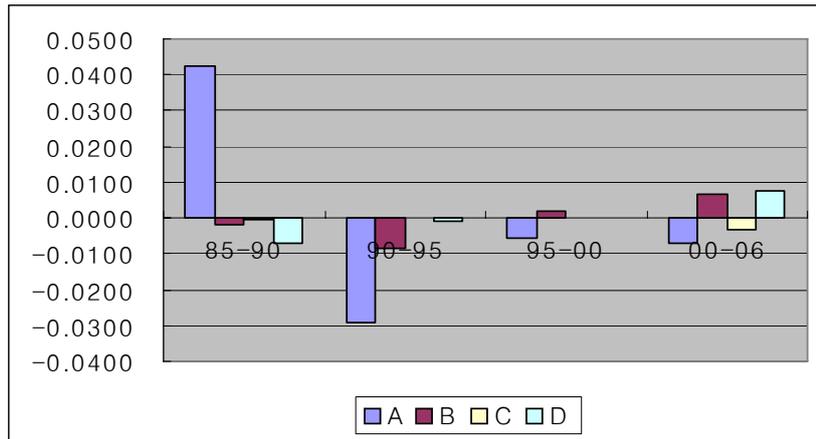
〈표 4-9〉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20대)

구분		전 체	집단 k 비중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일차소득 (원)
		불평등도		GE(0)k	ln(1/λk)	
1985	중졸이하		0.278	0.0558	0.0594	147,073
	고졸이하		0.550	0.0976	0.0028	181,272
	전문대졸		0.062	0.0098	-0.0054	198,858
	대졸이상		0.111	0.0250	-0.0417	265,357
	전체	0.2032	1.000	0.1881	0.0151	182,193
1990	중졸이하		0.133	0.0293	0.0264	315,188
	고졸이하		0.583	0.1417	0.0170	373,292
	전문대졸		0.131	0.0279	-0.0009	387,106
	대졸이상		0.153	0.0298	-0.0354	484,089
	전체	0.2359	1.000	0.2288	0.0071	384,336
1995	중졸이하		0.036	0.0120	0.0080	670,874
	고졸이하		0.572	0.0994	0.0424	780,409
	전문대졸		0.147	0.0344	-0.0023	854,073
	대졸이상		0.246	0.0454	-0.0420	996,753
	전체	0.1973	1.000	0.1912	0.0062	840,562
2000	중졸이하		0.039	0.0064	0.0062	947,077
	고졸이하		0.473	0.0944	0.0494	1,002,184
	전문대졸		0.225	0.0435	-0.0098	1,162,116
	대졸이상		0.264	0.0434	-0.0395	1,292,089
	전체	0.1940	1.000	0.1878	0.0063	1,112,456
2006	중졸이하		0.016	0.0021	0.0110	773,988
	고졸이하		0.351	0.0482	0.0587	1,299,746
	전문대졸		0.362	0.0836	-0.0126	1,590,825
	대졸이상		0.271	0.0532	-0.0452	1,815,722
	전체	0.1990	1.000	0.1871	0.0119	1,536,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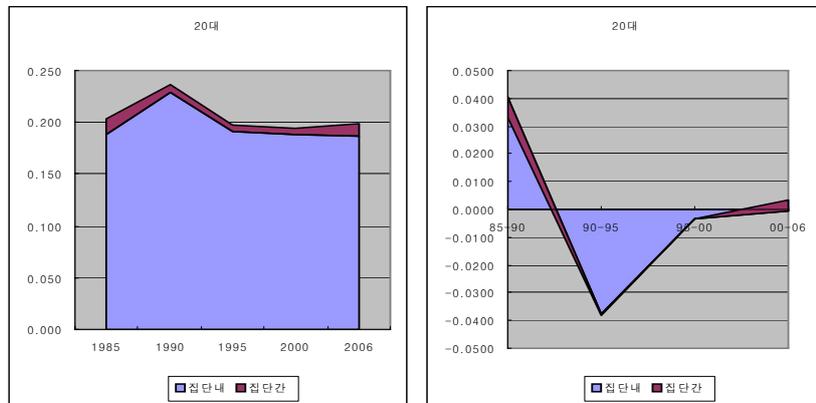
〈표 4-10〉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20대)

	A	B	C	D	합
85-90	0.0423	-0.0017	-0.0004	-0.0072	0.0330
	128.3	-5.2	-1.3	-21.8	100.0
90-95	-0.0292	-0.0084	0.0000	-0.0008	-0.0384
	75.9	21.9	0.0	2.2	100.0
95-00	-0.0055	0.0021	-0.0001	0.0002	-0.0033
	167.5	-64.2	1.7	-5.0	100.0
00-06	-0.0072	0.0065	-0.0032	0.0075	0.0036
	-199.0	181.3	-89.3	207.0	100.0

[그림 4-6]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20대)



<동태분석 1>



<정태분석>

<동태분석 2>

30대 소득집단의 불평등도는 1985년~2006년 사이 0.2150→0.1969→0.1743→0.1692→0.2084로 2000년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내 불평등이 설명하는 비중은 80%(1980년)~93%(1995년)으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30대에 이르면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 즉 집단간 불평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집단 내의 불평등이 불평등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집단내 불평등 중, 중졸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은 1985년 0.0774, 1990년 0.0519, 1995년 0.280, 2000년 0.0064, 2006년 0.0036으로 전체 집단내 불평등의 각각 45%, 28.9%, 17.3%, 4.1%, 1.9%로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졸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의 급감은 일차적으로 중졸이하 집단의 비중이 1985년 34.4%에서 2005년 2.5%로 급격히 감소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전문대졸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은 1985년 0.043에서 2006년 0.178로 전체 집단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서 18.8%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졸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은 1985년 0.0379에서 2006년 0.0607로 전체 집단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서 32.4%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고학력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전체 불평등이 줄어들기보다는 불평등의 영역이 저학력집단 내에서 고학력집단 내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 집단 간의 불평등도는 1985년 0.430에서 1990년 0.0176, 1995년 0.121로 급감하였으며, 2000년 0.0136, 2006년 0.0209로 최근 들어 다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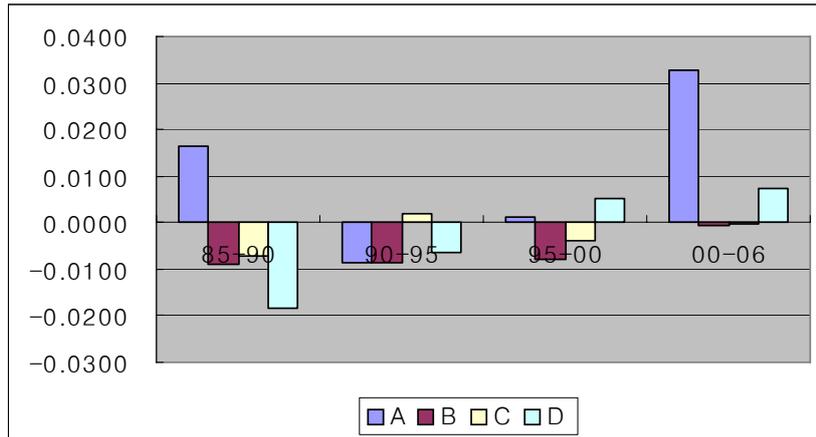
〈표 4-11〉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30대)

구분		전 체	집단 k 비중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일차소득 (원)
		불평등도		GE(0)k	ln(1/λk)	
1985	중졸이하		0.344	0.0774	0.1216	141,786
	고졸이하		0.406	0.0490	0.0196	192,460
	전문대졸		0.043	0.0076	-0.0090	248,718
	대졸이상		0.208	0.0379	-0.0893	310,692
	전체	0.2150	1.000	0.1720	0.0430	201,997
1990	중졸이하		0.234	0.0519	0.0617	323,282
	고졸이하		0.505	0.0846	0.0178	406,436
	전문대졸		0.094	0.0143	-0.0090	463,138
	대졸이상		0.168	0.0286	-0.0530	577,658
	전체	0.1969	1.000	0.1794	0.0176	421,021
1995	중졸이하		0.124	0.0280	0.0339	683,554
	고졸이하		0.447	0.0742	0.0412	820,296
	전문대졸		0.114	0.0170	-0.0036	928,514
	대졸이상		0.315	0.0430	-0.0594	1,085,757
	전체	0.1743	1.000	0.1622	0.0121	899,421
2000	중졸이하		0.028	0.0064	0.0108	829,759
	고졸이하		0.401	0.0621	0.0670	1,034,139
	전문대졸		0.179	0.0331	0.0042	1,193,902
	대졸이상		0.392	0.0541	-0.0685	1,455,743
	전체	0.1692	1.000	0.1557	0.0136	1,222,158
2006	중졸이하		0.025	0.0036	0.0103	1,094,159
	고졸이하		0.389	0.0880	0.0913	1,312,215
	전문대졸		0.178	0.0352	0.0025	1,635,603
	대졸이상		0.408	0.0607	-0.0833	2,034,806
	전체	0.2084	1.000	0.1875	0.0209	1,659,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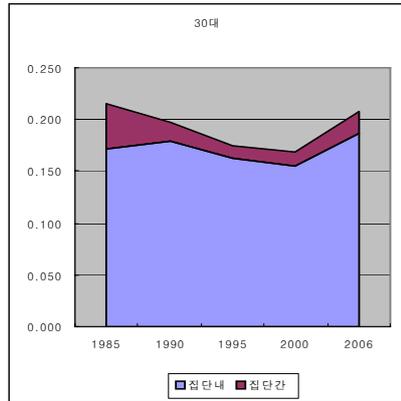
〈표 4-12〉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30대)

	A	B	C	D	합
85-90	0.0164	-0.0090	-0.0072	-0.0183	-0.0181
	-90.4	49.7	39.7	100.9	100.0
90-95	-0.0085	-0.0086	0.0018	-0.0065	-0.0219
	39.0	39.3	-8.1	29.9	100.0
95-00	0.0012	-0.0078	-0.0039	0.0050	-0.0054
	-22.4	142.6	72.5	-92.6	100.0
00-06	0.0326	-0.0008	-0.0001	0.0075	0.0392
	83.2	-1.9	-0.4	1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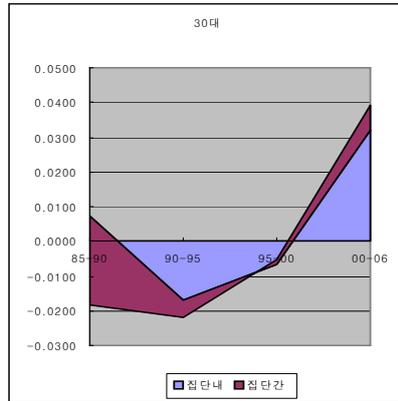
[그림 4-7]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30대)



<동태분석 1>



<정태분석>



<동태분석 2>

한편, 1985년~2006년 간의 30대 연령 집단에서의 불평등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1985년~1990년 사이의 소득불평등 감소는 집단 내 소득불평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단간 상대소득 격차의 축소와 집단구성의 변화, 즉 고학력화 현상에 의해 설명된다. 1990~1995년 사이의 소득불평등 감소는 집단내·집단간 소득불평등 감소와 집단내 구성의 변화가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2000~2006년 사이의 불평등 증가는 대부분 집단내 소득불평등 증가와 학력집단 간 상대소득 격차의 확대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40대의 경우,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1985년 0.2499, 1990년 0.2084, 1995년 0.1817, 2000년 0.1471, 2006년 0.2374로, 2000년을 제외하고는 30대에 비해 연령내 소득불평등이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비중은 78.5%(1985년)~90.8%(2000년)로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의 연장선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상대적으로 경력급보다는 직무급이 급격히 상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0대와 마찬가지로 40대에서도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중졸이하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졸이상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집단내 불평등의 영역 또한 고학력집단 내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중졸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은 1985년 0.1161로 전체 집단내 불평등(0.1961)의 59.2%를 설명하였으나, 2006년에는 그 비율이 23.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대졸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집단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6.7%였으나 2006년에는 25%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고졸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집단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2.3%에서 40.8%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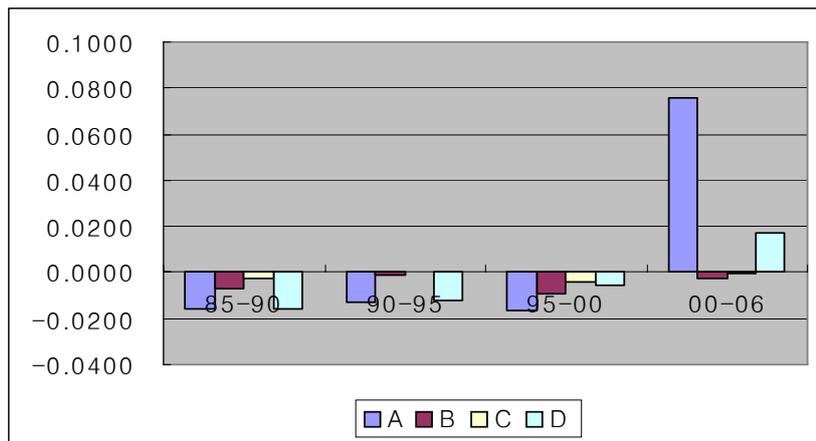
〈표 4-13〉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40대)

구분		전 체	집단 k 비중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일차소득 (원)
		불평등도		GE(0)k	ln(1/λk)	
1985	중졸이하		0.475	0.1161	0.1605	146,862
	고졸이하		0.293	0.0436	0.0001	205,867
	전문대졸		0.043	0.0037	-0.0145	288,927
	대졸이상		0.189	0.0327	-0.0924	335,550
	전체	0.2499	1.000	0.1961	0.0538	205,946
1990	중졸이하		0.400	0.0896	0.1044	367,821
	고졸이하		0.359	0.0478	0.0193	452,602
	전문대졸		0.049	0.0053	-0.0033	511,044
	대졸이상		0.192	0.0306	-0.0853	744,015
	전체	0.2084	1.000	0.1733	0.0352	477,631
1995	중졸이하		0.376	0.0657	0.0889	721,661
	고졸이하		0.368	0.0541	0.0084	893,434
	전문대졸		0.054	0.0059	-0.0067	1,034,323
	대졸이상		0.202	0.0331	-0.0677	1,278,340
	전체	0.1817	1.000	0.1587	0.0230	914,130
2000	중졸이하		0.158	0.0281	0.0500	1,026,556
	고졸이하		0.468	0.0670	0.0173	1,359,021
	전문대졸		0.081	0.0062	0.0037	1,346,587
	대졸이상		0.294	0.0322	-0.0575	1,714,804
	전체	0.1471	1.000	0.1335	0.0136	1,410,169
2006	중졸이하		0.143	0.0489	0.0652	1,134,190
	고졸이하		0.443	0.0844	0.0621	1,555,710
	전문대졸		0.098	0.0218	-0.0101	1,984,780
	대졸이상		0.316	0.0518	-0.0866	2,354,685
	전체	0.2374	1.000	0.2068	0.0306	1,79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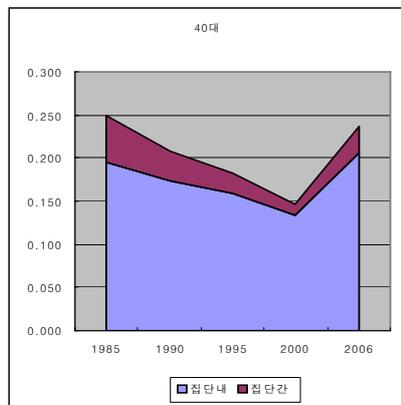
〈표 4-14〉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40대)

	A	B	C	D	합
85-90	-0.0156	-0.0072	-0.0024	-0.0162	-0.0414
	37.7	17.4	5.9	39.0	100.0
90-95	-0.0132	-0.0014	0.0002	-0.0124	-0.0267
	49.3	5.1	-0.7	46.3	100.0
95-00	-0.0162	-0.0090	-0.0038	-0.0052	-0.0342
	47.3	26.3	11.1	15.3	100.0
00-06	0.0757	-0.0024	-0.0005	0.0174	0.0903
	83.9	-2.6	-0.5	1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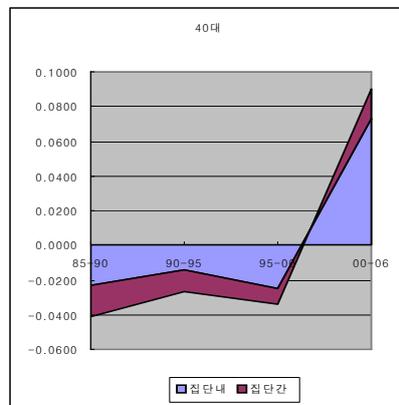
[그림 4-8]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40대)



<동태분석 1>



<정태분석>



<동태분석 2>

40대의 학력집단간 불평등도는 1985년 0.0538에서 1990년 0.0352, 1995년 0.0230, 2000년 0.0136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6년에 0.0306으로 다시 반전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30대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불평등도의 양상과 추이가 30대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30~40대가 공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구조와 경기순환 등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5~2000년 동안 40대의 소득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집단내 불평등도의 감소, 집단구성의 변화, 집단간 불평등도의 감소 모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불평등도는 다시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이 시기동안 집단구성의 변화가 불평등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내 불평등도와 집단간 불평등도 모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그림 4-8] 의 동태분석 1).

마지막으로 50대의 경우, 소득 불평등도는 1985년 0.2466에서 1990년 0.1971, 1995년 0.1679로 떨어지다가 2000년 0.2111, 2006년 0.253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50대의 소득 불평등도는 모든 소득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직무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40대까지는 2000년이 최저점을 형성하는데 비해, 50대의 경우 1995년이 최저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40대의 경우 외환위기의 타격이 전 소득집단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데 비해, 50대의 경우 타격이 주로 저소득집단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력 집단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비중은 72.0%(2000년)~84.6%(1995년)로 모든 연령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직무급의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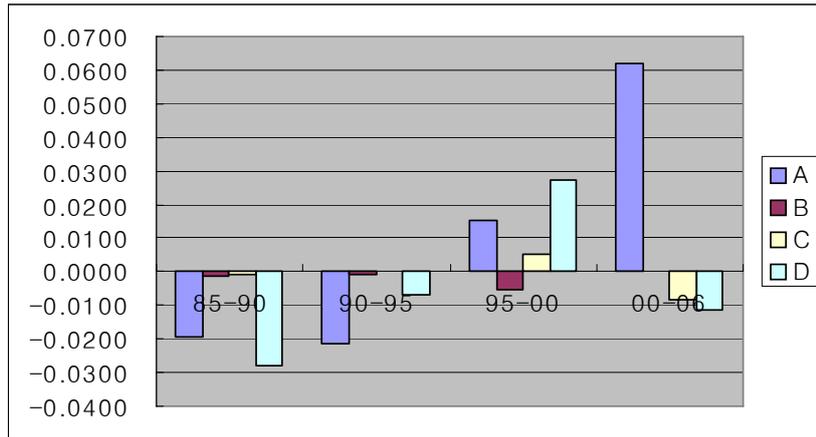
〈표 4-15〉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정태분석-50대)

구분		전 체	집단 k 비중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일차소득 (원)
		불평등도		GE(0)k	ln(1/λk)	
1985	중졸이하		0.534	0.1149	0.1827	165,713
	고졸이하		0.284	0.0386	-0.0253	255,101
	전문대졸		0.040	0.0070	-0.0132	323,960
	대졸이상		0.142	0.0248	-0.0829	418,467
	전체	0.2466	1.000	0.1853	0.0613	233,320
1990	중졸이하		0.513	0.1005	0.1285	403,262
	고졸이하		0.297	0.0442	-0.0292	571,830
	전문대졸		0.053	0.0059	-0.0053	572,936
	대졸이상		0.138	0.0140	-0.0614	807,995
	전체	0.1971	1.000	0.1646	0.0325	518,150
1995	중졸이하		0.492	0.0835	0.1126	884,454
	고졸이하		0.329	0.0337	-0.0263	1,204,409
	전문대졸		0.035	0.0038	-0.0040	1,249,866
	대졸이상		0.145	0.0211	-0.0564	1,642,344
	전체	0.1679	1.000	0.1421	0.0259	1,112,014
2000	중졸이하		0.356	0.0680	0.1515	1,117,801
	고졸이하		0.336	0.0391	0.0160	1,631,395
	전문대졸		0.045	0.0082	0.0081	1,425,470
	대졸이상		0.263	0.0365	-0.1164	2,661,288
	전체	0.2111	1.000	0.1519	0.0592	1,710,752
2006	중졸이하		0.422	0.0860	0.1293	1,432,730
	고졸이하		0.370	0.0822	-0.0072	1,985,184
	전문대졸		0.045	0.0087	-0.0063	2,239,128
	대졸이상		0.163	0.0374	-0.0763	3,106,852
	전체	0.2539	1.000	0.2144	0.0395	1,946,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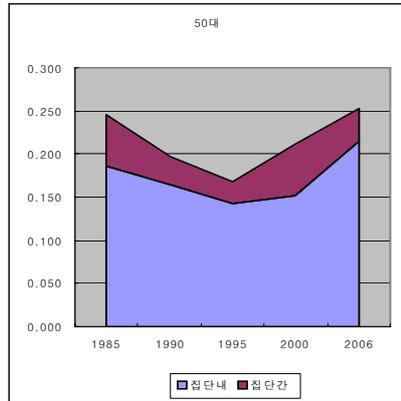
〈표 4-16〉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동태분석-50대)

	A	B	C	D	합
85-90	-0.0194	-0.0013	-0.0009	-0.0277	-0.0493
	39.3	2.7	1.8	56.2	100.0
90-95	-0.0215	-0.0009	0.0001	-0.0068	-0.0291
	74.0	3.2	-0.4	23.2	100.0
95-00	0.0152	-0.0054	0.0050	0.0273	0.0422
	36.0	-12.8	11.9	64.8	100.0
00-06	0.0621	0.0004	-0.0082	-0.0112	0.0430
	144.3	0.9	-19.1	-2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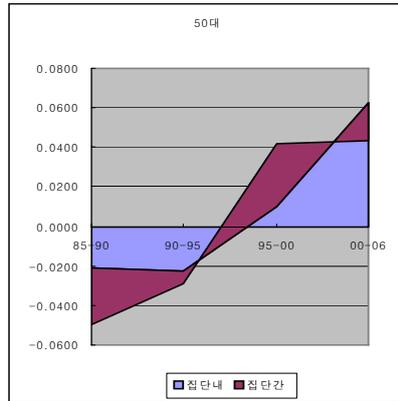
[그림 4-9] 학력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50대)



<동태분석 1>



<정태분석>



<동태분석 2>

50대 연령집단에서의 소득불평등도 변화가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것은 대부분의 소득불평등 변화가 구성집단의 변화보다는 집단내·집단간 소득격차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이 귀속적인 특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 오랜 집단의 학력구성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특히 2000~2006년 동안 소득 불평등 증가는 학력간 소득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력집단 내에서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일반화된 엔트로피 분해(GE(0)) 결과, 1990년대까지 감소하던 소득 불평등이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임금구조적 특성,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급이 증가하는 특성과 저학력집단일수록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불안정 직종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0년대까지는 중졸이하 집단내의 불평등도가 높았던데 비해 2000년대 이후는 대졸이상 집단내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아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만 놓고 볼 때, 고학력화는 전체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불평등의 영역을 고학력집단내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동태분석의 결과에서 보면, 집단구성의 변화는 2000년 이전까지 불평등을 줄이는데 다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며 2006년에는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약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교육수준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불평등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일차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수준이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파악하였으며, 일반화된 엔트로피 분해(GE(0) decomposition)를 통해 연령별로 학력별 집단내, 집단별 불평등도의 수준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반적인 불평등의 수준은 1990년대까지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특히 2006년에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1995년(20~40대)과 2000년(50대)을 전후하여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고졸이하와 다른 학력집단간의 소득 격차는 199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2000년대에는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에 대한 교육의 설명력은 2000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0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연령, 성, 직종 등의 설명력은 1990년 이래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격차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학력의 차이→소득의 차이와 같이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셋째, 전체적으로 볼 때, 학력집단간 구성의 변화, 즉 고학력화 현상은 2000년까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2006년에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력집단내 불평등이 학력집단간 불평등보다 소득불평등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⁴³⁾,

43) 사실 이를 해석하는 데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집단내 불평등이 집단간 불평등보다 훨씬 더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사례수가 많기 때문이다. 즉, 본문의 경우 학력집단은 4개 집단 간의 소득차이가 설명력이 되는데 비해, 학력집단 내는 그 집단내의 사례수 간의 소득 격차가 설명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을 잘게 쪼개

2000년 들어서는 학력간 불평등이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현재의 소득불평등은 예전보다 교육수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이 현재의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 조깅수록 집단간 불평등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는 분해방식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가족배경과 교육성취: 교육고용패널 자료분석

제1절 연구문제

1. 소득은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교육성취는 이후의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리고 근래로 올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과 빈곤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빈곤은 아동의 교육성취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과 교육성취의 관계는 우선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서는 부모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금전적 자원과 시간을 청소년의 인적자본 형성에 투자한다고 본다(Becker & Tomes, 1986). 그런데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 자녀 학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경우 빈곤 부모는 의식주에 소요되는 필수적 생활비에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은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수준을 낮추게 되고 그 결과 아동의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 학구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와 학력성취의 수준이 저하된다.

예컨대, 빈곤가족은 학습도구의 구입이나 사교육 등 자녀의 교육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때때로 빈곤가족의 아동은 가게 보조적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여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가족소득의 차이는 상승하는 교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져 아동의 대학 진학 여부나 진학하는 학교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은 또한 부모의 정신건강과 가족과정(family process)에 위기를 초래하고 양육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대시킴으로써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채택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구적 발달과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빈곤가정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의 식생활과 주거생활을 경험하고, 위험한 주변 환경에 노출된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조건과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기 어렵다는 예상으로 인해 빈곤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증대된다.

이 증대된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소홀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와 학업에 대한 기대와 개입 또한 줄어든다. 이러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빈곤 아동은 최적의 학구적 발달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낮은 교육성취로 이어진다(McLoyd, 1990; 1998).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빈곤은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행위와 관련된다(Klebanov, Brooks-Gunn, & Duncan, 1994). 또 Conger, Conger, & Elder(1997)는 양육 행위가 청소년의 학구적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가족소득과 빈곤은 아동의 교육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가족소득은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은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소득과 빈곤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가족소득이나 빈곤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족구조 등의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유전적 요인이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며 아동발달과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과 아동의 교육성취의 관계에 관련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지 못한다면, 빈곤의 영향에 이들 통제되지 않은 요인의 영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과 아동성취의 관계는 그 정도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인과적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동의 교육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구조, 기타의 가족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었다. 가족구조가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선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학력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구조는 또한 부모의 비경제적 양육자원과 양육행위를 변화시켜 아동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anahan, 1997).

Mayer(2002)는 문헌검토를 통해 관찰되지 않은 가족특성을 통제한 연구(Mayer, 1997; Blau, 1999)에서는 기존의 다른 연구에 비해 가족소득의 영향력이 통상적으로 작아진다는 점을 보고한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진 빈곤과 아동의 인지발달 사이의 관계 중 일정 부분은 부모의 빈곤과 아동의 낮은 인지능력을 동시에 초래하는 제3의 요인들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령, 부모의 인지능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그러한 요인일 수 있다. Mayer(2002)에 따르면 어머니의 인지적 능력을 통제하는 연구에서는 다른 대다수 연구보다 가족소득의

인지발달에 대한 영향이 매우 작다. 가족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인지능력 점수는 표준편차의 10%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소득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적, 가족적 특성 이외에도 학교나 교사 등 공식 교육기관과 관련된 요인들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육성취(혹은 학업성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의 다수는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었다(오성삼·구병두, 1999). 가족소득이 아동의 학교 선택이나 교사 배정 등과 일정한 관련을 가진다면 가족소득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들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의 경험적 연구

가족소득 혹은 빈곤과 아동의 학력성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Haveman & Wolfe, 1995; Duncan & Brooks-Gunn, 1997). 미국의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한 연구에 따르면(Haveman & Wolfe, 1995), 아동 성장기 가족의 소득수준은 부모가 아동에게 투자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가장 좋은 척도로서 대다수 연구에서 아동의 고교졸업확률이나 최종학력연수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경우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아 10%의 가족소득증가가 0.2%에서 2%의 학력 연수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다른 연구에서 모든 아동들이 빈곤을 경험하지 않게 할 경우 평균 학력연수가 0.3%(한 달의 절반 미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Haveman & Wolfe, 1994).

국내에서도 최근 소득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방하남·김기현(2002)에 따르면 가족의 소득계층이 하위인 청소년 집단은 일반계 고교로 진학할 확률이 중위와 상위 집단에 비해 떨어지며, 대학 진

학 확률은 상위 집단에 비해 떨어진다. 구인회(2003)는 가족소득이 학력연수와 대학진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가짐을 밝히고 있다.

근래의 연구는 가족소득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인(nonlinear) 양상을 띠어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경우 소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Smith, Brooks-Gunn & Klebanov(1997)는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 사이에 IQ, 언어 능력 테스트 점수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빈곤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극빈 아동의 경우에는 그 점수가 특히 낮음을 발견하였다. Duncan et al.(1998)은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가족소득이 청소년의 학력연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10배정도 크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내의 연구도 빈곤이 교육성취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빈곤 청소년 집단은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0.33년 정도 학력연수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구인회, 2003).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를 이용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2004년도 전국 6,000명의 학생과 학부모 및 담임선생님과 학교 행정가 300명을 표본으로 하여 2004년부터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의 표본추출에는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다.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층화하고 지역별로 중학교,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를 각 100개씩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300개의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학교별로 4개 학급을 선정하고 학급별로 5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렇

게 선정된 표본에는 2004년도 시점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생 2,000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명의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가 포함되었다. 또 300명의 학교행정가(교감 혹은 교무담당교사)와 1121명의 담임선생님이 포함되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의 학생설문에는 성별, 종교 등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생활, 학교생활, 재학 중 근로 경험, 사교육 여부, 대학 진학 등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한 정보, 수능 성적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학교행정가 및 담임교사 설문에는 학생의 학습능력과 전교석차, 교원현황, 평준화 여부 등의 일반적 학교환경과 졸업자수/취업자수/진학자수/자퇴자수/징계자수, 평균출석률, 수업일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가구설문에서는 가구소득 및 지출, 자산,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상황, 교육과 관련된 가족환경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표본은 한국교육고용패널 표본 중 2004년 일반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20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 가족소득 등의 가족환경 정보와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후술하는 학업성취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학생으로 최종 표본을 구성한다.

2. 주요 변수

〈표 5-1〉은 분석에 포함될 주요 변수와 그 정의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교육성취는 2005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점수와 2005년과 2006년 기간 내 대학진학 여부(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로 측정된다. 대학진학이 가능함에도 재수를 선택한 청소년의 학력이 저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방지하기 위해 대학진학 여부는 2005년과 2006년 중 대학입학을 하였으면 진학한 것으로 판정한다.

독립변수 중 가족특성변수로는 인 가족소득, 가족규모, 가족구조와 부모

의 교육수준을 포함한다. 가족구조는 한부모가족 여부로 측정되고, 한부모 가족 기간은 출생 이후 18세(15세)까지 기간 중 한부모가족을 경험한 기간으로 측정되었다.

〈표 5-1〉은 분석에 포함될 주요 변수와 그 정의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교육성취는 2005년 대입 수능능력시험 점수와 2005년 대학진학 여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진학 여부로 측정된다. 수능 점수는 수리와 언어, 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으로 구하였다. 수능점수는 학력성취정도에 대한 훌륭한 양적 척도이지만,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2004년 총 4000명의 고등학교 3년생 중 2157명에 대해서만 수능점수를 수집하여 수능점수 표본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교육성취 변수인 대학진학 여부는 조사불능 사례를 제외한 3478명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여 표본선택의 편의가능성이 적다. 조사된 청소년 중 74.2%가 대학을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졸자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한 상태에서 진학 여부를 또 하나의 종속변수로 이용한다. 본 표본에서 4년제 대학 진학자는 48.9%, 전문대 진학자는 25.3%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가족특성변수로는 인 가구소득과 가구규모, 보호자의 교육수준, 가족구조를 포함한다. 가구소득 수준은 2004년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가구소득의 월평균액(십만 원 단위)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 표본의 월평균소득은 약 2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규모 변수와 같이 분석모형에 투입되어 소득의 효과를 추정하는데에 이용된다. 가구소득 월평균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계산되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를 가구소득 수준의 또 하나의 변수로 이용한다. 또한 욕구소득비를 범주화하여 독립변수로 이용한다.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의미하

며 욕구소득비 2는 소득이 빈곤선의 200%임을, 3은 300%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변수는 가족소득의 비선형 효과(nonlinear effect)를 포착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활용된다(Duncan & Brooks-Gunn, 1997). 마지막으로 빈곤여부를 또 하나의 독립변수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청소년 중 12.4%는 빈곤가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주요 변수와 정의, 기술통계

변수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육성취	2005년 수능(언어, 수리, 외국어) 표준점수 평균	97.04	2157
	2005년 대학진학 여부 (미진학=0),	(16.31)	3478
	2005년 대학진학유형 (미진학=0)	74.2%	3477
	전문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25.3% 48.9%	
가구소득	월평균 소득: 2004년 조사시점 기준 1년간 가족소득 월평균(십만원)	29.12 (20.1)	3880
	욕구소득비: 가족소득÷최저생계비	2.71 (1.88)	3879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욕구소득비 < 1	12.4%	
	1<= 욕구소득비 <2	28.3%	
	2<= 욕구소득비 <3 (기준범주)	28.1%	
	욕구소득비 >=3	31.1%	
빈곤 여부: 가족소득<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	12.4%		
가구규모	총 가구원수	4.25(0.93)	3879
여성보호자 교육수준	고졸 미만	33.1%	
	고졸 (기준범주)	54.5%	
	전문대	3.8%	3685
	4년제 대졸 이상	8.3%	
가족구조	2004년 한부모 여부 (양부모=0, 한부모/계부모/기타=1)	14.3%	3876
청소년 특성	성: 남성=0, 여성=1	46.6%	4000
	종교: 무=0, 유=1	56.3%	4000
	형제자매 수(본인 제외)	1.23 (0.74)	3880
	출생순서: 첫째=1, 둘째 이상=0	51.9%	3880
재학 고교 특성	지역규모: 중소도시(기준범주), 특별시/광역시, 농어촌.	50.5% 11.5%	4000

	고교계열: 일반계=0, 기타=1. 학교환경-학부모경제상태 :매우 나쁘다=1, 나쁜 편이다=2, 보통=3, 좋은 편이다=4, 매우 좋다=5	29.4% 2.64 (0.84)	4000 4000
사교육비	지난 1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 가구원에 대한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34.89 (45.94)	3871
청소년 건강상태	매우 허약=1, 허약=2, 보통=3, 건강=4, 매우 건강=5.	3.51 (0.82)	4000
재학중 근로경험	근로 경험=1, 비경험=0	28.7%	4000
가정생활 만족도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3.64 (0.91)	4000
보호자의 교육관여 및 기대	숙제 도움 (취학 전 책 읽어줌, 초중고 숙제 도움 각각 5점 척도, 최대 20점)	9.26 (2.88)	3874
	희망학력(고교 이하=1, 2-3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대학원 석사=4, 대학원 박사=5)	3.20 (0.97)	3876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3차 조사.

부모의 교육수준, 특히 모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보호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교육수준을 조사하였는데, 여성보호자의 대다수는 모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보호자의 교육수준을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가족구조를 친부모, 계부모, 편부, 편모,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를 친부모가족과 기타가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다. 청소년 중 약 14%가 이 기타가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가족은 대다수가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한부모가족으로 지칭한다.

청소년 개인 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의 성, 종교, 형제자매의 수, 출생순서(형제 중의 출생 순위) 등이 포함된다(Haveman & Wolfe, 1995; 이미정, 1998; 이정환,

1998; 방하남, 김기현, 2001).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소득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리라고 예상되는 주요 변수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가족소득은 가족의 거주지 이동이나 학생의 유학, 일반계나 실업계 등의 고교계열의 선택 등을 통해 고등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고교 선택은 다시 수능성적이나 대학진학 등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소득은 사교육에 대한 투자, 학생의 근로여부(학업 전념), 청소년의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미쳐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와는 달리 가족소득은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 관계 등 가족기능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 등에 영향을 미쳐 학생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 보호자의 희망교육수준과 숙제지원 정도의 다양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한다.

3. 분석 방법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능점수와 대학진학여부를 가족소득에 회귀시키는 모형을 추정한다. 질적 변수인 대학진학여부 모형의 추정에는 로짓 분석을 이용하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한 대학진학모형의 추정에는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한다. 양적 변수인 수능점수의 모형추정에는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우선, 가구소득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특성과 개인특성을 모두 통제한 기본모형에 월평균 가구소득과 욕구소득비, 빈곤 여부의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소득의 효과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위의 기본모형에 재학 고교특성 등 학교선택과 관련된 변수들, 사교육비, 재학 중 근로경험, 건강상태 등 청소년개인에 대한 직접적

인 인적투자와 관련된 변수들, 가족기능 관련 변수들 등을 위계적으로 추가하여 각각의 매개변수들이 가족소득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가족소득은 또한 대학진학자금의 충당능력이나 고교졸업 후 학생의 가계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쳐 대학진학여부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족소득의 영향의 존재나 그 정도는 가족소득의 영향 중 위의 매개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판정될 수 있다. 혹은 가족소득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대학진학비용 부담능력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대학진학 여부와 비교할 때 수능 점수는 대학진학 부담능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제3절 분석결과

1. 기초분석

우선 독립변수인 가구소득과 종속변수인 교육성취의 관계 양상을 보기 위하여 <표 5-2>에서는 범주화된 옥구소득비 별로 교육성취 수준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수능 평균점수의 분포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옥구소득비가 1미만인 빈곤층 청소년은 평균점수가 95.7인데,

44) 그러나 수능점수 모형과 대학진학 모형에서 가구소득 영향의 추정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이는 소득수준별 대학진학 확률의 차이가 대학진학비용의 부담능력 차이보다는 학업성취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학진학비용 부담능력이 대학진학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용부담능력에 맞추어 대학진학계획을 일찍이 결정할 경우에는 다시 수능시험의 준비에도 영향을 미쳐 수능점수 모형과 대학진학 모형에서 가구소득 영향의 추정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욕구소득비가 1과 2 사이인 청소년은 93.8로 조금 낮은 점수를 보였다. 욕구소득비가 2와 3 사이인 중산층 청소년은 98.9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욕구소득비가 3 이상인 고소득 청소년은 97.6으로 중산층 청소년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득정보가 없는 사례들의 수능 평균점수는 100.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소득 보고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한 고소득가구의 청소년들이 높은 수능점수를 얻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수능점수의 분포는 대체로는 고소득가구의 청소년이 높은 수능점수를 얻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양상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빈곤층 청소년이 저소득층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수능 표준점수의 평균치 대신에 수리, 언어, 외국어의 3개 영역 별 수능 표준점수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대와 다른 교육성취의 분포양상은 대학진학에서도 반복된다. 대학입학자의 비율은 (소득정보가 없는 집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욕구소득비가 3 이상인 고소득 청소년에서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빈곤층 청소년이 그 다음으로 높은 74.6%를 보였다.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비율을 볼 경우에는 빈곤층 청소년의 비율이 42.4%로 가장 낮고, 소득수준이 오르며 진학률도 높아지다가 욕구소득비가 3 이상인 고소득 청소년이 53.4%로 가장 높아진다. 이렇게 4년제 대학 진학의 경우에서만 교육성취의 소득계층별 분포가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5-2〉 소득수준별 교육성취

육구소득비	전체 사례수	수능 평균점수 (사례수)	대학입학 % (사례수)	4년제 대학 % (사례수)
0~1	585	95.71 (224)	74.67 (496)	42.42 (495)
1~2	1223	93.86 (573)	72.65 (1063)	44.45 (1063)
2~3	1046	98.99 (571)	73.27 (916)	49.31 (916)
3~	1025	97.68 (682)	75.87 (899)	53.47 (899)
소득정보 없음		100.23 (107)	78.18 (104)	60.72 (104)
계	3879	93.24 (2157)	74.25 (3478)	48.93 (3477)

〈표 5-1〉의 기술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 특히 수능 점수 평균 변수의 경우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많다. 〈표 5-2〉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누락이 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별로 사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수능점수 정보가 있는 사례는 2157로 육구소득비 정보가 있는 청소년 3879 사례 중 56%에 불과하다. 더욱이 육구소득비 정보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빈곤층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약 38%가 수능점수 정보가 있지만, 육구소득비가 증가할수록 47%, 55%, 66%로 수능정보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포가 수능 수험자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인지, 수능점수 조사에 동의비율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어서 나타난 결과인지를 알 수는 없다.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결과이든 수능점수 정보를 보유한 표본이 전체 고교 3년생 표본보다 고소득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양상은 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수능 평균점수와 4년제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한 대학진학 여부(대

입Ⅱ, 미진학=0, 전문대=1, 4년제대학=2), 대학입학여부(이하 대입Ⅰ)와 4년제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한 대학진학 여부(이하 대입Ⅱ)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수능 평균점수와 대입Ⅰ은 예상과 다르게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면, 욕구소득비는 수능 점수와 대입Ⅱ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욕구소득비가 1배 증가할 경우(최저생계비만큼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능평균점수는 0.07 증가하는 양적으로 무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 또한 세 가지 교육성취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보호자의 교육수준은 수능과 대입Ⅱ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상관관계 수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부모 여부는 교육성취의 어느 변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기존연구의 결과와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가구소득과 교육성취의 관계를 매개하리라고 예상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청소년이 재학한 고교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보면 이들 변수는 대부분 교육성취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고교의 소재지역(광역시/특별시=1, 중소도시=2, 농어촌=3)은 수능점수와 부의 관계를 보이나 대입Ⅰ과 대입Ⅱ와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실업계 고교계열에 재학하는 청소년은 낮은 교육성취의 수준을 보인다. 각 학교 학부모 집단의 경제적 수준은 수능점수와 대입Ⅱ와 정의 관계를 보인다.

고교계열과 학부모 경제수준과 같은 학교 특성변수는 가구소득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빈곤할수록 청소년은 실업계 고교나 학부모 경제수준이 낮은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양상에 따르면 이들 학교특성 변수는 가구소득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개인에 대한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역할을 보자. 청소년의 재학중 근로경험은 교육성취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가구소득과도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소득이 낮거나 빈곤한 청소년이 재학중 근로를 할 확률이 높으며, 재학 중 근로경험은 교육성취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교육비는 교육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가구소득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사교육비의 상관관계 계수는 낮은 수준이어서 욕구소득비가 1배 늘면 월평균 사교육비는 불과 0.5만원 증가하고, 빈곤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0.2만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교육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서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의 증가는 수능평균점수를 0.05점 증가시켜 욕구소득비 1배의 증가에 따른 수능점수 증가 0.07 점에 버금간다. 청소년의 건강은 교육성취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가구소득과도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 양상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이나 부모의 교육관여 및 교육기대와 관련된 변수들을 보자. 가정생활만족도, 보호자의 희망교육수준, 보호자의 숙제 도움 등의 변수들, 특히 앞의 두 가지 변수들은 교육성취와 정적인 관련을 보인다. 그러나 가정생활만족도는 욕구소득비나 빈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희망교육수준은 가구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숙제지원은 가구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교육성취 변수와는 일관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2. 분석모형의 추정결과

〈표 5-3〉에서는 다양하게 측정된 가구소득 변수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표준점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든 모형에는 모의 교육수준, 한부모가족 여부 등의 가구특성 변수와 청소년의 성, 종교, 자매 수, 출생 순서와 같은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결과 제시와 설명의 간결성을 위해 이들 변수의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되었다.

모형 I의 추정결과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수능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만원 증가할 경우 수능 평균점수는 0.04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모형 II의 추정결과는 빈곤 여부가 수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모형 III에서는 욕구소득비가 1배 증가할 경우 수능 평균점수가 0.4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V의 결과에 따르면 욕구소득비가 2-3인 중산층 청소년에 비해 욕구소득비가 1-2인 저소득층 청소년의 수능 점수가 5점 가까이 낮은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인 빈곤층 청소년은 중산층 청소년에 비해 2.4점정도 낮은 점수를 보이지만 저소득층 청소년에 비해서는 2.3점도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 여부 변수는 수능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3〉 가구소득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월평균 소득(십만)	.038**	.019						
가구규모	.198	.845						
빈곤			.018	1.319				
욕구소득비					.417**	.204		
욕구소득비								
0~1							-2.43*	1.43
1~2							-4.73***	1.01
3~							-1.78*	0.94
R2	.013		.010		.013		.021	

주: 1) *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2) 모든 모형에는 모의 교육수준, 한부모가족 여부, 청소년의 성, 종교, 자매 수, 출생 순서 변수 포함.

수능 평균점수 대신에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개별 수능 표준점수를 종속변수로 할 경우에도 가구소득의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는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언어 영역 점수의 경우에는 평균점수 모형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거나 소득의 효과가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평균점수 모형 추정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소득의 회귀계수나 통계적 유의도가 다소 떨어진다. 반면에 수리 영역 점수의 경우에는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5-3〉의 분석모형에는 다양한 통제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한부모 가족 여부 등 이 중 일부 변수는 가구소득의 영향을 매개하여 가구소득의 영향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욕구 소득비와 수능 평균점수는 0.07의 단순상관관계계수를 보여 변수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구소득의 영향이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4〉 가족배경과 청소년 특성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수	수능 평균		대학입학		전문대 입학		4년제 대학 입학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욕구소득비								
0~1	-2.43*	1.43	0.07	0.15	0.23	0.18	-0.03	0.16
1~2	-4.73***	1.01	-0.02	0.11	0.10	0.13	-0.09	0.12
3~	-1.78*	0.94	0.15	0.11	0.11	0.14	0.16	0.11
모 교육수준								
고졸 미만	-0.80	0.88	-0.16	0.09	0.06	0.11	-0.29***	0.10
전문대	1.89	1.79	-0.47	0.20	-0.60**	0.27	-0.42**	0.21
대졸 이상	1.12	1.30	-0.10	0.15	-0.45**	0.21	0.03	0.16
한부모가족	0.16	1.35	-0.07	0.14	-0.06	0.16	-0.07	0.15
청소년 성	1.47**	0.74	0.04	0.08	0.12	0.10	-0.01	0.09
청소년 종교	-1.61**	0.74	-0.02	0.08	0.03	0.10	-0.04	0.09
형제자매 수	-0.85	0.56	-0.06	0.06	-0.07	0.07	-0.06	0.06
출생순서(첫째=1)	-1.39*	0.78	-0.14	0.09	-0.03	0.11	-0.20**	0.09
상수	101.07	1.27	1.21	0.14	-0.07	0.17	0.91	0.15
R2 (LL)	0.021		-1842.4		-3330.7			

주: *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표 5-4〉에서는 청소년의 교육성취를 수능 평균점수 이외에도 대학입학여부와 전문대와 4년제대학을 구분한 대학진학여부 등으로 변수화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능 평균점수 모형은 회귀분석, 대학입학모형(대입 I)은 로짓분석, 전문대와 4년제대학을 구분한 대학진학여부 모형(대입 II)은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5-3〉에서 확인된 가구소득의 비선형적 효과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은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변수로 측정되었다. 모형별 추정결과의 비교를 위해 통제변수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도 제시하였다. 모형 I의 결과는 〈표 5-3〉의 모형 IV 결과를 옮겨온 것이다.

수능 평균점수 모형과는 달리 대입 I 모형이나 대입 II 모형에서는 욕구소득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교육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의 교육수준이나 한부모가족 여부 변수도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입 II 모형에서 미진학과 대학진학을 비교한 추정 결과에서만 고졸 미만 모의 청소년이 고졸 모의 청소년보다 낮은 입학 확률을 보여 모의 교육수준 변수가 어느 정도 이론적 기대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이나 종교, 출생순서 등의 변수는 수능점수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거나 다른 모형에서는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5〉에서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확인된 수능 평균점수의 경우에 대해 어떤 요인들이 가구소득의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모형 I의 추정결과는 〈표 5-4〉의 모형 I의 결과를 옮겨온 것이다.

모형 II에서는 청소년 재학 고교의 소재 지역, 재학고교의 계열, 재학고교의 학부모 경제적 수준의 세 가지 학교특성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들 세 가지 변수는 모두 수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청소년에 비해 광역시 등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1.5점 높은 수능점수를 얻고 농어촌의 청소년들은 2.5점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일반계 고교의 청소년에 비해 실업계 등 비일반계 고교의 청소년은 18.5점 낮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고교 계열의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준다. 재학고교의 학부모 경제수준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학부모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학교(경제수준=1)의 청소년과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학교(경제수준=5)의 청소년은 10점 정도의 수능 평균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특성 변수의 추가로 모형의 설명력이 0.02에서 0.21로 크게 증가하였음도 눈에 띈다.

〈표 5-5〉 가구소득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가구소득비								
0~1	-2.43*	1.43	-0.36	1.29	-0.18	1.29	-0.02	1.28
1~2	-4.73***	1.01	-3.35***	0.91	-3.38***	0.90	-3.46***	0.90
3~	-1.78*	0.94	-1.40	0.85	-1.22	0.86	-1.24	0.86
모 교육수준								
고졸 미만	-0.80	0.88	0.30	0.79	0.66	0.79	0.77	0.79
전문대	1.89	1.79	0.77	1.61	0.59	1.59	0.23	1.58
대졸 이상	1.12	1.30	-0.27	1.17	-0.31	1.16	-0.11	1.17
한부모가족	0.16	1.35	1.18	1.21	0.72	1.20	0.85	1.19
청소년 성	1.47**	0.74	1.60**	0.66	1.67**	0.66	1.59**	0.65
청소년 종교	-1.61**	0.74	-1.89***	0.67	-1.92***	0.66	-2.05***	0.65
형제자매 수	-0.85	0.56	-1.06**	0.51	-1.06	0.50	-1.08**	0.50
출생순서(첫째=1)	-1.39*	0.78	-1.51**	0.70	-1.62	0.70	-1.47	0.70
거주지(시구군=0)								
특별시/광역시			1.57**	0.70	1.34	0.69	1.15	0.69
읍면, 도서			-2.49*	1.32	-2.19	1.30	-2.40	1.30
고교계열(일반=0)			-18.55***	1.13	-16.79***	1.14	-16.76***	1.14
학부모 경제수준			2.55***	0.44	2.52***	0.43	2.36***	0.43
재학 중 근로경험					-6.71***	0.84	-6.07***	0.84
사교육비					0.00	0.01	0.00	0.01
건강상태					0.18	0.40	-0.36	0.40
가정생활만족도							2.60***	0.38
희망교육수준							-0.03	0.38
학업 도움 제공							0.13	0.12
상수	101.07	1.27	94.93	1.80	95.50	2.32	87.12	2.99
R2	0.021		0.211		0.236		0.254	

자료: *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이들 학교특성 변수의 추가와 함께 욕구소득비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청소년과 빈곤층 청소년의 격차(욕구소득비 0-1의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도를 잃었고, 중산층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격차(욕구소득비 1-2의 회귀계수)는 1.4점정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욕구소득비의 영향력 감소는 가구소득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 중 상당부분이 고교 선택을 통해 작동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모형 III에서는 재학 중 근로경험,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청소년의 건강상태의 세 가지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중 재학 중 근로경험 변수는 수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회귀계수 값도 -6.7로 근로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수능 평균점수가 6.7점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교육비 변수나 건강상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변수는 고교 선택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어 그 영향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교육성취에 높은 성과를 보이는 고교를 선택하는 가구에서 사교육비도 높은 수준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표 5-5>의 모형 I에서는 <표 5-4>의 모형 III에서 학교특성 변수만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 제시와 설명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결과 욕구소득비 변수와 매개변수의 추정치만을 제시하였다. 모형 I의 결과에 따르면 재학 중 근로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영향력도 증가하여 근로경험 여부에 따라 무려 10점의 수능 평균점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사교육비와 건강상태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욕구소득비의 회귀계수를 <표 5-4>의 모형 I과 비교하면 중산층 청소년과 빈곤층 청소년의 격차(욕구소득비 0-1인 회귀계수)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5-5>의 모형 II에서는 세 가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세 가지 변수 중 하나씩을 개별투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모형 I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

였다. 이상의 결과는 가구소득의 영향은 학교선택과 함께 청소년의 근로 경험을 통해 수능점수에 영향을 미치며 근로경험은 주로 빈곤층 청소년의 수능점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표 5-4>로 돌아가 모형 IV의 결과를 보자. 모형 IV에서는 모형 III에 가정생활만족도와 보호자의 희망교육수준, 보호자의 숙제 지원 변수를 추가하였다. 추정 결과 가정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큰 영향을 미쳤다.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청소년(만족도=5)은 가장 낮은 청소년(만족도=1)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수능 평균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6> 가구소득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 추가분석

변수	모형 I (동시투입)		모형 II (개별투입)		모형 III (동시투입)		모형 IV (개별투입)	
육구소득비								
0~1	-1.78	1.40			-1.99	1.42		
1~2	-4.47***	0.98			-4.57***	0.99		
3~	-1.60*	0.94			-1.99**	0.93		
재학 중 근로경험	-10.38***	0.90	-10.34***	0.89				
사교육비	0.01	0.01	0.01	0.008				
건강상태	0.42	0.43	0.15	0.44				
가정생활만족도					3.26***	0.41	3.27***	0.41
희망교육수준					1.11***	0.41	1.19***	0.41
학업 도움 제공					0.14	0.13	0.16	0.31
R2	0.085				0.056			

그러나 이들 가족관계 변수 또한 학교선택 변수나 청소년 개인에 대한 투자변수와 상관관계로 인해 그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표 5-6>의 모형 III에서는 <표 5-5>의 모형 IV에서 학교선택 변수와 개인투자 변수를 제외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보호자의 희망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되었다. 또 가정생활만족도와 희망교육수준, 학업 도움 제공 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모형 IV에서 각 변수를 하나씩 개별 투입한 결과 모형 III의 동시투입 결과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제4절 소결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가구소득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이 주목된다. 가구소득은 수능 평균점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입학여부나 전문대와 4년제대학을 구분한 대학진학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수능 평균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전반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수능 평균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인 양상을 보여 욕구소득비가 2-3인 중산층 청소년의 점수가 가장 높고 욕구소득비가 3 이상인 고소득층 청소년과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인 빈곤층 청소년 순으로 낮아지다가 욕구소득비 1-2인 저소득층 청소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구소득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로로서 재학한 중고등학교의 성격과 사교육 투자의 정도에 주목하였다. 오호영(2006)은 한국고용교육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소득이 수능점수에 미친 영향이 주로 고등학교의 선택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현행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도 평균적 소득수준으로 측정한 고등학교 재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고교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학교 격차가 교육의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가구소득이 자녀의 학업성취나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사교육지출이 차지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사교육의 영향에 대해 일치된 발견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한국 교육고용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들은 대체로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작은 영향을 발견하였다(이명현·김진영, 2005; 반상진 외(2005); 최형재(2007)에서 재인용). 한국교육고용패널을 분석한 이기중(2007) 또한 사교육이 수능점수에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지만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이은우(2006)는 사교육 여부가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이기중(2007)에서 재인용). 또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최형재(2007)는 사교육지출이 상위대학 진학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양정호(2007)도 사교육 참여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영향은 지역이나 계열, 학교의 학부모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되는 고교의 선택과정을 통해서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학 중 근로경험과 가정생활만족도가 가구소득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나 숙제 지원 등의 직접적인 학업 도움 등 일반적으로 중요하리라 예상되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본 연구의 발견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되게 분석된 수능 평균점수의 모형의 경우 분석 표본이 한국교육고용패널에 포함된 전체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의 변수 등 본 연구의 중요 독립변수가 청소년이 고3 시기인 2004년 한 해에 조사되었다는 점도 그 영향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 등은 아동의 어린 시기일수록 그 영향

이 크게 나타나며 또 한 해에 측정된 가구소득은 청소년기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구소득의 측정 시기나 기간상의 문제가 본 연구의 분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부모 교육수준, 가족구조 등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 확인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예측과 다른 양상의 영향을 보이는 점도 다른 조사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제6장 교육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분석

제1절 연구문제

교육의 다양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그것을 통한 계층(계급)의 유지 혹은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⁴⁵⁾. 개인은 교육 성취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어떤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자본주의적 성취사회는 세대내 혹은 세대간 계층(계급)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개방사회(open society)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드아디오(d'Addio 2007)는 사회이동, 특히 세대간 이동의 세 가지 측면을 역설한다. 첫째, 세대간 이동을 통해 자원이 세대에 걸쳐 할당되는 방식은 상이한 세대의 전체 소득분포로 정의되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의 행위는 과거세대의 유산을

45) 사회이동이란 주어진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생애 과정 내(세대내) 혹은 세대를 넘어(세대간)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특히, 사회학자들은 전형적인 계급과 직종에 있어서의 세대간 이동을 분석하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사회이동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학 문헌은 또한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을 구분한다. 전자는 단순히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를 보는 반면, 후자는 상이한 계급의 사람들이 특정 사회계급으로 유입될 확률—즉, 특정한 이동 변환을 일컫는다(d'Addio 2007).

체현하고, 미래세대는 현재 결정된 것을 대물림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래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세대간 이동은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며 자원의 공평한 할당을 달성함으로써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결된 기회보다는 그들 능력과 노력 덕분에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간 이동의 정도는 기회 평등의 척도로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이동은 더 큰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낮은 세대간 이동은 일부 개인의 재능이 낭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재능의 할당이 최적이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손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d'Addio 2007). 이러한 드아디오의 관점은 그 자체로 기능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이동이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통합성과 효율성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념형적으로 볼 때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사회를 개방사회(open society)라고 정의한다면 이에 대비되는 사회는 물론 폐쇄사회(closed society)로 정의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완전 개방사회와 완전 폐쇄사회를 양 극단으로 하는 평행선상의 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개방적인, 혹은 점점 더 폐쇄적인 사회로 변화해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개방성과 폐쇄성 정도는 결국 현존하는 불평등 증 얼마만큼이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 정도와, 이러한 불평등의 세습과 재생산 과정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

습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 비가시적이거나 비물질적인 부분—예컨대 유전—들의 상당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변량으로 남게 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세대간 소득이동과 학력성취 정도의 이동을 교차분석 해 봄으로써 세대간에 교육과 소득이 얼마나 세습되는가를 코호트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소득, 직종)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녀의 학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개방성과 폐쇄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 특히 학력이 이러한 개방성과 폐쇄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200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 결과이다. 한국복지패널 1차조사 결과는 가구조사표 기준 7,072가구, 가구원 조사표(중고생을 제외한 15세 이상 가구원) 기준 14,469명에 대해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제도, 개인사(life history) 등 포괄적인 항목들을 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사 항목으로 응답자의 아동기 경제상태, 부모의 학력과 직종, 성장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미곤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중 20세~59세 남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가구소득의 일차소득이 가구주에 의해 가장 많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1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의해

가구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여성 가구를 제외시킨 것은 본 연구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교육의 소득효과가 남성과 여성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석결과에 있어서의 혼란(noise)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20세~59세 남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할 때 총 분석 사례수는 3,557명이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준 이후의 사례수는 명목적 사례수와 다르다.

2. 연구방법 및 변수

가.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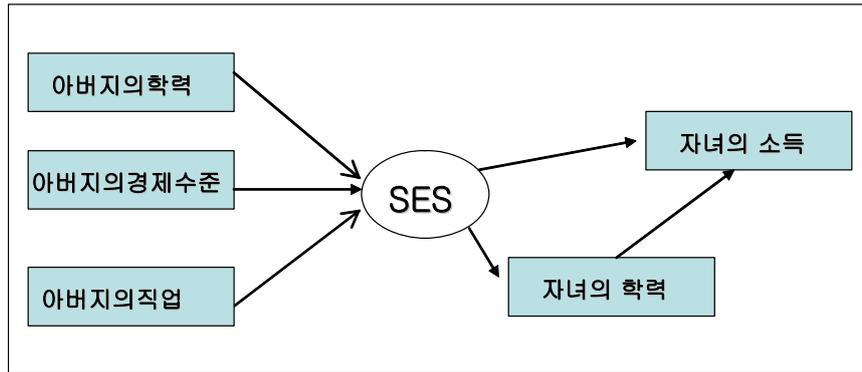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의 소득 및 학력과 응답자의 소득 및 학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표, 카이자승검증, 그리고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한다. 단순 상관관계표는 행렬이 많아질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카이자승 검증의 경우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만 검증해 줄 뿐이며, 그나마도 사례수(n)이 증가하면 거의 항상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사회과학과 마케팅 분야 등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응분석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소득과 학력의 근접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응분석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범주형(categorical) 자료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범주형 변수의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f categorical variables)라 불린다. 즉, 대응분석은 유클리디안 거리 대신 피어슨의 카이자승 거리를 측정하여 행 변수(column point)와 열 변수(row point)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AS 7.0와 Stata 9.0를 이용하여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응분석은 열(row) 범주의 유사성, 행(column) 범주의 유사성, 그리고 행과 열 변수 간의 관계를 열(행) 좌표(coordinates)와 도표상의 원점(origin)을 통해 탐색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대응분석은 대부분 도표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즉, 도표는 대응분석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도표에서 열(행) 범주들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열(행) 프로파일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또한, 열(행) 프로파일과 열(행) 중심(centroid)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 열(행)이 모집단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열과 행 간의 관계는 열 포인트(r)과 행 포인트(c) 간의 거리가 아니라, 원점-열 포인트(OR)와 원점-행포인트(OC)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OR과 OC가 같은 방향이면 이 둘(r과 c) 간에는 강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둘은 독립적인 관계라고 가정했을 때보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OR과 OC의 길이가 길수록 즉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r과 c 간에는 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경제적 수준, 직종,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로분석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아버지의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이라는 세 가지 측정변수에 의해 추정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잠재변수를 가진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AMOS 7.0을 이용하였다.

[그림 6-1] 경로분석 모형



나. 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아래 <표 6-1> 과 같다. 우선 소득은 연간소득으로서 1인 균등화된 일차소득이다. 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으며,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의 합계액이다. 대응분석을 위해서는 연속형 변수인 소득을 범주형 변수(서열변수)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하위계층(1분위), 중하위계층(2~3분위), 중위계층(4~7분위), 중상위계층(8~9분위), 상위계층(10분위)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부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가구주의 아동기 시절(0~17세)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의 5범주로 구분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주 부(父)의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학이상(전문대 포함)의 4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가구주의 학력 범주와 가구주 부의 학력 범주를 달리 설정한 것은 가구주의 경우 초졸이하의 빈도가 매우 낮고 대졸이상의 빈도가 높은 반면,

가구주 부의 경우 대졸이상의 빈도가 매우 낮고 초졸이하의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직종과 관련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⁴⁶⁾에 따른 직업분류를 사용하였다⁴⁷⁾.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체계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10개 분류와 군인을 별도의 구분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체계를 준용하되 이를 좀 더 단순화하여 가구주의 경우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어업숙련종사자 및 기능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주부, 무직, 기타의 5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가구주 아버지 직업의 경우 전 세대에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였고 사무직이 비

46)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제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후 통계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설정하게 되어 1958년 제정, 각국에서 사용토록 권고된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를 근거로 1963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미비점과 불합리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68, 88)과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다.(70, 74, 92). 1992년 4차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전면 개정된 이래 7년이 경과 하였으며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출현하였고, 산업의 기계화에 따라 많은 직업이 쇠퇴하여 직업분류를 전면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개정작업에 착수, 1년 6개월에 걸쳐 제5차 개정작업을 추진, 통계청 고시 제 2000-2호(2000. 1. 7)로 확정·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http://laborstat.molab.go.kr>).

47) 국제비교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직업분류체계로는 Treiman's 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SIOPS), Ganzeboom et al.'s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 Erikson and Goldthorpe's class categories (EGP) 등이 있다. 이러한 직업분류체계에 기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분류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연구가 아니며 한국 실정에 맞는 분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준용하였다.

교적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사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농어업숙련종사자/ 기능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주부, 무직, 기타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코호트별 분석을 위하여 연령을 20~39세, 40~49세, 50~59세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대와 30대를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은 20대 가구주의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부분 90년대 고학력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공유했던 세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표 6-1〉 변수명과 변수의 정의

변수명	변수리스트	변수값
eqin_p	균등화된 일차소득	단위: 만원/연간
eqin_px5	균등화된 일차소득의 5범주 구분	1분위=1 2-3분위=2 4-7분위=3 8-9분위=4 10분위=5
eco_f	부의 경제적생활수준	매우가난=1, 가난=2, 보통=3 부유=4 매우부유=5
edu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1, 고졸이하=2, 전문대졸이하=3, 대졸이상=4
edu_f	부의 교육수준	초졸이하=1, 중졸이하=2, 고졸이하=3, 대학이상=4
occ	가구주의 직종	단순노무, 주부, 무직, 기타=1, 농어업숙련종사자, 기능조립종사자=2 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3, 기술공 및 준전문가=4, 고위공무원및전문가=5
occ_f	부의 직종	기능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주부, 무직, 기타=1, 농어업숙련종사자=2, 서비스, 판매종사자=3, 사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4, 고위공무원및전문가=5
age	가구주의 연령	20/39=1, 40/49=2, 50/59=3

제3절 분석결과

1. 대응분석 결과

먼저,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 간의 대응분석의 결과는 〈표 6-2〉와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연령집단에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χ^2 는 689.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학력이 초졸이하인 경우, 자녀가 중졸이하인 실제 빈도는 602명으로 기대빈도인 397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대졸이상인 실제 빈도는 593명으로 기대빈도 852명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저학력일 경우 그 자녀 역시 저학력일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졸이하인 실제 빈도는 8명으로 기대빈도 52명보다 훨씬 적으며, 자녀가 대학이상인 실제 빈도는 243명으로 기대빈도 111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고학력일 경우 그 자녀 역시 고학력일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수준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 6-2〉 하단의 표와 [그림 6-2]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열 좌표(row coordinates)와 행 좌표(column coordinates)에서 초졸이하 부모(1)와 중졸이하 자녀(1), 중졸 및 고졸 부모(2, 3)와 전문대졸 자녀(3) 그리고 대학이상 부모(4)와 대졸 자녀(4)는 1차원과 2차원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와 동일하게 초졸 이하의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중졸 이하일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대졸 이상의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대졸 이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2〉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자의 학력 부의 학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	총합
초졸 이하	빈도	602	1186	202	593	2583
	기대빈도	397	1064	269	852	
	χ^2 기여도	105.616	13.995	16.991	78.822	215.425
중졸 이하	빈도	29	294	97	221	641
	기대빈도	99	264	67	211	
	χ^2 기여도	49.693	3.390	13.943	0.428	67.454
고졸 이하	빈도	26	247	119	369	762
	기대빈도	117	314	79	251	
	χ^2 기여도	70.719	14.173	20.098	55.160	160.150
대학 이상	빈도	8	53	32	243	336
	기대빈도	52	138	35	111	
	χ^2 기여도	37.140	52.533	0.231	157.027	246.931
총합		664	1781	451	1426	4322
χ^2 기여도		263.168	84.092	51.265	291.436	689.960

	Row Coordinates			Column Coordinates		
	Inertia	Dim1	Dim2	Inertia	Dim1	Dim2
1	0.3122	0.2859	0.0410	0.1108	0.5976	0.1963
2	0.0978	-0.1994	-0.2535	0.3504	0.1904	-0.1030
3	0.2321	-0.4514	-0.0680	0.1168	-0.2447	-0.2251
4	0.3579	-0.7938	0.3229	0.4220	-0.4389	0.1084

각 연령별 대응관계는 [그림 6-2]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먼저 50대의 경우 전체 연령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1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간에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둘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졸이하의 아버지와 중졸이하의 자녀 간의 관계 또한 방향성이 동일하며, 중졸이하 및 고졸이하 아버지와 고졸이하 및 전문대이하의 자녀 간의 관계 또한 방향성이 동일하다. 즉, 50대의 경우도 예외없이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학력의 아버지를 둔 자녀 역시 고학력일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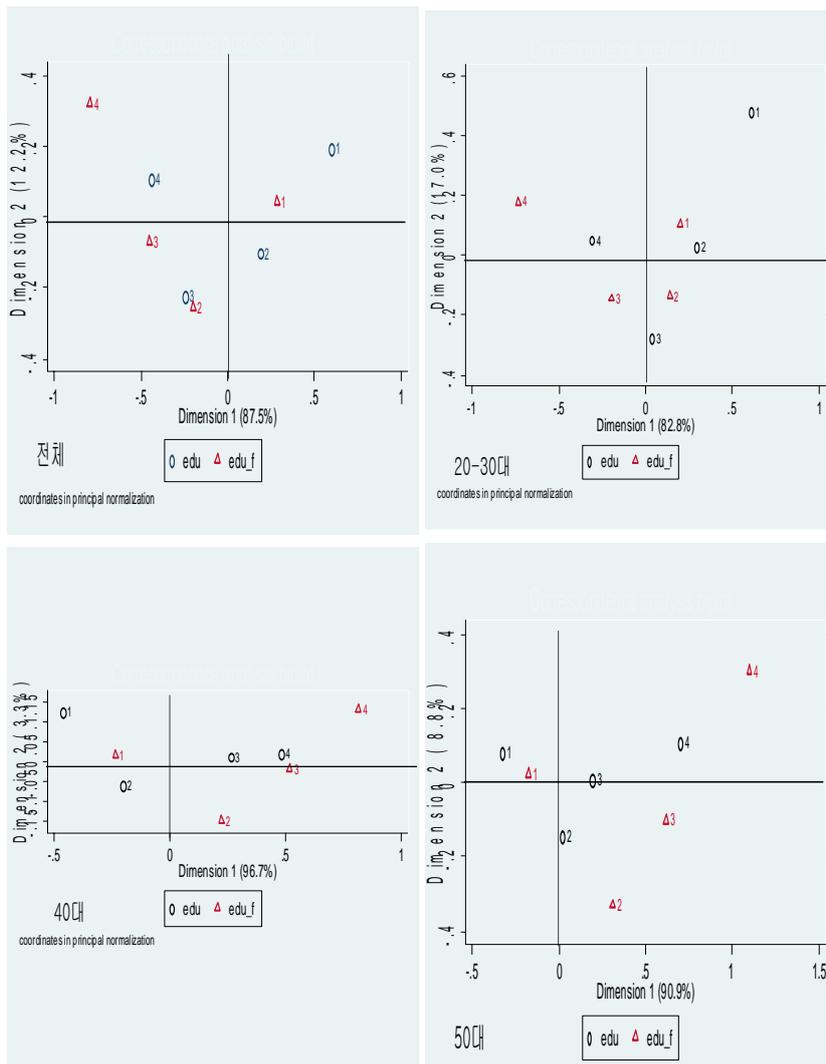
40대의 경우 약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가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를 고려하면 대졸이상 자녀는 고졸이하 아버지와 훨씬 더 가깝게 나타난다. 40대의 경우 고졸이하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전문대졸이하 혹은 대졸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방향성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초졸이하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고졸이하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⁴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40대의 경우 50대에 비해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50대의 경우 대학이상 아버지-대졸이상 자녀, 초졸이하 아버지-중졸이하 자녀와 같이 묶여졌다면, 40대의 경우 고졸이하 아버지-대졸이상 자녀, 초졸이하 아버지-고졸이하 자녀와 같이 묶여져 50대에 비해 자녀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8) 일반적으로 대응분석에서는 방향성과 중심과의 거리(OR과 OC)가 중요하지만, 비록 다른 사분면에 존재하더라도 각 포인트와 중심 간의 삼각형이 예각을 형성한다면 두 포인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30대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는 전체 대응분석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표상의 점들의 관계는 방향성과 거리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방향성의 측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1사분면에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및 고졸이하 자녀가 공존한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초졸이하인 경우 자녀의 학력이 중졸이하이거나 고졸이하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거리의 측면에서(OR과 OC) 초졸이하의 아버지와 고졸이하의 자녀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는 2사분면에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가 함께 나타난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 자녀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20대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학력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 학력과 자녀 학력의 양극단치의 경우는 모든 코호트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며 대체로 원점(centroid)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즉, 대학이상 아버지-대졸이상 자녀와 초졸이하 아버지-중졸이하 자녀는 항상 도표 상에 같은 사분면에 존재하며, 특히 많은 설명력을 가진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는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간 영역에서의 이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양 극단으로의 이동은 어려우며,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둘째, 특히 40대의 경우 부모에 비해 자녀의 전반적인 학력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40대에서는 50대에 비해 초졸이하 아버지-고졸이하 자녀, 고졸이하 아버지-대졸이상 자녀 간의 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대를 전후로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2]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 학력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다음으로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는 <표 6-3> 및 [그림 6-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연령집단에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χ^2 는 6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지만, 비슷한 사례수를 감안할 때 그 차이는 교육수준에 비해 작은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하위계층인 경우와 아버지는 중하위계층이고 자녀는 상위계층인 경우 χ^2 의 기여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매우 가난한 집단의 실제 빈도는 44명으로 기대빈도 28명에 비해 많은데 비해, 아버지 세대는 가난하지만 자녀 세대는 상위계층인 집단의 실제빈도는 105명으로 기대빈도 147명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즉, 이는 매우 가난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하위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는데 반해, 가난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산층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중하, 중, 중상계층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자녀가 하위계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세대의 경제수준이 자식세대의 경제수준과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예외적으로 큰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 6-3> 하단의 표와 [그림 6-3]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열 좌표(row coordinates)와 행 좌표(column coordinates)에서 하위계층 아버지(1)와 하위 및 중하위계층 자녀(1, 2), 중상위 및 상위계층 아버지(5)와 상위계층 자녀(5)는 1차원(dimension 1)과 2차원(dimension 2)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와 동일하게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가난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부유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3〉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자의 경제수준 부의 경제수준		하	중하	중	중상	상	총합
매우 가난	빈도	44	70	103	41	28	286
	기대빈도	28	57	116	56	29	
	χ^2 기여도	9.2663	2.9656	1.4795	4.1117	0.0204	17.8436
가난	빈도	161	297	640	263	105	1465
	기대빈도	143	291	597	287	146	
	χ^2 기여도	2.1020	0.1381	3.0812	2.1527	11.8752	19.3492
보통	빈도	174	411	884	449	243	2161
	기대빈도	212	429	880	424	216	
	χ^2 기여도	6.6045	0.7873	0.0120	1.5182	3.4070	12.3289
부유	빈도	46	87	154	95	60	443
	기대빈도	43	88	181	87	44	
	χ^2 기여도	0.2139	0.0033	3.8641	0.8190	5.3957	10.2959
매우 부유	빈도	5	8	11	14	4	42
	기대빈도	4	8	17	8	4	
	χ^2 기여도	0.1884	0.0181	2.5478	4.7209	0.0038	7.4790
총합		430	873	1791	863	440	4397
		18.3750	3.9124	10.9846	13.3225	20.7022	67.2966

	Row Coordinates			Column Coordinates		
	Inertia	Dim1	Dim2	Inertia	Dim1	Dim2
1=하	0.2651	-0.1645	0.1835	0.2730	-0.1601	0.1279
2=중하	0.2875	-0.1070	-0.0382	0.0581	-0.0501	0.0418
3=중	0.1832	0.0701	-0.0251	0.1632	-0.0351	-0.0683
4=중상	0.1530	0.1002	0.1140	0.1980	0.1073	-0.0074
5=상	0.1111	0.1863	0.1727	0.3076	0.1888	0.0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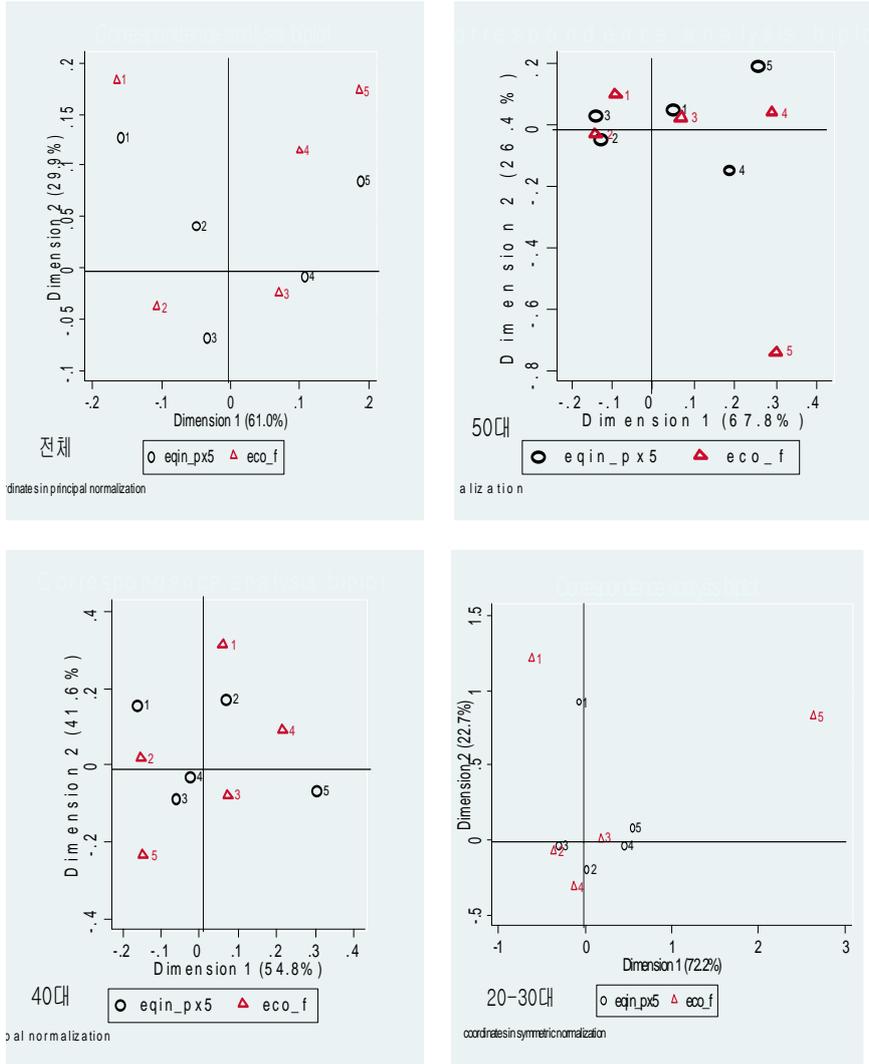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 간의 관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상계층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원점으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이들 열 포인트와 행 포인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계층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하위계층 아버지와 중위계층 자녀, 그리고 중하계층 아버지와 중하계층 자녀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50대의 경우 중상계층 이상의 경우 부모세대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하의 집단 간에는 상호 이동이 비교적 활발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경우 세대간 계층이동이 매우 역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계층과 중상계층의 부모와 중하계층 자녀가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위계층 부모와 중하계층 자녀가 y축에 좀 더 가깝게 분포해 있어 이들 간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부유한 부모와 중위 및 중상계층 자녀도 동일한 방향성을 갖지만 OR과 OC의 거리로 볼 때 그 관계의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부모와 상위계층 자녀, 중하계층 부모와 하위계층 자녀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이 40대의 경우 부모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 간에 어떠한 일관성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정도도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 대부분의 계층집단에 원점 근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매우 빈곤한 부모와 하위계층의 자녀는 동일한 방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y축의 중심점(centroid)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30대에서는 매우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역시 하위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계층 집단들 간에는 비교적 높은 이동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의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먼저,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비교적 계층간 경제수준의 세습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연령집단별로 분석할 경우 코호트효과와 연령효과가 섞여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50대의 경우 노동시장 퇴출기로서 이전의 노동시장 지위나 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진정한 세습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20~30대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기로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잠재적 소득능력과 관계없이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령효과가 코호트효과를 교란시킨 결과 진정한 세습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학력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히 매우 빈곤한 집단 간의 빈곤의 세습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반대로 부유한 계층 간의 세습효과 역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경우 다른 계층과는 달리 극빈층 부모를 둔 자녀가 여전히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간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집단과 부유한 집단 간의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 될 수록, 전반적인 부가 증가하면 할수록 극빈층은 절대적·상대적 수준에 있어 더 열악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3] 아버지의 경제수준과 자녀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교육이 보편화될수록, 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진정한 계층이나 계급을 구분하는 지표로서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소득의 경우 연령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영자 등의 경우 역동성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계층 혹은 계급의 지표로서 완전하지 않다. 이에 비해, 직업의 경우 직업간 이동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각 집단의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연령효과도 크지 않아 계층 혹은 계급의 지표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는 〈표 6-4〉 및 [그림 6-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χ^2 는 308.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교육수준보다는 작지만 경제수준보다는 훨씬 더 컸다. χ^2 의 기여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집단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기능조립직 자녀와 전문가 자녀, 사무직 혹은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기능조립직 자녀와 사무직 자녀, 전문가 아버지를 둔 전문가 자녀 등이다. 예를 들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전문가 자녀의 실제 빈도는 102명으로 기대빈도 176명에 크게 못 미치는 비해, 이들 자녀가 기능조립직에 종사하는 실제 빈도는 858명으로 기대빈도인 719명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전문가 아버지를 둔 전문가 자녀의 실제 빈도는 36명으로 기대빈도 12명의 세 배에 이르는 데 비해, 이들 자녀가 기능조립직에 종사하는 실제 빈도는 18명으로 기대빈도 49명의 약 1/3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시기에 사회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이동의 계층별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종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직업 경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6-4〉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전체)

자녀의 직업 부의 직업		단순노무직	기능조립직	사무직	준전문가	전문가	총합
단순 노무, 기능	빈도	107	266	195	60	56	683
	기대빈도	83	239	240	62	59	
	χ^2 기여도	6.985	2.894	8.474	0.117	0.120	18.589
농어 업	빈도	285	858	635	171	102	2051
	기대빈도	250	719	720	187	176	
	χ^2 기여도	5.052	26.826	9.929	1.313	31.237	74.357
서비 스,관 매	빈도	60	159	264	53	73	609
	기대빈도	74	213	214	55	52	
	χ^2 기여도	2.729	14.030	12.055	0.154	8.519	37.487
사무, 준전 문가	빈도	32	123	274	67	81	577
	기대빈도	70	202	202	53	50	
	χ^2 기여도	20.835	31.214	25.492	4.013	19.808	101.363
전문 가	빈도	10	18	56	20	36	140
	기대빈도	17	49	49	13	12	
	χ^2 기여도	2.974	19.540	0.992	3.563	49.355	76.424
총합		494	1423	1425	370	349	4060
		38.575	94.504	56.943	9.159	109.039	308.219

	Row Coordinates			Column Coordinates		
	Inertia	Dim1	Dim2	Inertia	Dim1	Dim2
1	0.0603	-0.1282	0.1020	0.1252	-0.2595	0.0915
2	0.2412	-0.1892	-0.0180	0.3066	-0.2573	0.0008
3	0.1216	0.2365	-0.0424	0.1847	0.1816	-0.0824
4	0.3289	0.4095	-0.0820	0.0297	0.1353	0.0309
5	0.2480	0.6780	0.2881	0.3538	0.5322	0.1713

대응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 6-4> 하단의 표와 [그림 6-4] 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열 좌표(row coordinates)와 행 좌표(column coordinates)에서 단순노무직 및 기능조립직 아버지(1)와 단순노무직 자녀(1) 및 기능조립직 자녀(2), 서비스 및 판매직 아버지(3), 사무직 및 준전문직 아버지(4)와 사무직 자녀(3), 그리고 전문직 부모(5)와 전문직 및 준전문직 자녀(4)는 1차원(dimension 1)과 2차원(dimension 2)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6-4] 의 결과는 1-1, 2-2, 3-3, 5-5 간의 대응성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방향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1-1, 3-3, 5-5의 경우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상당히 먼 것으로 보아 이들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하위직종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하위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반대로 상위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자녀 역시 상위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연령별로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한 [그림 6-4] 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50대의 경우,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에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x축 중심점(centroid)으로부터의 거리도 멀어 이 둘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노무직 혹은 기능조립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간에도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y축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 이 둘 역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기능조립직 자녀 역시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아 그 관계의 밀접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50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단순노무직 또는 기능직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의 경우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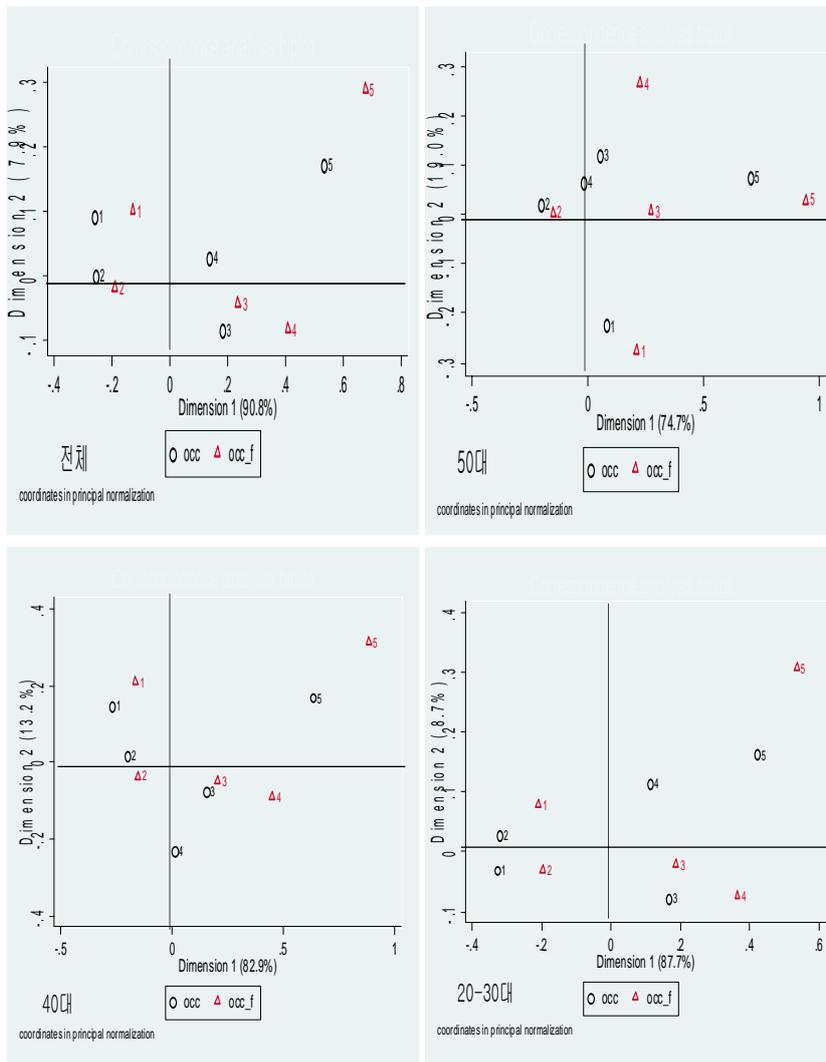
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40대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즉, 1-1, 2-2, 3-3, 5-5 간의 대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40대에서도 50대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부모와 전문가 자녀 간, 단순노무직 및 기능조립직 부모와 단순노무직 자녀 간에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x축과 y축의 중심점(centroid)과 거리 또한 떨어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문가 부모를 둔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단순노무직 부모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0-30대에서 이러한 양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전문직 부모와 전문직 자녀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비스 판매직 부모와 사무직 자녀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노무 및 기능직 부모와 기능조립직 자녀 간, 농어업직 부모와 단순노무직 자녀 간에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네 집단은 비슷한 위치에 모여 있으며 집단간 이동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 직업 간의 대응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모 세대의 직업과 자식세대의 직업 간의 대응성이 매우 뚜렷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의 경우 연령효과가 적고 직업간 이동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계층 혹은 계급의 고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특히, 모든 연령집단에서 전문직의 경우 계층(계급)내 이동이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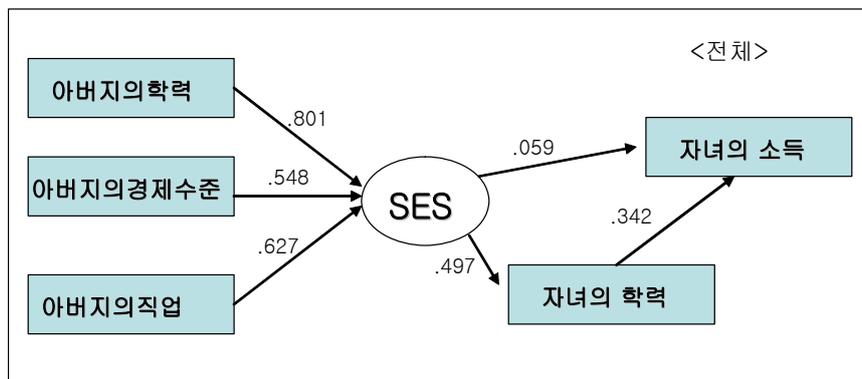
[그림 6-4] 아버지 직업과 자녀 직업에 대한 대응분석 결과



2. 경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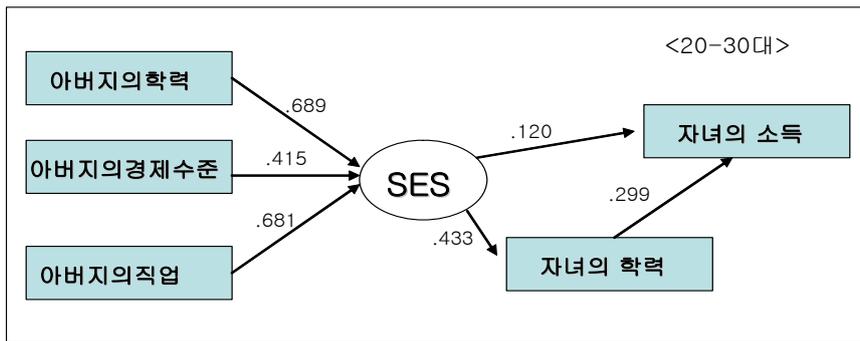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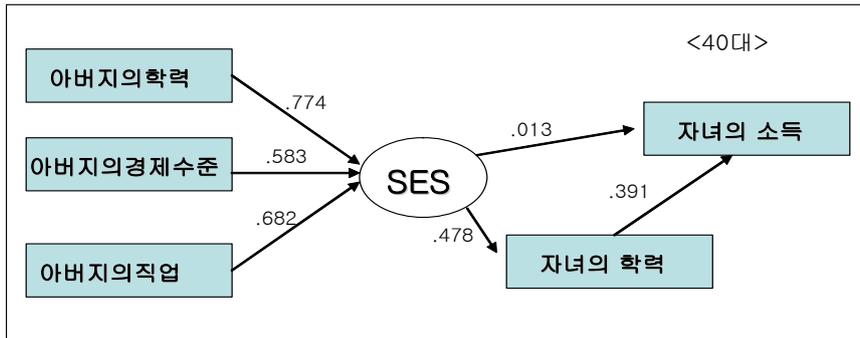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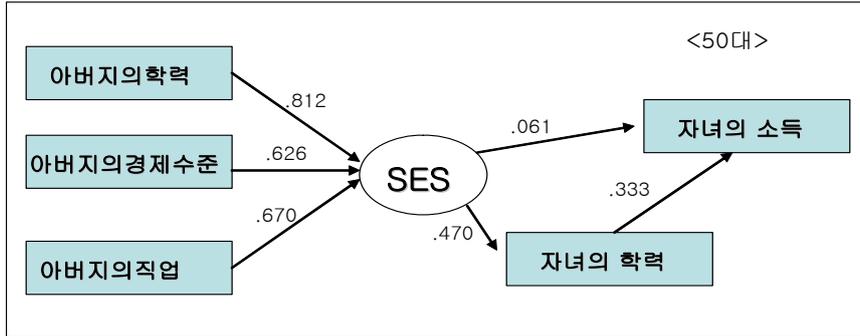
자녀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의 세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코호트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6-5]와 <표 6-5>에 제시되어 있다⁴⁹⁾.

[그림 6-5] 경로분석 결과(표준화된 계수)



49)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지수로는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이 있다. 분석된 네 가지 모형에 대해 적합도를 판정한 결과 네 모형 모두 적합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계속)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학력, 경제수준, 직업은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 학력의 설명력은 0.801(전체)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설명력은 50대의 경우 0.812, 40대 0.774, 20~30대 0.689로 젊은 세대로 올수록 차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는 아버지의 직업으로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0.627에 이른다. 또한 직업의 경우 50대에서 0.670, 40대에서 0.682, 20~30대에서 0.6981로 세대에 따라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데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설명력은 0.548로 가장 낮으며, 학력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로 올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 교육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497이다. 연령 코호트별로 50대 0.470, 40대 0.478, 20~30대 0.433으로 최근 세대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기에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부모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경우 그 자녀 역시 높은 교육수준을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그 자녀 역시 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매우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교육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표 6-5〉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1) SES의 요인설명 효과

		전체	50대	40대	20-30대
SES요인	부의학력	0.801	0.812	0.774	0.689
	부의경제수준	0.548	0.626	0.583	0.415
	부의직업	0.627	0.670	0.682	0.681

(2)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SES가 자녀 학력에 미치는 영향

	전체	50대	40대	20-30대
자녀학력에 미치는 효과	0.497	0.470	0.478	0.433

(3) 연령 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SES와 교육이 일차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체	50대	40대	20-30대
SES효과	직접효과(a)	0.059	0.061	0.013	0.120
	간접효과(b)	0.170	0.156	0.187	0.130
	총효과(a+b)	0.230	0.218	0.200	0.250
교육효과	순효과(c-b)	0.172	0.177	0.204	0.169
	총효과(c)	0.342	0.333	0.391	0.299

마지막으로 〈표 6-5〉의 (3)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효과,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로 해서 미치는 간접효과⁵⁰⁾, 그리고 교육의 순효과와 총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05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을 경유해서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17로 직접효과보다 높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50) 간접효과는 (SES가 자녀학력에 미치는 효과)*(자녀학력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된다.

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0.23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순효과⁵¹⁾는 0.172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 소득에 미친 영향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령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는 0.061이고 교육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0.156으로 총효과는 0.21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이 소득에 미친 순효과는 0.177이었다. 40대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미친 효과 0.013, 간접효과 0.187로 총효과는 0.2였다. 40대는 50대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가 감소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는 증가하였다. 총효과 역시 0.018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교육의 순효과는 0.204로 50대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적인 효과가 0.120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간접 효과는 0.130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총효과는 0.25로 40대와 50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교육의 순효과는 0.169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약간 낮았다.

요컨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으로 직접 이전되기보다는 -유전적 요인 등을 통제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적 성취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 40대에서 가장 성취지향적 사회의 성격이 강한 반면, 20~30대로 올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교육의 순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들어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대학교육만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어떤 대학을 나와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

51)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순효과를 (자녀의 학력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총효과)-(SES의 간접효과)로 보았다. 즉,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였다. 이는 순수한 능력에 의한 성취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는 앞서 대응분석에서 학력이나 소득보다 직업의 대응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정도를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그리고 직업에 대한 대응(일치도)분석을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부모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부모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부모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부모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부모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부모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도 적어 계급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위변수인 직업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 간에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응분석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사회의 계층(계급)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으며 폐쇄사회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효과는 떨어졌다. 이와 같이, 최근 연령대에서 교육의 소득효과가 떨어진 것은 고학력화로 인해 대학의 프리미엄이 떨어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최근 80% 이상의 고졸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같이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하여 대학 졸업자 간에도 졸업 후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직접적인 소득효과는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7장 결론 및 함의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교육이 빈곤과 불평등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 불평등 구조와 빈곤의 대물림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이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수준의 상승은 개인의 빈곤 위험을 낮추는데 지속적으로 크게 기여하여 왔다. 대졸 가구가 빈곤에 빠질 확률은 중졸이하 가구의 약 1/6, 고졸이하 가구의 약 1/4, 전문대졸 가구의 약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인이 고등교육 졸업장을 취득했다는 것은 평생 동안 빈곤에 빠질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이 교육수준의 상승은 분명 개인(가구) 차원에서 빈곤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상대적인 의미로 제한된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건 전체 사회의 빈곤위험율이 증가하여 고학력화의 효과를 상쇄하는 한,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전체 사회의 빈곤율이 감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오히려 고학력화로 인하여 상대적 저학력자의 빈곤위험율이 훨씬 더 커져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85년에서 2006년 사이 전체 빈곤율은 2.4%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대졸이상 가구의 빈곤율은 2.3%p, 전문대졸이하 가구의 빈곤율은 5.3%p, 고졸이하 가구의 빈곤율은 9.0%p, 중졸이하 가구의 빈곤율은 6.5%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졸이하 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고학력자 일자리의 하향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고학력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한된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고학력자들이 기존에 저학력자들의 '괜찮은' 일자리로 몰리면서 저학력자들이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의 상승은 개인 차원에서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회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저학력자의 빈곤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교육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는 빈곤과는 달리 개인(가구)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상대적 개념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불평등 관련해서, 첫째,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득에 대한 교육의 설명력이 떨어졌으며, 대신 연령, 성, 직종 등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교육 수준→소득 수준이라는 단선적인 도식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소득불평등을 학력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때, 학력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9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졸이상 가구의 집단내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졸자의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내부적인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2000년까지 교육분포의 변화, 즉 고학력화는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에는 오히려 교육분포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006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학력집단간 불평등, 학력집단내 불평등, 그리고 학력분포의 변화가 모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함으로써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가구소득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수능 평균 점수분포와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의 경우 소득계층별 분포가 일반적 예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육구소득비 등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다만, 지역과 학교의 학부모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되는 고교의 선택과정 변수들이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가구소득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역, 계열, 학교 선택 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특목고와 실업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수 중학생 중 높은 비율이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한편, 가정형편이나 성적이 좋지 않은 중학생 중 높은 비율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현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할 때의 결과는 극히 단편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부유한 부모를 둔 청소년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면 이는 특목고에 갈 수 있을 만큼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가난한 부모를 둔 청소년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면 이는 평균 이상으로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재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계층(계급)의 대물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 일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학력이며 부유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자녀 역시 고학력, 상위계층,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학력이고 가난하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저학력, 하위

계층,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이 제한적이며, 특히 극단에서 극단으로 상승이동 또는 하강이동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경제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서는 교육의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20~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적인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들어 단순히 대학 졸업장만으로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직접적으로든 혹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자녀는 높은 교육수준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5장과 6장).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아진다(3장). 이를 뒤집어 말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를 둔 자녀는 교육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높아진다. 결국,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 자녀의 낮은 교육수준 → 자녀의 낮은 소득과 같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능주의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IQ와 같은 유전적 요인의 결과이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IQ와 같은 인지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한에 있어 이러한 이의를 100%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의 차이, 학교 선택의 차이, 사회문

화적 자본의 차이 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부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높은 사부담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사부담률(대학 등록금 등)과 사교육비는 OECD 국가들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빈곤층의 자녀들이—학습분위기나 사회문화적 자본은 차지하고라도—정규적인 교육을 통해 비싼 사교육을 병행하는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라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들이 그 경쟁을 통과하여 대학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1년에 1천만원을 호가하는 등록금을 부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교육 정상화만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교육·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역차별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조치로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 교육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즉,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습, 파견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소도시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최신 교육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역차별 정책으로는 대학선발에 있어서 저소득층,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 불이익집단(disadvantaged)에 대한 특별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입학에 그치지 않고 재학 기간 중 장학금 혜택 등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제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교육의 성취도가 결정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은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4장). 혹자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죄를 교육에게 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그르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교육은 경제적으로 생산성 혹은 생산 잠재력(훈련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이며, 오히려 그 차이에 따라 임금이나 소득에 차이를 두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것이 기능주의자나 제도주의자의 관점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의 결과보다도 훨씬 더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므로 그 원죄를 교육에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념형적인 성취사회의 모습은 교육이 공공재(public goods)화되어 있고,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매우 다차원적이고 다양하며, 교육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즉, 교육은 매우 사유재(private goods)화되어 있고,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천편일률적이며, 교육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한 세대 내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폐쇄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이 더 진전된다면 교육은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맑시스트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되었다. 또한, 교육, 소득수준, 직업 등의 세대간 전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사회 불평등의 원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회, 과정, 결과를 포함하는) 교육의 포괄적인 평등성이 확보될수록, 그리고 교육성취를 나타내는 지표가 다원화될수록 사회적 평등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반대로 사회적 평등성이 확보될수록 다음 세대의 교육은 더욱 평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교육 평등과 사회 평등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2003. 10.) “불평등해소정책의 쟁점과 가능성”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개원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구봉수 (1984) “교육의 기회균등과 전망”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Vol.21.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김경근 (1993) “사회적 평등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모색: 교육 평등의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2), pp.5-23.
- 김경근 (2005) “한국사회의 교육격차”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방안』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 자료집.
- 김경미 (2001) “보통교육정책의 전개와 그 평가” 『한국교육사학』 23(2): 37-55.
- 김광익 외 (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기석 (2004) “공교육과 불평등의 대물림: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연구의 검토” 『교육비평』 (2004, 겨울), 제17호.
- 김기현 외 (2007) “교육정책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 김민환 (1987) “학교교육의 평등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의 쟁점과 한계” 『학생생활연구』 (서원대학교) Vol.5.
- 김병성 (2003) “우등생과 열등생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의 의

- 미·배경·인과론” 『교육개발』 Vol.30, No.3, pp.20-25.
- 김병성·정영애·이인효 (1982) 『학교교육과 사회적 성취』 한국교육개발원.
- 김안나 (2003) “대학입학 수능 성적 분포의 변화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
- 김영석 (2006)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양극화 담론의 지형” 『교육양극화의 현황과 대처방안』 한국교육네트웍 학술대회.
- 김영화 (1990) “고등교육 팽창의 결과: 고등교육 기회 획득에 미치는 출신 배경의 영향 추이(1967-1984)” 『교육학연구』 28(3), pp.65-81.
- 김영화 (1993) 『한국의 교육 불평등: 고등교육 팽창의 과정과 결과』 교육과학사.
- 김영화 (2002) “교육 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2002년 봄(제7호).
- 김영화·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Vol.37, No.1, pp.155-172.
- 김영화·박인종 (1990) 『한국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체제의 대응: 한국산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회·최재선·이명근, "해방 이후 반세기의 현장 자료분석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치역학적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3(1): 21-92.
- 김종엽 (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가을호(통권 제 59호).
- 남춘호 (2004) “교육과 불평등” 방하남 외 (200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아카데미.
- 노동부 노동통계팀 (2007) 『2006년 임금구조실태분석』 노동부.
- 류방란 (2006) 『한국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김성식 (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거용 (1995) “김영삼 정권 교육개혁의 문제점” 『경제와 사회』 제28호.
- 박성재 (2006) 『고학력자의 임금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제2호.
- 방하남 외 (200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아카데미.
- 방하남·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vol.35 no.3.
- 방하남·김기현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vol.37 no.4.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집 4호, pp.193~222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 『제3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 석태중 (1998) “교육 불평등의 사회학” 『상지대학교 논문집』 Vol.19.
- 성열관·하봉운(2006)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확대 방안 및 법안” 『교육양극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서울교육혁신연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교육이론정책학회.
- 손준중 (1995)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찰: J. Rawls와 R. Nozick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7집, pp.161-178.
- 신광영 (1994) “세대간 계급이동” 『경제와 사회』 통권 제23호.
- 신광영 (2005)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안관수 (1996) “학교에서의 교육기회의 보상적 평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교육사회학연구』 Vol.6 No.2, pp.1-12.
- 안치민 (1988) “사회이동과 사회불평등체계의 특성” 『사회와 문화』 Vol.4, No.1, pp.35-57.
- 양재진 (2005) 『지식·정보화 사회와 교육 불평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양정호 (2006) “입시정책에서 본 교육격차” 『교육격차, 무엇이 해범인가』 제32차 KEDI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양정호 (2007)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 중2부터 대학 1학년까지 사교육 경험 중단분석”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염수균 (2004) “드위킨의 자원의 평등론” 『범한철학』 Vol.35.
- 오성삼·구병두. (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4), 99-122.
- 오욱환 (1990) 『한국교육과 불평등: 교육사회학 논문목음 I』 교육과학사.
- 오욱환 (2003)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 오호영 (2006).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원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 (2006. 10.)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왕재선·박원수 (2006) “교육평등논쟁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6. 4.), pp.737-752.
- 우천식 편 (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유한구 (2006)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종래 (1992) “교육 불평등의 교육사회학적 요인과 교육과정” 『순천향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Vol. 11, pp. 235-249.
- 윤현섭 (1976) “교육기회균등의 개념적 정의: 호만의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3권 1호.

- 이규환 (1996) “교육개혁에 있어서의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한국교육연구』 제31권 제1호, pp. 7-57.
- 이기중 (2007)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성 검증”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 · 김주섭 · 안주엽 · 정진호 · 남기곤 · 류장수 · 장수명 · 최강식 (2005)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준구 (1990)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이철호 (2005)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대안”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방안』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 자료집.
- 이혜영 (2007)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vol.36 no.4.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vol.34 no.4.
- 장수명 (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Vol.2 No.1, pp.47-79.
- 장수명 (2006) “교육재정 정책과 교육격차” 『교육격차, 무엇이 해법인가』 제32차 KEDI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장수명 (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Vol. 33 No.2 pp.75-107.
- 정인수 · 김기민 (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조수환 (1996)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 『교육철학』 제14집, pp.273-288.
- 조우현 (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제27

권(2) pp.67-89

- 최병두 (2005)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생태적 정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4호.
- 최수태 (2007) “불평등 악화를 완화하는 교육정책”
- 최형재 (2007) “사교육의 대학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현대경제연구원 (2007.04)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요원인: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한국경제주평』 .
-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 황경식 (1984) “J.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철학』 Vol.21 No.1.

Andersen, C. A. (1961) "A Skeptical Note on Education and Mobility" in Halsey, A. H. and Andersen, C. A. Education, Economy &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Becker, G. S. and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39.

Blau, P. and Duncan, D. C. (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Boudon, Raymond (1974)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2002)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6 No.3) pp.3-30.

Brooks-Gunn, J. and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Clogg, C.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Group Differences," in

- Rumsey, G.W.(ed.) *Readings in Population Research Methodology* vol.1.
- Conger, R. D., Conger, K. J., and Elder, G.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G.J. Duncan and J. Brooks-Gunn (E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288-310.
- d'Addio, Anna Cristina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sadvantage: Mobility or Immobility Across Genera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for OECD Countries*. OECD.
- Das Gupta, P. (1978) "A General Method of Decomposing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into Several Components" *Demography* vol.15 no.1, pp.99-109.
- Duncan, G. and Brooks-Gunn, J. (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Yeung, W. J., Brooks-Gunn, J., and Smith, J. R. (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406-423.
- Dworkin, Ronald (2000)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Fairlie, R. (1999) "The Absence of the African American Owned Busines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7 no.1.
- Fairlie, R. (2005)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0. pp.305-316.
- Gomulka, Joanna & Stern, Nicholas. (1990) "The Employment of

- Married Women in the United Kingdom 1970-83," *Economica*,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57 no.226. pp. 171-99.
- Haveman, R. and Wolfe, B. (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aveman, R. and Wolfe, B.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s: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1829-1878.
- Hook, J., Brown, S.L. and Kwenda, M.N. (2004) "A Decomposition of Trends in Poverty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Demography* vol 41 no.4. pp.649-670.
- Ishikura, M. (2007) "Globaliz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creasing non-regular employment and growing income disparity in Japan,"
- Kitagawa, E.M.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50. pp.1168-94.
- Kitagawa, E.M. (1964) "Standardized Comparisons in Population Research" *Demography* vol.1. no.1 pp.298-311
- Klebanov, P.K., Brooks-Gunn, J., & Duncan, G. (1994) "Does neighborhood and family affect mothers' parenting,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441-455.
- Mayer, S.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Press.
- Mayer, S. (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Income on Children's Outcomes*, New Zealand: Knowledge Management Group,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McLanahan, S. (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35-48.
- McLoyd, V.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cLoyd, V.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uller, Walter (2007) "Educational Inequality in Europe and Its Change in the 20th Century"
- Oaxaca, Ronald.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October), pp.693-709.
- OECD (2007) *Education at a Glance*, OECD.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 OECD (2006) *Education at a Glance*, OECD.
- Picot, G. and Myles, J. (1996) "Social Transfers,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Low Income Among Children." *Canadian Public Policy*. vol.22 no.3.
- Rank, M.R. and Hirschl, T.A. (2001) "The Occurrence of Poverty across

the Life Cycle: Evidence from the PSID."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20 no.4, pp.737-755.

Sen, Amartya (1995) *Inequality reexamined*, Harvard University Press.

Smith, J.R., Brooks-Gunn, J., and Klebanov, P.K. (1997) "Consequences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239-287.

Swell, W. H. and Hauser, R. M.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New York: Academic Press.

